

연구보고서 2017-32-02

통일 대비 복지욕구 조사



소성규 · 박희진 · 장인숙 · 정병화 · 정은미

【책임연구자】

소성규 대진대학교 교수

【주요 저서】

가족정책법

동방문화사(초판), 2016.

법여성학강의

동방문화사(제6판), 2014.

【공동연구진】

박희진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연구위원

장인숙 남북하나재단 선임연구원

정병화 대진대학교 교수

정은미 서울대학교 기초연구원 강사

연구보고서 2017-32-02

통일 대비 복지육구 조사

발 행 일 2017년 12월

저 자 소 성 규

발 행 인 김 상 호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층~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 쇄 처 고려씨앤피

가 격 7,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ISBN 978-89-6827-492-3 93330

제출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연구용역 「통일 대비 복지욕구 조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목 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문제 제기과 연구 목적	11
제2절 연구 내용	14
제3절 연구 방법	17
제1부 국내 조사	19
제2장 조사 개요	21
제1절 조사 개요	23
제2절 응답자 분포의 특성	24
제3장 조사 결과 분석	47
제1절 기본생활욕구	49
제2절 근로욕구	81
제3절 소득보장욕구	96
제4절 의료보장욕구	106
제5절 소결	121
제2부 해외 조사	125

제4장 조사 개요 127

제1절 조사 개요 129

제2절 응답자 분포의 특성 132

제5장 조사 결과 분석 137

제1절 기본욕구 139

제2절 소득욕구 141

제3절 의료보장욕구 154

제4절 생활보장욕구 157

제5절 소결 159

제6장 결론 163

제1절 연구 요약 165

제2절 정책적 함의 173

참고문헌 177

부록 181

부록1. 국내 조사 설문지 181

부록2. 해외 조사 설문지 195

표 목차

〈표 2-1〉 성별-연령별 분포	26
〈표 2-2〉 탈북-입국 시기 분포	27
〈표 2-3〉 탈북-입국 소요 기간	27
〈표 2-4〉 탈북 과정에 경유한 국가(복수 응답)	28
〈표 2-5〉 탈북 동기	29
〈표 2-6〉 탈북 동기-탈북 시기 교차분석	29
〈표 2-7〉 탈북 동기-성별 교차분석	30
〈표 2-8〉 탈북 동기	31
〈표 2-9〉 탈북 전 최종 거주지	32
〈표 2-10〉 성별 탈북 전 최종 거주지	32
〈표 2-11〉 북한에서의 최종 학력-성별 교차분석	33
〈표 2-12〉 모집단의 북한에서의 최종 학력(2017년 6월 기준)	34
〈표 2-13〉 공식 직업	35
〈표 2-14〉 모집단의 북한에서의 직업 현황(2017년 6월 기준)	35
〈표 2-15〉 공식 소득 수준	36
〈표 2-16〉 북한 시장의 쌀 가격	37
〈표 2-17〉 비공식 소득 수준	39
〈표 2-18〉 공식·비공식 소득 평균	39
〈표 2-19〉 비공식 직업(복수 응답)	40
〈표 2-20〉 당원 출신 응답자의 비공식 직업(복수 응답)	41
〈표 2-21〉 8.3 노동자로 일한 기간	42
〈표 2-22〉 경제 수준	43
〈표 2-23〉 북한에서의 생활 수준	44
〈표 2-24〉 경제 수준-공식 소득 수준 교차분석	44
〈표 2-25〉 비공식 소득 수준-경제 수준 교차분석	45
〈표 2-26〉 혼인 상태-성별 비교	45

〈표 2-27〉 혼인 상태	46
〈표 2-28〉 가족 수	46
〈표 3-1〉 식생활-일주일 식량(개방형 서술)	51
〈표 3-2〉 식생활-일주일 식량(구간별)	52
〈표 3-3〉 식생활-일주일 식량(구간별)-연령별 교차분석	53
〈표 3-4〉 식생활-고기·과일·다과	54
〈표 3-5〉 식생활-고기-경제적 수준 간 교차분석	55
〈표 3-6〉 식생활-과일-경제적 수준 간 교차분석	55
〈표 3-7〉 식생활-다과-경제적 수준 간 교차분석	56
〈표 3-8〉 식생활-외식-연령별 교차분석	57
〈표 3-9〉 주거생활-주택 유형-가족 수(명) 교차분석	60
〈표 3-10〉 주거생활-방 개수-가족 수(명) 교차분석	61
〈표 3-11〉 주거생활-주택 선택 시 고려 사항	62
〈표 3-12〉 주거생활-주택 선택 시 고려 사항-연령별 순위	63
〈표 3-13〉 주거생활-생활용품	65
〈표 3-14〉 주거생활-생활용품-경제적 수준별 교차분석	66
〈표 3-15〉 영역별 결핍 문항과 필요 여부-생활용품	66
〈표 3-16〉 여가생활-여가와 여행	68
〈표 3-17〉 문화와 여가 관련 박탈지표	69
〈표 3-18〉 자녀교육-고등교육과 사교육	71
〈표 3-19〉 자녀교육-고등교육·사교육-교육 수준 간 교차분석	72
〈표 3-20〉 자녀교육-고등교육·사교육-직업 간 교차분석	74
〈표 3-21〉 사회관계-친구 필요성	76
〈표 3-22〉 사회관계-친구 필요성-연령별 교차분석	77
〈표 3-23〉 사회관계-결혼-연령별 교차분석	78
〈표 3-24〉 사회이동-거주지 선택	80
〈표 3-25〉 희망하는 하루 평균 근로시간	83
〈표 3-26〉 1일 8시간 근로에 대한 견해	84

〈표 3-27〉 초과근무에 대한 견해	85
〈표 3-28〉 비공식 직업별 초과근무에 대한 견해	86
〈표 3-29〉 국가 일자리 제공 의무에 대한 견해	87
〈표 3-30〉 직업교육 및 재교육 필요성	89
〈표 3-31〉 직업교육 및 재교육 참여	89
〈표 3-32〉 사회적 약자의 취업 우대에 대한 견해	91
〈표 3-33〉 연령별 사회적 약자(영예군인)의 취업 우대에 대한 견해	91
〈표 3-34〉 교육 수준별 사회적 약자(유자녀 가족)의 취업 우대에 대한 견해	92
〈표 3-35〉 경제활동 시 미취학 자녀 보육 형태	93
〈표 3-36〉 사회보장비 의무 징수에 대한 견해	95
〈표 3-37〉 비공식 직업별 사회보장비 의무 징수에 대한 견해	96
〈표 3-38〉 통일 후 북한지역 거주 시 필요한 가구(4인 가족)의 월평균 생활비	99
〈표 3-39〉 통일 후 북한 지역 거주 시 필요한 월평균 급여(임금)	100
〈표 3-40〉 공식 소득별 통일 후 북한 지역 거주 시 필요한 월평균 급여(임금)	101
〈표 3-41〉 저축·공적연금·사적 보험 필요성	102
〈표 3-42〉 대체소득 대비 필요성에 대한 남북한 주민 비교	103
〈표 3-43〉 실직자 기초생계 보장 의무에 대한 견해	104
〈표 3-44〉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견해	106
〈표 3-45〉 국가의료보험-성별 교차분석	108
〈표 3-46〉 국가의료보험-연령별 교차분석	108
〈표 3-47〉 국가의료보험-경제 수준별 교차분석	109
〈표 3-48〉 국가의료보험-결혼 상태별 교차분석	110
〈표 3-49〉 의료보장 세금 추가 납부 의사-성별 교차분석	110
〈표 3-50〉 의료보장 세금 추가 납부 의사-연령별 교차분석	111
〈표 3-51〉 의료보장 세금 추가 납부 의사-경제 수준별 교차분석	111
〈표 3-52〉 의료보장 세금 추가 납부 -국가의료보험 욕구 교차분석	112
〈표 3-53〉 의료비 부담 주체에 대한 견해-성별 교차분석	113
〈표 3-54〉 의료비 부담 주체에 대한 견해-연령별 교차분석	114

〈표 3-55〉 의료비 부담 주체에 대한 견해-경제 수준별 교차분석	114
〈표 3-56〉 정기검진의 필요성-성별 교차분석	115
〈표 3-57〉 정기검진의 필요성-연령별 교차분석	115
〈표 3-58〉 정기검진의 필요성-경제 수준별 교차분석	116
〈표 3-59〉 진료병원-성별 교차분석	118
〈표 3-60〉 진료병원-연령별 교차분석	118
〈표 3-61〉 진료병원-경제 수준별 교차분석	118
〈표 3-62〉 치매환자의 돌봄 주체	119
〈표 3-63〉 치매환자 돌봄 주체-성별 교차분석	120
〈표 3-64〉 치매환자 돌봄 주체-연령대 교차분석	120
〈표 3-65〉 치매환자 돌봄 주체-경제 수준별 교차분석	121
〈표 4-1〉 성별 분포	132
〈표 4-2〉 연령별 분포	132
〈표 4-3〉 교육 수준	133
〈표 4-4〉 경제 수준	133
〈표 4-5〉 동반 탈북자 유무	135
〈표 4-6〉 동반 탈북자 - 배우자	135
〈표 4-7〉 동반 탈북자 - 부모	136
〈표 4-8〉 동반 탈북자 - 자녀	136
〈표 4-9〉 동반 탈북자 - 형제자매	136
〈표 4-10〉 동반 탈북자 - 친구	136
〈표 5-1〉 식생활-일주일 식량	140
〈표 5-2〉 식생활-일주일 식량	140
〈표 5-3〉 희망 근로시간	142
〈표 5-4〉 8시간 노동시간 준수 여부	142
〈표 5-5〉 일자리 제공(국가가 원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	144
〈표 5-6〉 초과근무	145
〈표 5-7〉 직업교육의 필요성	146

〈표 5-8〉 직업교육 참여 의사	147
〈표 5-9〉 근로 시 자녀의 보육문제	148
〈표 5-10〉 사회보장비 징수	149
〈표 5-11〉 월평균 생활비	150
〈표 5-12〉 월평균 생활비 - 범위	151
〈표 5-13〉 월평균 월급	152
〈표 5-14〉 월평균 월급 - 범위	152
〈표 5-15〉 연금 가입	154
〈표 5-16〉 국가 기초생계보장	154
〈표 5-17〉 의료비용 부담	155
〈표 5-18〉 치매환자 요양	156
〈표 5-19〉 국가의료보험	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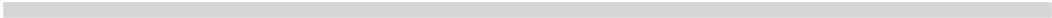


그림 목차

[그림 2-1]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25

[그림 2-2] 장사 경험 유무 38

Abstract <<

A research on the welfare needs of reunified Korea

Project Head · So, Sungkyu

This research scrutinizes the current welfare condition in North Korea and predicts welfare demands of the reunified Korea. In order to do so, this investigation analyzes domestic cases of 100 North Korean refugees, who fled to South Korea from 2015 to 2016. Also, 30 experts from China, who have a first-hand experience of interviewing North Korean people,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Furthermore, this study categorizes the welfare needs into four areas, namely basic living, labor, income security and healthcare needs and excludes respondents' personal information.

First, the result of this investigation illustrates that for basic living needs, North Koreans show very high desire for food, housing and education of their children, while relatively low demands for leisure activities. Secondly, in terms of labor needs, the people are receptive to not only eight hours of work but also working extra hours. Moreover, they understand the necessity of reeducation after unification and are committed to partake vocational education. Thirdly, regarding income se-

Co-Researchers: Park, Heejin · Jang, Insook · Chung, Byunghwa · Jeong, Eunmee

2 통일 대비 복지욕구 조사

curity, they expect higher income in the unified Korean society but not as high as the income level of South Korea. Lastly, with respect to healthcare needs, North Koreans strongly show the desire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highly prefer to pay more taxes for better medical services.

The respondents holistically show high levels of demand in all areas of welfare and the reasons might pertain to insufficient social services they were provided with. This result implies a surge of welfare needs from people of the North after unification and is indicative of their high demands of social services.

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및 중국의 북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간접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 주민의 사회복지 욕구 수준에 대한 정보를 축적함으로써 사회복지 부문 관련 남북한 교류 협력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학문적·정책적 기여를 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조사는 국내 사례의 경우 2015~2016년 북한 지역을 탈출하여 남한에 입국해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유효 표본 수는 100명이다. 해외 사례는 중국에서 북한 주민을 직접 면접조사한 경험이 있는 중국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내용은 북한 주민의 생활 영역별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빈곤과 불평등의 특성 및 양상을 살피기 위해 응답자 기본 정보를 제외한 총 4개의 영역으로 범주화하여 기본생활욕구, 근로욕구, 소득보장욕구, 의료보장욕구를 조사하였다.

2. 주요 연구 결과

응답자 정보를 제외한 4개 영역의 복지욕구에 관한 총 60개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 조사방법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기본생활욕구는 식생활, 주거생활, 여가생활, 자녀교육, 사회관계, 통일 후 거주지 선택의 항목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연구 조사 결과,

4 통일 대비 복지육구 조사

식생활 부문에서 북한 주민들은 주식과 부식물(고기 및 과일, 다과)에 대해 높은 육구 수준을 나타냈다. 4인 가족의 일주일 식량의 평균치는 14.2kg, 고기는 주 3회, 과일과 다과는 매일 섭취하고 싶다고 답했다.

주거생활부문에서는 아파트보다는 사적 생활이 보장되는 단독주택 유형을 선호하고, 주택을 구입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난방과 위생시설을 1순위로 택하였다.

여가생활에 대한 육구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여가를 즐길만한 삶의 여유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하며 일상적인 여가생활(극장, 경기장, 유흥장, 낚시 등)보다는 간헐적이어도 자유로운 여행(1년에 1번 이상, 2~3일간)을 더 필요로 하였다.

기본생활육구가 충족되고 있지 못한 가운데 자녀교육에 대해서는 높은 육구를 나타냈다. 자녀교육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계층 간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믿음은 모든 연령대와 직업군, 소득 수준에서 동일하게 교육육구로 나타났다.

사회관계에 관해서는 세대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과거의 공동체적 관계를 지향한 반면 나이가 적을수록 집단보다는 개인적 관계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사회관계 중 결혼에 대한 육구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고 결혼 제도에 관한 신뢰도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기본생활육구 중 특징적인 점은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의 거주지 선택 요인이 고향과 가족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통일 이후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에 의해 북에서 남으로 인구의 이동현상이 초래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본 조사 결과 다수의 응답자는 고향, 가족, 친척이라는 가족 공동체와 부모, 형제, 자녀 등 혈연관계 중심의 삶을 지향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근로육구는 노동시간, 근로의지, 사회적 약자의 우선 채용, 보육 문제, 사회보장비 징수에 관한 항목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연구 조사 결과,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통일 후에 적정 노동시간으로 '8시간'을 선택하였으며, 추가 소득의 필요성 때문에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매우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통일 후 재교육과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참여 의지도 매우 높았다.

경제활동을 위해 대부분의 여성들은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기를 원하고 있으며, 통일을 대비하여 사회보장비 의무 징수에 대한 수용력은 높은 편이나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직업의 차이에 따라 수용태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소득보장육구는 소득에 대한 기대 수준, 대체소득의 필요성, 사회보장정책에 관한 견해의 문항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 조사 결과, 북한 주민은 통일된 사회에서 더 높은 소득이 보장되기를 기대하나 남한 사회보다 더 높은 소득 수준을 바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후 북한 지역에서 거주할 때 필요한 월평균 가구 소득의 평균값은 약 1200 달러, 직장에서 받고자 하는 월평균 1인당 급여(임금)수준은 평균 약 930 달러로 각각 나타났다. 대체소득 대비에 대한 필요성에는 대체로 높은 공감대를 보였으며 필요성을 공감하는 수준은 '저축<공적 연금>사적 보험' 순으로 나타났다. 남한 주민에 비해 저축에 대한 선호가 높은 반면 사적 보험에 대해서는 이해의 부족과 낮은 신뢰감으로 필요성이 낮게 나타났다. 사회보장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높은 욕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가가 실직자들의 기초생계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낮은 지지도를 보였다.

넷째, 마지막으로 의료보장육구는 국가의료보장에 대한 기대,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 가입 희망 여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위한 세금 추가 납부 의사, 의료비 부담, 정기적 건강검진 필요성, 진료 희망 병원의 형태, 치매환자 간병 등에 대한 욕구로 범주화하여 조사하였다. 연구 조사 결과, 북한 주민은 국가의료보험에 대해 매우 강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국가의료보장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집단은 여성, 50대, 경제 수준 중층으로 나타났다.

국가로부터 더 많은 의료보장을 받기 위해 세금을 낼 의사가 있다는 긍정적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추가 납부 의사는 경제 수준 상층보다는 중하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의료비는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거나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정기 검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병이 났을 때 진료를 받고 싶은 병원으로는 연령, 성별과 상관없이 평양 중앙병원이 가장 높게 나타나, 북한 주민들의 평양 중앙병원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확인할 수 있다. 치매환자의 돌봄 방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요양전문시설에서 돌보고 싶다고 응답했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 조사는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 지역의 복지 수준을 파악하고 통일 이후 복지 수요의 예측을 위해 실시되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기초조사 연구로서 적지 않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실태조사와는 다른 결과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제도와 실태에는 매우 큰 간극이 존재하며, 북한에서 명시적으로 강조하는 제도와 주민생활의 실재를 구분하여 북한 주민의 복지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제도의 폐기, 수정, 활

용 및 지속이라는 관점에서 남북한의 통합적 사회보장제도를 고찰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북한에서 강조하는 제도의 취약성 문제 이외에도 제도 밖의 주민 복지실태를 연속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관한 북한의 복지욕구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집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식주 기본생활에 관한 복지욕구 조사뿐 아니라 노동, 교육, 의료 분야의 심도 있는 복지욕구는 파악조차 더딘 현실이 나타났다.

셋째,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의 복지욕구 분출에도 대비해야 한다. 현재 북한 주민은 기본생활욕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수준의 욕구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사회적 욕망’이 잉태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이것은 북한 주민들이 기대하는 통일이 ‘개인적인 것의 자유로운 보장’, ‘높은 소비 수준의 향상과 보장’을 암시한다. 통일 이후 혼란스러운 사회현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욕구 수준에 대한 밀도 있는 분석과 사회적 교육을 연계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 주민의 복지욕구 중 국가 의존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통일 이후 사회통합의 측면에서도 사전적 준비작업이 요구된다. 본 조사에서는 일자리 제공,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한 보육문제 해결, 실직자의 기초생계 보장, 국가의료보험 및 의료비 부담과 관련된 항목에서 국가가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응답이 90%를 상회하였다. 통일 이후에도 국가의존성이 지속된다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통일 대비 복지욕구 조사에 근거한 남북한 사회복지 분야의 종합적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오늘날 북한 사회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결과 본 조사에서 나타난 분야별 복지욕구의 수준은 응답자 개개인의 경제적 소득 수준에 따라 응답지형이 변화하

고 있으며, 욕구 수준이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까지 응답 분포의 범위가 넓게 나타나고 있다. 특정하여 욕구 수준이 높다거나 낮다고 정의할 수 없으며, 평균값을 도출하여도 평균값 이외의 분포가 넓게 퍼져 있어 개개별의 욕구 수준을 통계로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북한 주민의 복지욕구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기초한 남북한 간의 협력 및 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총체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종합적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이의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주요 용어: 북한이탈주민, 복지실태, 복지욕구, 욕구조사, 주민생활

제 1 장

서론

제1절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제1절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위기는 국가 능력의 약화와 함께 사실상 북한 사회복지 부문에서 강제적 변화를 발생시켰다. 또한 상대적으로 평등한 임금체제와 무료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조직화된 분배체제 등 사회주의 평등의 원리에 입각한 복지 서비스 체계를 붕괴시켰다. 북한의 경제위기는 곧 사회복지의 붕괴와 마비를 가져왔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재차 동반하면서 이른바 복지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두드러지게 진행되었다(임현진, 정영철, 2007).

따라서 특히 북한의 경우 국가가 복지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체제를 유지하며 체제 정당성과 우월성의 주요 근간으로 삼아 왔다. 하지만 이 역시 변화가 불가피하였고 사실상 일부 특권층을 제외한 일반 주민들의 경우 복지의 시장화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2002년 7.1조치와 시장의 합법화 이후 자본주의적 상거래의 등장과 분권화 및 자율성의 강화, 환율의 조정, 임금과 가격체제의 현실화 등 제도적 변화는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사회복지적 삶을 강요하게 만들었다.

특히 그동안 거의 무료로 제공되던 의식주 생활의 개인 부담은 사회 전반의 실리주의 확대와 결합되어 새로운 복지 수요를 창출하였고 국가 또한 복지 혜택을 축소하고 수익자에게 일정하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결국 북한은 개인과 가족이 합당한 부담과 책임을 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과거 국가 독점의 사회보장 서비스를 사실상 포기한 상

태이다(임현진, 정영철, 2007).

한편 그동안 북한의 개혁은 지그재그(ZigZag)식으로 통제와 허용을 반복해 왔으며, 김정은 체제 이후 권력과 시장자본이 결합하면서 불평등한 사회체제를 재생산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의 결과, 노동자들 간 소득 격차와 도시경제와 농촌경제의 격차가 심화되는 등 사회 전반적인 불평등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임현진, 정영철, 2007).

아울러 사회보장 체계가 붕괴된 이후 비사회주의적 요인으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는 생산력의 저하와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조차 어려운 절대적 빈곤 계층도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기존의 출신 성분에 의한 계층 분류와 차별적 사회 대우는 현재, 빈곤의 경제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과 특권 계층의 재생산이 목격되고 있으며,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제반 복지욕구는 저마다 다른 양극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이탈주민 또한 탈북시점과 남한으로의 입국시점, 혹은 북한에서의 생활 조건 및 환경적 특성에 따라 남한에서의 복지욕구가 다르게 나타난다.

북한 사회주의 복지정책의 붕괴 이후 북한 주민들의 새로운 복지욕구에 관한 기초 조사가 전무한 가운데 파생되는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문제, 남북한 복지부문의 협력과 지원과제, 통일 후 복지정책의 통합방안 등 정책적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실태는 물론 복지 결핍의 수준,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 복지욕구 수준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생산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게 제기된다. 또한 주민 생활 각 영역의 복지욕구의 구체적 분석을 통해 욕구 간의 관계를 살피고 빈곤과 불평등의 특성 및 양상을 살펴볼 필요성도 제기된다.

나아가 최근 통일·북한 연구에 있어 통일 이후 남북한의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북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신속한 사회복지 정책이 수

립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추세이다. 그 바탕에는 한반도 통일을 가상, 통일재정 지출비용에서 사회복지 부문의 비중이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되는 견해가 자리한다.

역으로 이는 통일 이후 신속한 사회복지정책 수립을 위해서 북한 지역의 사회복지 실태와 북한 주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다양한 욕구 수준 파악이 전제된다. 다시 말해, 이는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축적을 의미하며, 또한 이는 통일 이전 남북한의 교류협력 단계에서도 일정 부분 필요한 측면도 있다.

나아가, 북한 사회복지에 관한 기존의 문헌 및 질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계량적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지속적 생산이 절실하다. 이는 예측 가능한 통일비용 산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간접적인 접근으로 북한 주민의 복지실태를 조사한 사례는 있으나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 주민의 복지욕구 수준을 파악하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활용성과 기여도가 크다.

요약하면,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 지역의 사회복지 실태 및 북한 주민의 사회복지 욕구 수준에 대한 정보를 축적함으로써 사회복지 부문 관련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고, 나아가 통일 이후 예측 가능한 북한 지역의 사회복지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첫째, 북한 주민의 사회복지 욕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계량적 정보를 수집하고 둘째,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배경 변수를 통해 북한의 사회복지 실태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며 셋째, 남북한 주민의 사회복지 욕구 수준을 비교 분석할 있는 자료로 활용되며 넷째,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도입할 사회복지정책 수립 및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 모델 개발을 위한 실증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절 연구 내용

통일 대비 사회복지 관련 경험 조사를 토대로 한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남한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복지 실태 또는 북한 주민의 사회복지 실태에 대한 부분적 조사라는 한계점을 갖는다. 남북하나재단이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는 남한 사회에서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복지 실태 및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의료 및 복지 실태에 관한 조사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01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북한 사회변동조사』는 2016년에야 북한 주민의 사회복지 실태 및 만족도를 조사하는 항목이 포함되었다.

기존 연구들과 비교하여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험조사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북한에 거주하던 당시에 경험했던 사회복지 실태를 파악하려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상황을 가정하여 북한 지역에서 거주할 때 기대했거나 희망했던 사회복지 욕구 수준을 파악하려는 것에 초점을 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이점이 있다.

본 연구는 통일 대비 사회복지 욕구 수준에 관한 계량적 분석을 위해 정책 대상자의 범주를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하나는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전개하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탈주민을 통한 조사의 한계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중국 거주 북한 관련 전문가의 실태조사를 보충적으로 시도하고자 한다.

또한 통일 대비 복지욕구 조사는 총 4개 영역, 즉 기본생활, 노동, 소득보장, 의료보장에 관한 욕구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범주별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기본생활욕구 조사는 일반적으로 생계욕구에 해당하는 의·식·주 영역으로,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

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욕구인 식량, 주택, 여가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근로욕구 조사는 완전고용제와 국가 임금 지급제를 벗어난 북한 주민들의 노동 시간, 근로 의지, 사회약자에 대한 노동정책,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정책 사회보장비용 등을 조사하였다. 북한은 성별, 나이별, 직업별, 계층별 단위조직에 망라되어 노동의무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외연적으로는 완전 고용상태이나, 실제 북한 주민들은 장사활동 등을 통해 비공식적 화폐수입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고용과 실업의 경계가 모호하고, 공식 임금과 장사활동을 통한 화폐수입의 격차가 크며, 소득 수준의 편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근로욕구 조사는 고용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집단을 판별하고 근로의욕 고취 및 근로여건 마련에 관한 정책적 제안이 가능한 부분이다.

셋째, 소득보장의 욕구는 북한에서 해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기업 단위의 연금이나 퇴직금 등의 규정이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완전히 새롭게 조사되어야 하는 항목이다. 소득에 대한 기대 수준, 대체소득 대비의 필요성,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였다. 북한은 노동시장의 존재가 없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막힌 상태에서 노동력의 동원이 일상화된 상태이다. 따라서 향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주도하는 연금, 고용, 산업재해,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필요성 및 복지욕구 조사를 통해 정책적 판단의 근거가 된다.

넷째, 의료보장의 복지욕구 부문은 국가의 의료보장에 대한 기대,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 가입 희망 여부, 의료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인식, 정기적인 건강검진 필요성, 진료 희망 병원 형태, 치매환자 간병 주체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북한 주민의 건강관리 실태와 건강 검진체계를 조사 파악, 향후 각종 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가능한 부

문이다. 특히 이는 비정치적 분야로 남북한 교류협력 단계에서 필요한 근거가 된다. 사실상 북한의 무상치료제가 붕괴된 현실에서 직업별, 세대별, 지역별 영양과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비균질한 분포와 특성, 만성 질환 및 중증 유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시급한 환자, 영유아 모자보건 등의 예방과 대책 마련에 필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제3절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통일 후 북한에 거주하는 상황을 가정한 설문조사와 함께 북한 주민들을 자주 접한 중국 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수행됐다.

국내 조사의 경우 2015~2016년에 북한을 떠나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조사원 방문에 의한 대면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일치할 수 없지만, 이 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최근에 탈북, 남한에 거주한 기간이 짧아 북한에서의 생활 기억이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 있어 기억의 왜곡이나 오류가 적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국내 조사는 북한의 사회복지 실태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통일 후 북한에 거주하는 상황을 가정한 사회복지 욕구를 측정하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북한의 거주 상태가 반드시 표본 구성에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표집방법은 눈덩이 표집방법을 기본으로 하되 할당표집을 부분적으로 도입하였다. 또한 허위 표본의 참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 및 인적 네트워크 등이 협력하는 조사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수집된 데이터는 코딩화 과정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빈도분석,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중국 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은 북한과 접경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국 내 북한문제 전문가와 민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국내조사와 마찬가지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서면조사와 함께 현지 방문에 의한 대면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코딩화 과정을 거쳐 SPSS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빈도분석,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제 1 부

국내 조사

제2장 조사 개요

제3장 조사 결과 분석

제 2 장

조사 개요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응답자 분포의 특성

제1절 조사 개요

본 연구의 국내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간접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사회복지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사회복지 부문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기초 자료를 생성하고 나아가 통일 후 올바른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조사는 2017년 6월 21일부터 8월 4일까지 실시되었다. 조사 대상은 2015~2016년에 북한 지역을 탈출해 남한에 입국,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으로 유효 표본 수는 100명이다. 최근 연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으로 표본 구성을 제한함으로써 가급적 북한에서 겪었던 경험과 인식에 대한 기억의 변형 또는 왜곡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표집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모집단의 특성으로 인해 표집된 표본에서 함경북도와 양강도 두 지역의 편중 현상이 나타났다. 통일부(2017) 통계에 의하면, 2016년 기준으로 함경북도와 양강도 출신의 비중이 약 76%에 이르러 표집 과정에서 지역적 균형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와 같은 표본 구성의 특성으로 인해 실제 북한 지역 전체와 비교했을 때 일정 정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조사원 방문에 의한 대면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에게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한 조사 결과의 통계 목적 외의 사용 금지와 비밀보장 원칙에 대해 설명을 했으

며,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한 북한이탈주민들에 한해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모든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되었다.

조사 내용은 5개 영역으로 범주화하여 총 60개의 설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개 영역은 기본생활육구, 근로육구, 소득보장육구, 의료보장육구,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정보로 구성된다.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정보를 제외한 모든 설문 문항들은 응답자가 북한에 거주하고 있을 때 남북한이 통일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응답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코딩작업 과정을 거쳐 SPS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해 빈도분석, 교차분석 등이 실시되었다.

제2절 응답자 분포의 특성

1. 성별, 연령별 특징

2017년 6월 기준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는 3만 805명이다. 1997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정착 지원 사업이 본격화된 이래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유입은 증가 추세를 유지하였다. 한 해 입국자 수는 2006년 이후 2011년까지 한 해 2000~3000명이 입국하는 등 급증하였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2년부터 입국 인원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 후 매년 소폭 감소세를 유지해왔다. 2016년 입국 인원이 1418명으로 2015년 1275명 대비 11% 증가하여 최근 5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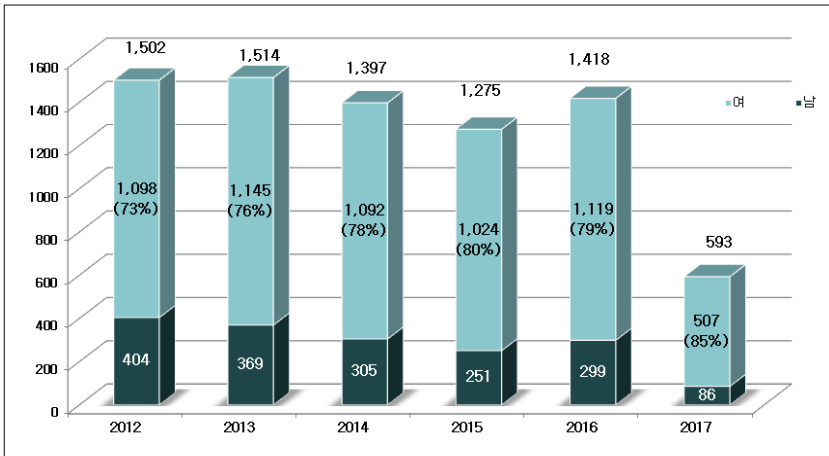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 모집단의 가장 큰 특징은 여성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국내 입국 인원 중 남성은 8891명, 여성은 2만 1914명으로 여성이

71%를 차지한다. 여성이 처음부터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것은 아니다. 1990년대 이전에는 남성 입국자가 압도적이었다. 당시 여성 입국자는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여성 입국자 수는 1990년대 말부터 증가했다. 이는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로 주민들의 자체적 생계유지 활동이 증가하던 때와 일치한다. 국경을 오가는 장사활동이 빈번해지면서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들 또한 급증하였다. 2002년 여성 입국자가 남성을 초월하기 시작하였다. 2000~3000명의 대규모 입국이 이루어지던 2006년부터 여성 입국자 비중은 70%대 중반으로 급등하였으며 2014년 이후부터는 약 80%대를 유지해 왔다. 올 상반기 국내 입국 인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85%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2017년 6월 기준).

[그림 2-1]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단위: 명)



자료: 통일부. (2017). 주요사업 통계(2017년 6월 말 기준).

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에서 2017. 10. 9. 인출.

북한이탈주민 모집단은 여성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지만 본 조사에서는 성별을 변수로 하여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남녀 비중을 비슷하게 구성하였다. 최종 응답자 수는 여성 57%, 남성 43%로 조사 완료했다.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왕성한 사회활동이 기대되는 20~40대가 주 연령층을 형성하고 있다. 30대가 30%로 가장 높았으며, 20대 29%, 40대 25% 순이다. 모집단의 입국 당시 연령대별 분포 결과와 매우 유사한데, 30대가 29%로 가장 많고 20대 28.4%, 40대 17.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2017년 6월 기준). 성별, 연령대 분포는 남성이 30대 37.2%, 40대 27.9%이며, 여성은 20대 33.3%, 30대 24.6%, 40대 28.8%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 성별-연령별 분포

(단위: %)

		연령대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성별	남자	23.3	37.2	27.9	11.6	100.0
	여자	33.3	24.6	22.8	19.3	100.0
전체		29.0	30.0	25.0	16.0	100.0

2. 탈북·입국 연도 및 소요 기간

응답자의 탈북연도와 입국연도를 살펴보면 2016년 탈북이 83%, 2015년 탈북은 17%를 차지한다. 응답자의 75%가 2016년에 탈북한 후 2016년에 입국하였으며, 25%는 2017년에 입국하였다. 2015년 탈북의 경우 국내 입국까지 평균 3.82개월, 2016년엔 2.63개월이 소요되었다. 2015년 대비 2016년 탈북입국 평균 소요 기간이 1개월 이상 줄었다. 이렇듯 입국 기간이 단축된 것은 구간별 분포에서도 확인된다. 2015년에

탈북한 응답자는 ‘5개월’ 소요 응답이 29.4%로 가장 높았다. 반면에 2016년 탈북한 응답자 중 소요 기간이 ‘2개월’이라고 답한 비율이 33.7%로 가장 많았다. 또한 탈북과 입국에 소요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응답자 수를 집계해보면 2015년은 44.1%였으나 2016년에는 72.3%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2-2〉 탈북-입국 시기 분포

(단위: %)

		남한 입국시기			전체
		2015	2016	2017	
탈북시기	2015	58.8	35.3	5.9	100.0
	2016	0	90.4	9.6	100.0
전체		10.0	81.0	9.0	100.0

〈표 2-3〉 탈북-입국 소요 기간

(단위: %)

		입국 소요 기간(개월)								전체
		1개월 미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8개월	
탈북시기	2015	0	17.6	5.9	17.6	17.6	29.4	5.9	5.9	100.0
	2016	1.2	24.1	33.7	13.3	12.0	13.3	1.2	1.2	100.0
전체		1.0	23.0	29.0	14.0	13.0	16.0	2.0	2.0	100.0

본 조사의 경우 최근 북한 주민의 복지욕구에 초점을 맞춰 2015년 이후 탈북과 입국한 직행 탈북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기에 대체로 탈북과 입국에 소요된 기간이 짧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탈북 후 입국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시기별로 점차 짧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생존을 위해 중국으로 탈북해 거주하다 한국의 문화와 정보를 접촉하며 국내로 입국하던 방식과 달리 최근에는 탈북 시기부

터 국내 입국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탈북과 입국하는 추세와 관련된다.

한편 탈북과정에서 경유한 국가를 모두 선택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8%는 중국을 경유했다고 답했다. 이어 라오스 85%, 태국 81% 순으로 나타났다. 3개 국가를 모두 거쳤다고 응답한 사람은 81%로, 이들은 중국-라오스-태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탈북 및 입국 소요기간이 짧아지는 추세와 함께 이들이 입국할 때 경유하는 국가의 동선은 비교적 뚜렷해지는 추세를 볼 수 있다.

〈표 2-4〉 탈북 과정에 경유한 국가(복수 응답)

(단위: 건, %)

	빈도	비율
중국	98	98.0
라오스	85	85.0
미얀마	4	4.0
태국	81	81.0
베트남	31	31.0
기타	1	1.0
합계	300	300.0

3. 탈북 동기

응답자의 탈북 동기는 ‘경제적 문제’가 전체의 37.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정치적 이유’ 22.0%, ‘(탈북한) 가족을 찾아’ 16%, ‘자녀 문제’ 13%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 자녀 문제, 삶의 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였다. 여전히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이 탈북 동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표 2-5〉 탈북 동기

(단위: %)

구분	경제적 문제	정치적 이유	(탈북한) 가족을 찾아	자녀 문제	기타	응답 오류	총계
비율	37.0	22.0	16.0	13.0	9.0	3.0	100.0

최근 특징은 가족을 찾거나 자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탈북이 증가하고 있다. 탈북 시기와 탈북 동기에 대해 교차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탈북 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경제적 문제가 1순위를 차지하였다. 2015년은 경제적 문제 41.2%, 정치적 이유 29.4%, 가족을 찾아서 23.5%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은 경제적 문제 36.1%, 정치적 이유 20.5%, 자녀 문제 15.7%, 가족을 찾아서 14.5%를 차지한다. 경제적 이유가 2015년 41.2%에서 2016년 36.1%로 5.1%포인트 감소하였고, 가족과 자녀 문제가 23.5%에서 30.2%로 6.7%포인트 상승하였다.

〈표 2-6〉 탈북 동기-탈북 시기 교차분석

(단위: %)

		탈북 동기						전체
		경제적 문제	정치적 이유	(탈북한) 가족을 찾아	자녀 문제	기타	응답 오류	
탈북 시기	2015	41.2	29.4	23.5	0.0	5.9	0.0	100.0
	2016	36.1	20.5	14.5	15.7	9.6	3.6	100.0
전체		37.0	22.0	16.0	13.0	9.0	3.0	100.0

탈북 동기의 성별 특징을 살펴보면 남성은 ‘경제적 문제(39.5%)’와 ‘정치적 이유(27.9%)’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여성은 ‘경제적 문제(35.1%)’와 ‘정치적 이유(17.5%)’가 남성에 비해 15%포인트 정도

났다. 반면에 ‘가족을 찾아서(21.1%)’와 ‘자녀 문제(17.5%)’ 등 가족과 연관된 탈북 동기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22.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은 모두 ‘경제적 문제’가 탈북 동기의 1순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2순위에서는 남성은 ‘정치적 이유’, 여성은 ‘가족 관련 문제’로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나 성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2-7〉 탈북 동기-성별 교차분석

(단위: %)

		탈북동기						전체
		경제적 문제	정치적 이유	(탈북한) 가족을 찾아	자녀 문제	기타	응답오류, 중복응답	
성별	남자	39.5	27.9	9.3	7.0	14.0	2.3	100.0
	여자	35.1	17.5	21.1	17.5	5.3	3.5	100.0
전체		37.0	22.0	16.0	13.0	9.0	3.0	100.0

이와 같은 탈북 동기의 조사 결과는 북한이탈주민 모집단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남북하나재단의 『2016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장인숙 등, 2017b)(이하 2016 정착실태조사) 결과와 유사하다. 이 조사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이 탈북 동기 1순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꾸준히 감소 추세다. 한편 탈북 동기 2순위는 2000년대 이전 입국자의 경우 ‘통제가 싫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2000년대 입국자들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 입국한 사람들은 ‘통제가 싫어서’라는 응답률이 높았다. 김정은 집권 이후 통제가 강화된 북한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가족을 찾거나 자녀의 미래를 위한 탈북의 비중이 점차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가족을 따라, 가족을 찾아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 등 가족 요인에 의한 탈북이 44% 이상을 차지한다.

〈표 2-8〉 탈북 동기

(단위: 건, %)

구분	경제적 어려움	돈을 더 벌기 위해	통제가 싫어서	가족을 따라	신변 위험	가족을 찾아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	탈북한 사람의 권유	남한 문화를 접하고
전체	45.2	25.7	25.1	21.5	15.0	11.7	10.9	9.3	6.1
2000년 이전	38.1	14.5	30.9	22	24.3	6.6	13.6	5	9.9
2001 ~ 2010	50.0	25.5	23	22.1	14.5	10.8	8.9	9.5	5.6
2011 ~ 2016	39.6	26.3	27.6	20.8	15.2	13.1	13.2	9.2	6.5

자료: 장인숙 등. (2017b). 2016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 pp. 107-108.

4. 탈북 전 최종 거주지

최종 거주지에 대한 응답은 양강도(혜산 포함)가 56%로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 함경북도(라선·청진 포함)는 31%로 나타났다. 국경지역인 함경북도와 양강도 출신이 전체의 87%를 차지한다. 통일부 집계자료(2017년 6월 말 기준)(통일부, 2017)에도 함경북도 출신이 61.4%, 양강도 출신은 14.7%로 76.1%를 차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탈북 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수월한 함경북도와 양강도 등 국경지역 출신이 모집단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 편중 현상이 본 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표 2-9〉 탈북 전 최종 거주지

(단위: 건, %)

	빈도	비율
평양	3	3.0
남포(평남)	1	1.0
라선(함북)	2	2.0
청진(함북)	5	5.0
혜산(양강도)	26	26.0
신의주(평북)	1	1.0
평안남도	1	1.0
함경북도	24	24.0
함경남도	4	4.0
양강도	30	30.0
황해남도	2	2.0
강원도	1	1.0
총계	100	100.0

〈표 2-10〉 성별 탈북 전 최종 거주지

(단위: 명, %)

구분	강원	남포	양강	자강	평남	평북	평양	함남	함북	황남	황북	개성
남	216	65	1,251	66	430	358	390	754	4,751	261	169	44
여	364	74	3,222	141	591	453	305	1,923	13,914	183	259	28
합계	580	139	4,473	207	1021	811	695	2,677	18,665	444	428	72
비율	1.9	0.5	14.7	0.7	3.4	2.7	2.3	8.8	61.4	1.5	1.4	0.2

자료: 통일부. (2017). 주요사업 통계(2017년 6월 말 기준).

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에서 2017. 10. 9. 인출.

5. 북한에서의 최종 학력

본 조사 응답자들의 탈북 전 교육 수준을 살펴보면 중학교(초급·고급) 졸업이 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문학교 21%, 대학 11% 순으로 높았다. 최종 학력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문학교 졸업이 남성(14%)보다 여성(26.3%)이 두 배 가까이 높다. 대학 졸업은 남성(11.6%)이 여성(10.5%)과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남성의 경우 대학원을 졸업(4.7%)한 사례가 있었으나 여성은 한 명도 없었다. 모집단의 북한에서의 최종 학력 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고등중)가 70.0%, 전문대 9.5%, 대학 이상 졸업자가 6.9%를 차지한다(2017년 6월 기준). 본 조사 응답자의 학력 수준은 모집단보다 높다. 전문대학교 및 대학 이상 학력 등 고학력 출신자가 34%로 모집단의 16.4%보다 두 배 이상 높다.

〈표 2-11〉 북한에서의 최종 학력-성별 교차분석

(단위: %)

		성별		전체
		남자	여자	
교육 수준	대학원	4.7	0.0	2.0
	대학	11.6	10.5	11.0
	전문학교	14.0	26.3	21.0
	중학교(고급, 초급)	65.1	61.4	63.0
	무학	2.3	1.8	2.0
	기타	2.3	0.0	1.0
전체		100.0	100.0	100.0

34 통일 대비 복지육구 조사

〈표 2-12〉 모집단의 북한에서의 최종 학력(2017년 6월 기준)

(단위: 명, %)

구분	취학전 아동	유치원	인민학교 (소학교)	중학교 (고등중)	전문대	대학 이상	무학	기타	계
남	413	136	756	5,390	757	1,013	353	21	8,839
여	397	193	1,298	15,880	2,133	1,097	486	57	21,541
합계	810	329	2,054	21,270	2,890	2,110	839	78	30,380
비율	2.7	1.1	6.8	70.0	9.5	6.9	2.8	0.3	100

자료: 통일부. (2017). 주요사업 통계(2017년 6월 말 기준).

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에서 2017. 10. 9. 인출.

6. 북한에서의 직업

응답자의 북한 거주 당시 직업으로는 ‘노동자’가 29%로 가장 많았다. ‘부양’은 21%, ‘사무원’ 11%, ‘농장원’은 10% 순이다. 통일부 집계자료(통일부, 2017)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으로 ‘노동자’가 38.2%, ‘무직 부양’은 47.5%를 차지한다. 통일부 자료의 노동자 집계에는 농장원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 조사의 비율과 유사하다. 부양의 경우 본 조사의 결과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본 조사의 응답자 구성이 부양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이 모집단의 71%보다 낮은 57%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모집단에 비해 학력 수준이 높은 점과 관련 있다. 한편 ‘사무원’ 11%, ‘의사·간호사·약사’와 같은 전문직은 4%로 비율이 낮다. 그러나 모집단 집계자료의 ‘전문직’ 비율인 2.2%의 약 두 배가 되는 수치다. 또한 본 조사 응답자의 학력 수준이 높은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표 2-13〉 공식 직업

(단위: 건, %)

구분	빈도	비율
군인	4	4.0
노동자	29	29.0
사무원	11	11.0
교원	2	2.0
농장원(협동/국영농장)	10	10.0
해외파견일군	1	1.0
봉사원	1	1.0
의사·간호사·약사	4	4.0
학생	1	1.0
부양	21	21.0
기타	15	15.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
총계	100	100.0

〈표 2-14〉 모집단의 북한에서의 직업 현황(2017년 6월 기준)

(단위: 명, %)

구분	관리직	군인	노동자	무직 부양	봉사 분야	예술체육	전문직	비대상 (아동 등)	계
남	391	655	3,854	3,134	76	77	203	449	8,839
여	122	93	7,740	11,286	1,162	186	461	491	21,541
합계(명)	513	748	11,594	14,420	1,238	263	664	940	30,380
비율	1.7	2.5	38.2	47.5	4.1	0.9	2.2	3.1	100.0

자료: 통일부. (2017). 주요사업 통계(2017년 6월 말 기준).

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에서 2017. 10. 9. 인출.

7. 소득 수준

다음으로 공식 직업과 관련하여 공식 소득 수준을 알아보았다. <표 2-15>에서 보듯 응답자의 60%가 공식 수입이 전혀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가계 소득에서 공식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간별로는 1000~5000원 구간이 2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만 원 초과 응답자가 7%를 차지했다. <표 2-17>에서 공식 소득이 없었다는 응답자를 제외한 평균 공식 수입은 1만 4579원(표준편차 77628.123, 최솟값 0, 최댓값 520,000, 중위수 0)으로 나타났다.

<표 2-15> 공식 소득 수준

(단위: 북한 원, %)

구분	빈도	비율
0원	60	60.0
천 원 이하	5	5.0
5천 원 이하	27	27.0
10만 원 이하	3	3.0
50만 원 이하	2	2.0
50만 원 초과	2	2.0
결측값	1	1.0
총계	100	100.0

<표 2-16>을 보면 북한 쌀 가격은 2016년 하반기 들어 다소 상승한 측면이 있으나 2015년 이래 평균적으로 1kg당 5000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KDI, 북한경제리뷰, pp. 114-115). 공식 소득 수준 1만 4579원으로 북한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쌀은 3kg에 불과하다.

〈표 2-16〉 북한 시장의 쌀 가격

(단위: kg, 북한 원)

	평양	신의주	혜산
2016년 1월	5,019	4,970	4,980
2월	5,019	5,000	5,150
3월	5,150	5,090	5,080
4월	5,120	5,050	5,050
5월	5,000	4,900	5,000
6월	4,950	4,900	4,850
7월	5,165	5,265	5,500
8월	5,315	5,420	5,520
9월	5,315	5,420	5,520
10월	5,622	5,344	5,874
11월	5,270	5,100	5,508
12월	5,406	5,196	5,528

자료: 데일리 NK. (2017. 10. 30.). 북 장마당 동향. <http://dailynk.com/korean/market.php>
에서 2017. 10. 30. 인출.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의 ‘식량전망 보고서(Food Outlook 2017)’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57kg으로 추정된다(FAO, 2017). 이 기준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한 달 쌀 소비량은 4.8 kg이며, 공식 수입으로는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먹을 쌀조차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공식 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가 곤란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식 소득과 달리 비공식 소득이 있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82%로 공식 소득자(40%)의 두 배가 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한편 비공식 소득이 있었다는 응답이 이렇듯 높게 나타난 것은 북한의 시장 확산과 관련 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의 장사 경험에 대한 5년간의 조사를 종합해 보면 평균적으로 72.%가 장사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장용석 등, 2017, pp. 102-103).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SAIS) 산하의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의 위성사진을 통해 파악한 북한의 공식 시장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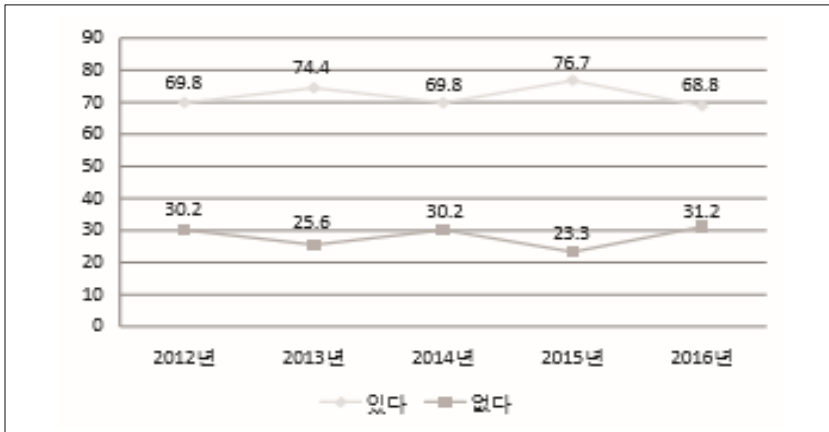
는 436개로 집계됐다(2016년 10월 25일 기준). 이러한 종합시장 외에도 골목시장과 야시장 등 비공식 시장까지 고려하면 북한에서 장사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공식 시장 수를 능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북한의 시장화 정도는 1980년대 중국의 수준을 능가할 뿐 아니라 체제 전환 직전의 헝가리, 폴란드와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된다(머니투데이, 2017; 장용석 등, 2017, p. 100). 북한 경제의 시장화는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김정은 체제에서도 그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커티스 멜빈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최근 5년간 새로 생기거나 확장, 보수된 시장은 100여 개에 이른다고 주장한다(이석기 등, 2017, p. 182).

〈표 2-16〉에서 보듯 비공식 소득의 구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10만 원 초과 50만 원 이하 구간이 34%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는 100만 원 초과 22%, 5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 13%, 5000원 초과 10만 원 미만이 10%를 차지했다. 비공식 수입이 있는 응답자의 평균 수입은 98만 3853 원이다. 비공식 수입으로는 약 197kg의 쌀을 구입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림 2-2] 장사 경험 유무

(단위: %)



자료: 장용석 등. (2017). 북한사회변동 2016: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p. 103.

〈표 2-17〉 비공식 소득 수준

(단위: 건, %)

	빈도	비율
무응답	2	2.0
0원	16	16.0
천 원 이하	1	1.0
5천 원 이하	2	2.0
10만 원 이하	10	10.0
50만 원 이하	34	34.0
100만 원 이하	13	13.0
100만 원 초과	22	22.0
총계	100	100.0

〈표 2-18〉 공식·비공식 소득 평균

(단위: 건, %)

		공식 소득 수준 (북한 원)	비공식 소득 수준 (북한 원)
N	유효	99	97
	결측	1	3
평균		14578.99	983852.58
중위수		.00	300000.00
표준편차		77.628.123	2055982.162
최솟값		0	0
최댓값		520000	13000000
백분위수	25	.00	75000.00
	50	.00	300000.00
	75	2000.00	1000000.00

비공식 직업으로는 ‘밀수’가 3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텃밭’ 23.1%, ‘되거리’ 15.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노동당원 출신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서 24%가 당원 출신이라고 응답하였다. 당원 출신 여부(결측치 1명 제외)와 비공식 직업과의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밀수’와 ‘되거리’가 가장 높았다(26.1%). ‘밀수’와 ‘되거리’와 같은 비공식 직업은 국경을 통과해야 하는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권력의 보호 없이는 돈벌이가 어렵다는 북한의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2-19〉 비공식 직업(복수 응답)

(단위: 건, %)

	응답		응답자 수 기준 %
	응답자	응답건수 기준 %	
장마당	11	8.9	12.1
음식장사	2	1.6	2.2
되거리	14	11.3	15.4
편의봉사	5	4.0	5.5
운수	7	5.6	7.7
공업생산	5	4.0	5.5
텃밭	21	16.9	23.1
샅별이	7	5.6	7.7
거간꾼	7	5.6	7.7
밀수	28	22.6	30.8
돈장사	5	4.0	5.5
기타	12	9.7	13.2
합계	124	100.0	136.3

〈표 2-20〉 당원 출신 응답자의 비공식 직업(복수 응답)

(단위: 건, %)

	응답자 수	응답 건수 기준 %	응답자 수 기준 %
장마당	2	6.5	8.7
음식장사	1	3.2	4.3
되거리	6	19.4	26.1
운수	1	3.2	4.3
공업생산	1	3.2	4.3
텃밭	5	16.1	21.7
샅별이	4	12.9	17.4
거간꾼	2	6.5	8.7
밀수	6	19.4	26.1
돈장사	1	3.2	4.3
기타	2	6.5	8.7
합계	31	100	134.8

다음으로 ‘8.3 노동자’로 일한 경험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른바 ‘8.3 노동자’라는 개념은 1984년 8월 3일 김정일이 평양시 경공업제품 전시장을 시찰하며 폐자재 및 부산물을 이용한 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을 전군중적으로 확대 실시하라고 지시한 이후 ‘8.3 인민소비품 창조운동’이라는 군중운동이 발기되면서 비롯되었다. 여기서 ‘8.3 인민소비품’은 연로자, 가정주부가 생산주체가 되어 부산물, 폐기물 등을 원료로 하여 자체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만든 사적 생산제품이다. 처음에는 8.3 인민소비품 생산주체가 되려면 소속에 관계없이 읍·노동자구·동·리 사무소에 등록해야 했으나, 1980년대 말 생산 단위 증가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집 안에서 소규모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개인 수공업이 늘었다. 이후 경제난이 심각했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 8.3 노동자로 등록한 후 장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 그러면서 ‘8.3 노동자’의 개념이 다소 변하여 지금은 직장에 매월 얼마간의 돈을 내고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일컫는다(북

한지식사전, 통일교육원, 2013, pp. 642-644 참조).

즉, 8.3 인민소비품 생산단위는 공식과 비공식이 결합된 곳이다. 공식적인 상업 유통기관이지만 이를 통해 비공식적 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응답자 중 23명이 8.3 노동자로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8.3 노동자 활동 기간은 평균 30개월로 나타났다. 8.3 노동을 통한 수입은 평균 121만 5280원으로 나타났다. 8.3 노동의 대가로 소속기관에 지불한 돈은 평균 26만 5926원으로 수입의 21.9%를 차지한다.²⁾

〈표 2-21〉 8.3 노동자로 일한 기간

(단위: 건, %)

		8.3조 기간 (개월)	8.3조 수입 (북한 원)	8.3조 지출 (북한 원)
응답자수	유효	23	23	23
평균		29.48	1,215,279.74	265,926.09
중위수		12	250,000	60,000
백분위수	25	6	130	50,000
	50	12	250,000	60,000
	75	60	1,000,000	130,000

8. 경제 수준

북한의 계층 분류에 따르면, 김일성 가계 중심의 항일빨치산 가족 및 그 연고자들로 구성된 1%의 최상층 핵심계층과 기득권 세력으로 구성된 27%의 핵심계층(핵심군중), 기본 군중으로 표현되는 직업동맹, 농근맹, 청년동맹, 여맹 등 각종 사회조직 성원으로 구성된 45%의 동요계층과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과 주로 감시 및 통제의 대상이 되는

2) 8.3 노동자 수입과 지출의 상관분석 결과 유의확률(P-value)은 0.808로 상관관계가 없으며 상관계수는 0.054이다.

27%의 복잡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박영자, 2012). 그러나 이러한 ‘정치-신분(출신성분)’에 의한 계층구조는 경제난과 시장의 확산에 따라 소득과 소비와 같은 경제적 생활 수준에 따라 재편되었다.

가장 보편적인 식생활 기준으로 그 특징을 정리해 보면, 상층은 쌀밥을 기본 주식으로 하며 고기, 과일 등 다양한 부식물을 즐기고, 과자·아이스크림 등 각종 기호품을 사는 데 크게 제약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중층은 주로 쌀밥을 먹기는 하지만 혼합식도 먹으며, 부식물과 기호식품을 사는 데 일정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며, 하층은 혼합식 중심으로 쌀 이외에 다른 식량을 섞어 섭취하며, 부식물이나 기호식품은 명절 때나 겨우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최대석, 장인숙, 2015, pp. 199-203).

본 조사는 위의 계층 구분을 기준으로 하여 북한 거주 당시 경제수준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중층’이 6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하층 31%, 상층 5%로 나타났다. 남북하나재단에서 발간한 『2016 정착실태조사』(장인숙 등, 2017b)에서도 북한에서의 생활수준이 중층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9.2%로 가장 높았다. 하층이 44.3%, 상층이 5.7%를 차지했다. 본 조사와 비교하면 상층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중층이 약 14.8 포인트 높고, 하층이 13.3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는 본 조사의 응답자들의 학력 수준이 높고, 전문직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구학적 특성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장인숙 등, 2017b, p. 161).

〈표 2-22〉 경제 수준

(단위: 건, %)

	빈도	비율
상	5	5.0
중	64	64.0
하	31	31.0
총계	100	100.0

〈표 2-23〉 북한에서의 생활 수준

(단위: %)

구분		상	중	하
전체		5.7	49.2	44.3
성별	남성	6.9	51.8	40.4
	여성	5.4	48.4	45.7

자료: 장인숙 등. (2017b). 2016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 p. 161.

공식 소득 수준과 경제 수준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공식 소득이 0원이라고 응답한 60명 중 68.3%가 ‘중간층’이라고 답했으며, 3.3%는 ‘상층’이라고 답했다. 5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중간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50만 원 초과 소득 구간 이상에서는 ‘하층’에 속한다는 응답자는 없었다.

〈표 2-24〉 경제 수준-공식 소득 수준 교차분석

(단위: %)

		공식 소득 수준						전체
		0원	천 원 이하	5천 원 이하	10만 원 이하	5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경제 수준	상	3.3	0.0	7.4	0.0	0.0	50.0	5.1
	중	68.3	80.0	59.3	0.0	50.0	50.0	63.6
	하	28.3	20.0	33.3	100.0	50.0	0.0	31.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다음으로 비공식 소득 수준과 경제 수준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공식 소득과 마찬가지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1000원 초과부터 1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하층 응답자가 가장 높았고, 50만 원 초과 구간 부터는 중간층 응답자가 가장 높았다.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빈도수는 10만 원 초과 50만 원 미만 구간에서 중층이라고 응답한 경우이다.

〈표 2-25〉 비공식 소득 수준-경제 수준 교차분석

(단위: %)

		비공식 소득 수준								전체
		무응답	0원	천 원 이하	5천 원 이하	10만 원 이하	50만 원 이하	백만 원 이하	백만 원 초과	
경제 수준	상	0.0	12.5	0.0	0.0	0.0	0.0	7.7	9.1	5.0
	중	100.0	68.8	0.0	0.0	40.0	58.8	84.6	72.7	64.0
	하	0.0	18.8	100	100	60.0	41.2	7.7	18.2	31.0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 가족관계

응답자의 북한 거주 당시 혼인 상태는 52%가 결혼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었으며, 34%는 결혼한 적이 없었고, 14%는 사망·이혼·별거의 상태였다고 응답했다. 성별 혼인 상태는 남성의 55.8%, 여성의 49.1%가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었으며, 남성의 34.9%, 여성의 33.3%가 결혼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남북하나재단의 『2016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장인숙 등, 2017b)에 따르면 혼인 상태의 경우 ‘배우자 있음’이라는 응답은 48.6%, ‘결혼하지 않음’ 27.1%, ‘결혼한 적이 있으나 이혼함’ 13.8%, ‘배우자가 사망함’이 9.8%의 순이었다.

〈표 2-26〉 혼인 상태-성별 비교

(단위: %)

		결혼 상태				전체
		결혼한 적이 없음	결혼함 (사실혼 포함)	배우자 사망	이혼·별거	
성별	남자	34.9	55.8	2.3	7.0	100.0
	여자	33.3	49.1	12.3	5.3	100.0
전체		34.0	52.0	8.0	6.0	100.0

〈표 2-27〉 혼인 상태

(단위: %)

구분		배우자 있음	결혼하지 않음	결혼한 적이 있으나 이혼함	배우자가 사망함
전체		48.6	27.1	13.8	9.8
성별	남성	49.2	35.5	11.6	3.0
	여성	48.4	24.2		14.6

자료: 장인숙 등. (2017b). 2016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 p. 192.

북한 거주 당시 함께 살았던 가족 수는 평균 2.3명으로 나타났다. 가족 수 3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가족 수 3명 47%, 4명 25%, 2명 10% 순이다. 5명 이상 가족은 11%를 차지했다. 한편 응답자는 평균 1.25명의 미취학 자녀를 두고 있었다. 응답자 중 17%가 6세 이하의 미취학 자녀와 함께 살았고, 미취학 자녀 수는 1명이 56.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자녀가 2명이라는 응답이 18.3%를 차지했다.

〈표 2-28〉 가족 수

(단위: 건, %)

	빈도	비율
무응답	1	1.0
0	1	1.0
1명	5	5.0
2명	10	10.0
3명	47	47.0
4명	25	25.0
5명 이상	11	11.0
총계	100	100.0

제 3 장

조사 결과 분석

제1절 기본생활육구

제2절 근로육구

제3절 소득보장육구

제4절 의료보장육구

제5절 소결

제1절 기본생활욕구

사회복지의 핵심적인 개념인 욕구(needs)의 사전적 의미는 “본능적, 충동적으로 뭔가를 구하거나 얻고 싶어 하는 생리적, 심리적 상태”이다 (남세진, 조흥식, 1995). 모든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있으며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욕구란 개념으로 표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차용하고 있는 매슬로(Maslow)의 욕구 이론(Maslow, 1943)에 의하면 기본생활욕구란 인간 욕구(Human needs) 5단계 중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간의 생존과 생활에 직접적인 이익을 주는 식량, 물, 주택, 의복, 보건,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욕구를 의미한다.

좁은 의미에서의 기본 욕구는 개인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로는 공동체의 일반적인 기본 생활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응답자의 기본생활욕구, 근로욕구, 소득보장욕구, 의료보장욕구 중 첫 번째 조사에 해당하는 본 장의 기본생활욕구는 총 6가지의 범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개인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기본욕구는 식생활욕구, 주거생활욕구, 여가생활욕구로 범주화하였고, 공동체의 일반적인 기본생활 수준을 반영하는 기본욕구는 자녀교육욕구, 사회관계욕구, 사회이동욕구로 범주화하여 조사하였다.

1. 식생활

인간의 생활 중 식생활은 배고픔을 해결하고 생명의 원동력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가장 원천적인 욕구이다. 식생활의 욕구는 인류의 역사 발전과 함께 변화해 왔고 현대와 같이 산업과 경제성장으로 인해 생활 수준이 향상된 보편 사회에서는 식생활 문제의 양보다는 질적인 욕구 해결을 주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다. 또한 식생활에 관한 욕구 수준은 한 사회의 생활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작용한다. 사회계급들 사이의 음식물 차이에는 그들의 경제적·문화적 불평등이 반영되어 있다는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주장과 같이 식생활 문제는 수많은 인류 사회에서 계급 또는 계층을 구분하는 대표적 지표로 작동해 왔다(Bourdieu, 2005).

북한은 아직도 식생활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이며 식생활의 질보다는 양적 해결이 주요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식량을 비롯한 식생활 문제를 통해 오늘날 북한 사회의 자연환경적 상태, 사회문화적 상태, 기술적 상태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지표로 활용하기도 한다.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정량정시(定量定時)의 배급제가 중단된 이후 북한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식량이나 식료품을 구입하게 됨으로써 북한 사회에서도 경제적 지위에 따라 식생활의 차이가 점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주민의 식생활 욕구와 관련한 6가지 문항을 통해 응답자의 식생활에 관한 욕구 수준을 파악하고 통일 대비 식생활 관련 복지정책 수립의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가. 식생활: 일주일 식량

응답자의 식생활 욕구 조사를 위해 “귀하의 가족들(4인 기준)이 충분히 먹는 데 일주일에 평균 얼마의 식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표 3-1>에서 보이듯 응답자 100인의 일주일 평균 식량 소비 욕구는 14.2kg으로 나타났다. 10kg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5kg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3명이었다. 전체 100명의 응답자 중 2~10kg 이하 구간의 응답률은 57%로 나타났다.

kg별 응답의 빈도수를 구간별로 구분하면 6~10kg 구간의 응답률이 36%로 가장 높았고, 11~20kg 구간 응답률은 28%로 나타났다. 반면 41~60kg 구간의 응답률은 6%, 60kg 초과 구간의 응답률이 2%로 나타나 응답자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 필요로 하는 식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욕구를 알 수 있었다.

<표 3-1> 식생활-일주일 식량(개방형 서술)

(단위: Kg, 건)

Kg	응답 수	Kg	응답 수	Kg	응답 수	Kg	응답 수	Kg	응답 수
2.0	1	6.0	3	12.0	3	18.0	1	40.0	1
2.5	1	7.0	10	14.0	3	20.0	8	50.0	2
4.0	3	8.0	6	15.0	9	21.0	1	60.0	1
4.2	1	9.0	1	16.0	2	25.0	6	70.0	2
5.0	13	10.0	16	17.0	2	30.0	2	결측값	2

〈표 3-2〉 식생활-일주일 식량(구간별)

(단위: 건, %)

구간 범위	응답 수	누적 비율
0-5kg	19	19.4
6-10kg	36	56.1
11-20kg	28	84.7
21-40kg	10	94.9
41-60kg	3	98.0
60kg 초과	2	100.0
결측값	2	-
총계	100	100

세계식량계획(WFP)은 『WFP DPR Korea Country Brief』(August 2017)를 통해 북한의 성인 남녀의 1일 식량 배급량을 300~400g으로 추정 발표하고 있다. 1주일에 2.1~2.8kg, 4인 가족 기준으로 8.4~11.2kg 이 지급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통일 이후를 가정한 응답자의 식량에 관한 욕구는 현재 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상정하는 통일 이후 4인 기준 한 가족이 충분히 먹는 데 일주일에 평균 식량(kg) 욕구 수준은 성별, 소득별, 직업별, 경제적 수준별 교차분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만, 연령별 변수와 교차하여 볼 때 연령별 필요욕구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6~10kg 구간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연령대는 20대이며, 11~20kg 구간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연령대는 30대이다. 21~40kg 구간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은 보인 연령대는 40대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식량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식생활-일주일 식량(구간별)-연령별 교차분석

(단위: 건)

		연령대					총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식생활_일주일_식량_범위	0-5kg	6	6	4	3	0	19
	6-10kg	12	11	5	7	1	36
	11-20kg	5	11	8	4	0	28
	21-40kg	3	1	6	0	0	10
	41-60kg	1	1	1	0	0	3
	60kg 초과	1	0	0	1	0	2
결측값		-	-	-	-	-	2
총계		28	30	24	15	1	100

나. 식생활: 고기·과일·다과

식생활 욕구 중 식량 이외의 고기·과일·다과에 관한 욕구 수준의 조사를 위해 “귀하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고기·과일·다과를 사 먹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한 결과 〈표 3-4〉에서 보듯 ‘매일 먹기를 원한다’는 응답이 과일(54%), 다과(51%), 고기(14%) 순으로 나타났다. 고기는 주 3회(54%)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주 1회(25%), 매일(14%)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기는 비교적 욕구 수준의 범위가 넓게 나타난 반면 과일과 다과는 절반 이상이 매일 필요로 하며, 주 3회 구간에서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고기보다는 과일과 다과에 관한 욕구 수준이 높다는 것으로 보여준다.

〈표 3-4〉 식생활-고기·과일·다과

(단위: %)

	고기	과일	다과 (차, 커피, 아이스크림, 과자 등)
매일	14	54	51
주 3회	54	33	33
주 1회	25	8	6
월 1회 이상	4	2	5
원하지 않는다	3	3	5
총계	100	100	100

2015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15 북한사회변동』(장용석 등, 2016)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고기를 어느 정도 먹었는지를 알 수 있다. 고기(육고기와 물고기 포함)를 거의 매일 먹었다 22.6%,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먹었다 30.8%,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먹었다 35.6% 등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측의 고기 섭취 경험에 의하면 ‘한 달에 한두 번’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지만, 본 조사의 고기 섭취 육구 수준은 ‘주 3회’가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 통일 이후 응답자의 고기 섭취 육구는 매우 높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식생활 육구 중 고기 이외에도 과일 및 차, 커피, 아이스크림, 과자 등의 간식에 대한 육구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현재 북한의 식생활 수준이 세 끼 식사 이외에는 부식물 및 간식에 대한 공급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반증한다.

식생활 육구 중 고기·과일·다과의 육구는 응답자의 경제적 수준과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경제적 수준이 상일수록 고기·과일·다과의 육구는 높은 빈도를 나타냈고, 경제적 수준이 하일수록 고기·과일·다과의 육구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수준이 상인 응답자 비율과

경제적 수준이 하인 응답자 간의 편차가 가장 큰 항목은 ‘과일’이었다. 과일은 경제적 수준이 상인 경우 높은 욕구 수준을 나타내며 경제적 수준에 따른 욕구 수준의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반면 다과는 경제적 수준 간 편차가 작고, 대체로 경제적 수준별로 고른 빈도수를 보여 일반 주민 식생활에 고루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5〉 식생활-고기-경제적 수준 간 교차분석

(단위: 건)

식생활-고기		경제 수준			총계
		상	중	하	
식생활-고기	매일	2	10	2	14
	주 3회	3	36	15	54
	주 1회	0	13	12	25
	월 1회 이상	0	3	1	4
	원하지 않는다	0	2	1	3
총계		5	64	31	100

〈표 3-6〉 식생활-과일-경제적 수준 간 교차분석

(단위: 건)

식생활-과일		경제 수준			총계
		상	중	하	
식생활-과일	매일	4	34	16	54
	주 3회	1	21	11	33
	주 1회	0	5	3	8
	월 1회 이상	0	2	0	2
	원하지 않는다	0	2	1	3
총계		5	64	31	100

〈표 3-7〉 식생활-다과-경제적 수준 간 교차분석

(단위: 건)

식생활-다과		경제 수준			총계
		상	중	하	
식생활- 다과	매일	3	35	13	51
	주 3회	2	18	13	33
	주 1회	0	3	3	6
	월 1회 이상	0	4	1	5
	원하지 않는다	0	4	1	5
총계		5	64	31	100

다. 식생활: 외식

응답자의 식생활 욕구 중 외식에 관한 욕구도 높게 나타났다. “귀하는 가족들과 함께 종종 음식점(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주 1회 이상(67%)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월 1회 이상(27%), 연 1회 이상(1%) 순으로 나타났다. 원하지 않는다(5%)는 응답도 있다.

연령별로 보면 주 1회라고 응답한 연령 중 가장 높은 비중(80%)을 보인 연령대는 40대이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층이며, 특히 집안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가정주부의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직업별로는 주 1회라고 답한 응답자 67명 중 노동자(20명), 부양가족(12명), 사무원(9명), 농장원(8명), 군인(3명) 순으로 나타났다. 식생활 중 외식욕구는 연령과 직업의 양의 관계를 보였다.

〈표 3-8〉 식생활-외식-연령별 교차분석

(단위: 건)

식생활-고기		연령대					총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식생활 -외식	주 1회 이상	18	20	20	8	1	67
	월 1회 이상	10	9	4	4	0	27
	연 1회 이상	0	0	0	1	0	1
	원하지 않는다	1	1	1	2	0	5
총계		29	30	25	15	1	100

2. 주거생활

북한 주민들은 국가로부터 살림집을 배정받아 매달 사용료를 내는 임대 형식으로 거주한다. 북한 주택의 규모와 구조는 입주자의 직장과 직위를 기준으로 1~4호, 특호 등 모두 5개의 유형으로 배정되며(살림집법 제 30조, 2012) 주택보급률은 50~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택을 신청하고 입사증(등기부등본)을 받기까지 4~5년이 걸리며 주택 부족으로 인해 하나의 주택에 여러 가구가 함께 동거하는 경우가 비교적 흔한 일로 알려져 있다.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상품시장의 진전과 함께 주택시장이 형성되어 최근에는 주택을 사고파는 매매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강은주, 2017). 주요 도시에서는 아파트 건설이 붐을 조성하고 있으며 신흥자본주들에 의한 새로운 주택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존에는 주택을 국가로부터 공급받아 거주하는 공간으로 인식했다면, 최근에는 주택의 환금성, 과시성, 편의성 등등의 새로운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주거생활에 대한 욕구는 통일 대비를 위해 사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거생활에 관한 욕구조사는 주택의 물리적 측면과 가구의 경제적 측면으로 접근한다. 주택의 물리적 측면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가와 관련되며, 주택의 최소 면적 기준(방, 면적), 필수적인 설비, 그리고 주택 구조와 환경에 관한 질의로 구성된다. 반면 가구의 경제적 측면은 가구의 구성 및 규모에 적합한 주택에 거주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부담능력과 관련된 질의로 진행된다. 주택의 물리적 조건에 대한 욕구와 가구의 경제적 능력은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두 측면은 동시에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응답자의 주거생활에 관한 욕구조사 또한 주택의 물리적 측면에 관한 조사 항목으로 주택 유형, 방 개수, 주택설비를 조사하였고, 가구의 경제적 능력과 관련하여서는 생활용품 구입품목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정책의 측면에서 정부의 주택지원에 관한 욕구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주거생활: 주택 유형

유엔인구기금(UNFPA)과 북한 통계국이 공동으로 2015년에 발간한 『2014년 북한의 사회경제, 인구통계, 보건 조사보고서』(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2015)에 의하면, 북한의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 비중이 32.8%, 연립주택 41.7%, 아파트가 25.0%로 나타났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15 북한사회변동』(장용석 등, 2016) 실태조사에서는 탈북 직전 북한이탈주민이 살았던 살림집의 유형이 하모니카집(연립주택) 44.7%, 독집 26.5%, 아파트 22.0% 순으로 나타난 바 있다.

본 조사에서는 <표 3-9>에서 보듯 “통일 후 귀하는 어떤 주택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단독주택(59%)이 가장 높은 응답률

을 보였고, 이어 아파트(37%), 연립주택(4%)의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실태조사와 비교하여 보면 현재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연립주택 거주자들이 통일 이후엔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주택 유형으로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평양을 비롯한 북한 도시 곳곳에서 아파트 개발 붐이 일고 있는 현상을 감안한다면 주택 유형 중 아파트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단독주택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난 것은 예상외였다. 이것은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공공임대 아파트의 ‘좁고 답답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오랜 사회주의 생활을 통해 공공의 생활장소보다는 독립적이고 사적 생활이 보장되는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가 단독주택을 선호하고 있지만, 특히 30대(21명)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대(17명), 40대(14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가족 수(명)와 교차한 질문의 응답률을 보면, 단독주택은 가족 수 5명인 응답자(71.4%), 가족 수 7명인 응답자(66.7%)의 선택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아파트는 가족 수 1명인 응답자(40%), 가족 수 2명인 응답자(40%)의 선택 비중이 높았다. 즉, 가족이 많을수록 단독주택을 선호하고 가족이 적을수록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3-9〉 주거생활-주택 유형-가족 수(명) 교차분석

(단위: 건)

주거생활-주택 유형		가족 수(명)									총계
		무응답	0	1	2	3	4	5	6	7	
주거 생활 - 주택 유형	단독주택	1	1	3	6	27	14	5	0	2	59
	연립주택	0	0	0	0	2	2	0	0	0	4
	아파트	0	0	2	4	18	9	2	1	1	37
총계		1	1	5	10	47	25	7	1	3	100

나. 주거생활: 방 개수

응답자에게 “귀하가 원하는 주택의 방의 수는 몇 개입니까?”라고 질의한 항목에서는 방 3개 이상을 원하는 응답이 전체의 83%로 차지했다. 이중 방 3개(40%)가 가장 많았고, 방 4개(23%), 방 5개(19%)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배정받아 거주하는 공공임대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60㎡ 이하로 통상 방의 개수가 2개 이하이다. 이와 비교하면 북한이탈주민은 더 넓은 주택에 대한 욕구가 높고 현재의 주거생활 만족도는 낮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응답자의 주거생활 중 방의 개수를 가족 수(명)와 연계하여 분석하면 가족 수 3명이 방 3개를 원하는 비중(48.9%)이 가장 높고, 가족 수 5명이 방 4개를 원하는 비중(42.9%)이 뒤를 이어 방의 개수와 가족 수 간의 양의 관계를 보였다.

〈표 3-10〉 주거생활-방 개수-가족 수(명) 교차분석

(단위: 건)

주거생활-방 개수		가족 수 (명)									총계
		무응답	0	1	2	3	4	5	6	7	
주거 생활 - 방 개수 (개)	무응답	0	0	1	1	0	0	0	1	0	3
	2	1	0	0	3	4	3	0	0	0	11
	3	0	1	1	2	23	8	2	0	3	40
	4	0	0	1	3	7	9	3	0	0	23
	5	0	0	2	1	10	4	2	0	0	19
	6	0	0	0	0	2	0	0	0	0	2
	8	0	0	0	0	0	1	0	0	0	1
	10	0	0	0	0	1	0	0	0	0	1
총계		1	1	5	10	47	25	7	1	3	100

응답자의 주거생활욕구를 한국 사회의 주거실태와 비교해 조사해 보았다. 국토교통부가 2014년 실시한 한국의 전체 가구 대상의 『2014년 주거실태조사』(국토교통부, 2014)에 의하면 향후 거주하고 싶은 주택 유형은 일반적인 단독주택 37.4%, 저밀도 아파트 25.1%, 고밀도 아파트 23.0%로 단독주택에 비해 아파트 주택 유형이 높게 나타났다. 향후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규모는 평균 92.9㎡로 수도권(96.4㎡), 광역시(93.8㎡), 도(道) 지역(87.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 지역보다 수도권 지역의 거주자가 더 넓은 주택 규모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조사와 비교하면 주택 유형에 있어 남쪽은 아파트 선호도가 강하고, 북한이탈주민은 단독주택 선호도가 강하다는 차이가 있지만, 주택 규모는 양쪽 모두 3~4칸의 방을 보유한 30평형대의 주택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주거생활: 크기, 난방, 위생, 근접성, 편의성

응답자의 주택설비와 기능에 대한 욕구조사로 주택을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항의 순위조사를 실시하였다. “귀하가 주택을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 순위(1~5위)를 적어주세요”라는 개방형 질문에 대해 1순위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항목은 주택의 크기(35%)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방의 개수가 더 많기를 희망했던 조사 결과와 일치한다. 2순위는 난방(28%), 3순위는 위생(35%), 4순위는 편의성(32%), 5순위는 근접성(28%)이다.

〈표 3-11〉 주거생활-주택 선택 시 고려 사항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무응답	총계
크기	35	14	20	10	19	2	100
난방	16	28	20	20	14	2	100
위생	10	25	35	14	14	2	100
근접성	13	14	11	32	28	2	100
편의성	24	17	11	23	23	2	100

주택을 선택할 때 고려 사항은 연령별로 차이가 있었다. 〈표 3-12〉에 보듯 주택의 크기를 1순위로 고려한다고 응답한 연령대는 20대와 40대였다. 30대는 3순위, 50대는 5순위로 응답했다. 반면 난방은 30대와 60대가 1순위로 응답했고, 40대는 2순위로 응답했다. 위생은 전 연령대가 2~3순위로 응답했다. 근접성과 편의성에 관해서는 40대와 60대가 5순위로 응답한 반면 30대는 2순위로 응답했고, 20대와 50대는 1순위 응답자와 4순위 응답자의 비율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사회활동이 활발한 연령층은 근접성과 편의성을 우선적 고려 사항으로 인식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연령층은 근접성과 편의성이 후순위 고려 사항으로 나타났다. 다만, 근접성과 편의성이라는 용어의 내용 차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순위별 응답 비중이 전 연령대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3-12〉 주거생활-주택 선택 시 고려 사항-연령별 순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크기	1순위	3순위	1순위	5순위	3순위
난방	3.4순위	1순위	2순위	3.4순위	1순위
위생	2.3순위	2.5순위	3순위	3순위	2순위
근접성	1.4순위	2순위	5순위	1.4순위	5순위
편의성	1.4순위	2순위	5순위	1.4순위	5순위

본 조사를 한국의 주거생활 욕구와 비교하면 비교적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조사대상인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 기준으로 1년 남짓한 남한 입국자이기 때문에 통일 이후를 상정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생활 중 난방이나 위생 문제를 우선적인 고려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직주근접의 원칙에 따라 주택을 배정받아 왔기 때문에 주택의 근접성과 편의성 문제는 다른 고려 사항에 비해 비교적 후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국토교통부의 『2014년 주거실태조사』(국토교통부, 2014)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전체 가구 중 이사 의향이 있는 가구 중 5년 내 이사 계획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이사를 계획하는 이유를 질문하였을 때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하려고(27.6%), 주택 규모를 더 늘리려고(27.0%), 쾌적하고 양호한 지역 환경으로 가기 위해서(22.0%),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좋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18.1%) 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나타났다. 본 조사와 비교하면 한국은 주택을 선택할 때 주택의 규모 이외에도 편의성과 근접성을 고려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라. 주거생활: 생활용품

주거생활은 가구의 구성 및 규모에 적합한 주택에 거주하는 물리적 조건뿐 아니라 주거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해 주는 생활용품의 결핍실태를 파악함에 따라 주거생활의 복지욕구를 해결할 수 있다. 응답자의 주거생활에 관한 주관적 생활여건과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생활용품 10개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하였다. “아래에 제시된 생활용품 구입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답해 주세요” 라는 질문에 대해 <표 3-13>에서 보듯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은 휴대폰(97%)을 꼭 필요한 항목으로 응답하였다. 냉장고(95%), TV(81%), 컴퓨터(77%), 세탁기(75%) 등 생활필수가전용품도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반면 진공청소기(46%), 김치냉장고(48%), 정수기(56%) 등은 있으면 좋지만 꼭 필요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10대 생활용품 중 1~5순위의 필요성 비중이 높게 나타난 품목은 대체 불가능한 필수용품에 속하고, 6~10순위의 생활용품은 대중교통, 가스레인지, 수도, 냉장고, 걸레 등 다른 생활용품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낮은 빈도수를 나타낸 것으로 추론된다. 즉, 생활용품의 질보다는 양적 결핍의 해소가 더 필요한 상태임을 시사한다.

〈표 3-13〉 주거생활-생활용품

(단위: %)

	휴대폰	냉장고	TV	컴퓨터	세탁기	자동차	전자 레인지	정수기	김치 냉장고	진공 청소기
꼭 필요하다	97	95	81	77	75	58	57	56	48	46
있으면 좋다	3	5	17	19	23	36	36	33	42	47
꼭 필요하진 않다	0	0	2	3	1	6	5	11	10	7
무응답	-	-	-	1	1	-	2	-	-	-
총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생활용품의 필요성 여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생활용품의 필요성 여부를 상·중·하의 경제적 수준과 교차분석하여 수준별 차이를 알아보았다.

경제적 수준이 상이라고 응답한 5명은 휴대폰, 냉장고, 컴퓨터, 세탁기, 정수기 품목에서 ‘꼭 필요하다’(100%)고 응답하였다. 특히 정수기는 경제적 수준이 상인 응답자만이 모두 필요성을 강조한 생활용품이다. 경제적 수준이 중이라고 응답한 64명은 휴대폰(95.3%), 김치냉장고(95.3%), 냉장고(93.8%) 순으로 ‘꼭 필요하다’는 응답을 했다. 김치냉장고는 경제적 수준 중의 응답자만이 필요성을 높게 강조한 생활용품이다. 경제적 수준이 하라고 응답한 31명 중에서는 휴대폰이 100%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이어 냉장고(96.8%), TV(83.9%)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앞선 생활용품의 필요성 여부에서는 필수생활용품에 대한 양적 욕구가 강하게 나타났다면, 경제적 수준과 교차분석으로 실시한 결과에서는 경제적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생활용품의 질적 욕구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3-14〉 주거생활-생활용품-경제적 수준별 교차분석

(단위: 건)

	휴대폰	냉장고	TV	컴퓨터	세탁기	자동차	전자 레인지	정수기	김치 냉장고	진공 청소기
경제적 수준-상	5	5	4	5	5	2	4	5	2	2
경제적 수준-중	61	60	51	50	47	39	35	36	61	30
경제적 수준-하	31	30	26	22	23	17	18	17	18	14

유사한 조사 항목으로 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 복지욕구 실태조사』(이태진 등, 2014)에 의하면 한국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생활용품은 〈표 3-15〉에서 보듯이 세탁기가 9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전자레인지(89.9%), 유선방송·위성방송(82.5%), 진공청소기(73.7%), 스마트폰(71.1%) 순이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는 한국인이 사용하는 생활용품의 질적 욕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냉장고, TV 등의 일반 가전 품목이 없지만, 본 조사와 비교하면 본 조사의 응답자와는 달리 한국인의 생활용품 필요성 품목에는 전자레인지, 진공청소기, 김치냉장고 등도 높은 필요성을 보였다. 이는 한국의 주거생활이 아파트 중심의 주거 공간, 맛별이 가구의 증가, 인스턴트 음식의 소비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응답자)과의 생활양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3-15〉 영역별 결핍 문항과 필요 여부-생활용품

(단위: %)

품목	세탁기	전자 레인지	유선.위 성방송	진공청 소기	스마트 폰	김치 냉장고	컴퓨터 인터넷	자동차	에어컨	정수기
필요성	96.6	89.9	82.5	73.7	71.1	66.5	65.7	56.8	54.5	39.3

자료: 이태진 등. (2014). 2014년 복지욕구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56.

3. 여가생활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조사는 사회보장법에 근거한 사회서비스 영역 중 문화 복지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욕구 중 하나이다. 또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문으로서 사회변화에 따른 욕구의 다양화 및 욕구 수준의 상향 이동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조사영역이다.

북한 주민들은 여가에 대한 개념이 대체로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전체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1990년대 경제난 이후 경제적 빈곤 때문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정서적 개념이 없어지고 생존 중심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서이다. 또한 북한의 4대 명절은 4월 15일(김일성 탄생일), 2월 16일(김정일 탄생일), 9월 9일(공화국 창건일), 10월 10일(노동당 창건일)인데, 명절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개념이라기보다 정치적 행사절로서의 의의가 매우 크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휴식이라고 하면 집에서 낮잠을 자거나 가족, 친구들과 주변 공원에 나가 담소를 나누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북한 주민의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응답자의 여가생활 결핍 정도와 여행에 관한 필요성 여부를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조사 항목인 “귀하는 종종 가족들과 함께 여가생활(극장, 경기장, 유흥장, 낚시 등)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은 꼭 필요하다(34%), 하면 좋다(64%), 꼭 필요하지는 않다(2%) 순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조사 항목인 “귀하는 가족들과 함께 1년에 1번 이상 2~3일 정도의 여행을 다녀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은 꼭 필요하다(44%), 하면 좋다(52%), 꼭 필요하지는 않다(3%) 순으로 답했다.

〈표 3-16〉에서 보듯 여가생활에 대한 조사와 여행에 관한 조사 모두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50%에도 미치지 않았고, ‘꼭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도 존재했다. 응답자의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일상적인 여가생활(34%)보다는 1년에 1번 이상 여행(44%)을 가고 싶어 하는 욕구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 수준이 낮은 것인지 여가생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만 현실적으로 여가생활을 즐길 만한 삶의 여유와 경제력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은 진행하지 못했다.

〈표 3-16〉 여가생활-여가와 여행

(단위: %)

	귀하는 종종 가족들과 함께 여가생활(극장, 경기장, 유흥장, 낚시 등)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가족들과 함께 1년에 1번 이상 2~3일 정도의 여행을 다녀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하다	34	44
하면 좋다	64	52
꼭 필요하지는 않다	2	3
무응답	-	1
총계	100	100

응답자의 여가생활에 대한 낮은 욕구를 조금 더 파악하기 위해 유사한 조사실태 결과와 비교해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북하나재단이 실시한 『2016년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장인숙 등, 2017a)(이하 2016 사회통합조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은 “여가활동을 위해 한 달에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출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지출이 없음’(36.4%)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1만 원~10만 원 이하’(29.3%)가 그 뒤를 이었다. 북한이탈주민 전체의 월평균 여가활동 지출비용은 13만 5000원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14 복지욕구 실태조사』(이태진 등, 2014)는 한국인의 여가생활과 여행에 관한 욕구를 ‘필요성 여부 + 실행 여부’로 병행 조사한 것이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긍정의 답변을 하기 때문에 실행 여부를 동시에 질의하고 있다. <표 3-17>에서 보듯 한국인은 여가생활에 대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동시에 실행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42.8%로 나타났다. 반면 여행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식하나 하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률이 45.8%로 가장 높았다.

본 조사 결과 나타난 응답자의 여가생활에 대한 낮은 욕구는 여가와 여행에 대한 욕구 수준이 낮다고 해석하기보다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실행 능력(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3-17> 문화와 여가 관련 박탈지표

(단위: %)

	가족(자녀)과 함께 하는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영화, 공연 등)에 대한 인식 및 실태	여행(1년에 1번 2~3일간 가족여행)에 대한 인식 및 실태
꼭 필요하며 가고 있음	42.8	33.3
필요하지만 가지 못함	5.8	12.1
갈 수 있으면 좋고 가고 있음	16.4	8.8
갈 수 있으면 좋지만 가지 못함	35.0	45.8
전체	100	100

자료: 이태진 등. (2014). 2014년 복지욕구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354-355.

4. 자녀교육: 고등교육과 사교육

인간의 생존 이외에도 성장과 발전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필수적인 욕구 중 하나가 교육이다. 특히 가족을 중심으로 사회를 구성하고, 국가의 정치사회 문화가 가족 중심으로 전개되는 북한에서는 가족이 최

소 단위의 공동체이다. 그리고 가족공동체를 영위하고 재생산해 나가는 데 필수적인 사항이 자녀교육이다. 이미 여러 조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북한 주민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북한은 무상·의무교육 제도를 북한식 사회주의의 가장 우월한 제도의 하나로 선전해 왔지만 1990년대 경제난 이후 국가의 역할은 매우 축소된 형태로 작동하고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크게 손상된 상태이다. 이에 현실에서는 국가가 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서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직·간접적인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부모의 경제적 역할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도 그렇지만 북한에서도 많은 부모들은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자리에 가거나 그러한 일을 하기 원하고 이를 위해서는 좋은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본 연구는 통일 대비 북한의 자녀교육에 관한 육구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100인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표 3-18>에서 보듯 일반교육과 사교육에 관한 두 가지 조사 항목으로 교육육구를 조사하였다.

첫 번째 조사 항목인 “귀하는 자녀에게 고등교육(대학교 이상)을 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은 ‘꼭 필요하다’(92%)라는 응답이 절대 다수로 나타났다. 두 번째 조사 항목인 “귀하는 자녀에게 사교육(학교 수업 외 개인강습)을 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은 ‘꼭 필요하다’(51%)라는 응답이 절반을 차지하였다.

북한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12년제 의무교육체계는 학교 전 1년-인민학교-고등중학교까지이며 고등교육 단계인 대학교육은 선택사항이다. 대다수가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며, 군대를 거쳐 사회 진출의 발판으로 대학 교육을 받고 있다. 대학교육이 필수적 과정이 아닌 북한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본 조사에서 나타난 ‘대학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92%의 응답 결과는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높은 욕구 수준을 알 수 있다.

사교육에 관한 욕구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2015년 북한사회변동』(장용석 등, 2016)에 의하면 “북한에 거주할 당시에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의에 2014년에 20.4%가, 2015년엔 27.7%의 응답자가 ‘있다’고 답하여 사교육 경험의 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서울대 측의 사교육 경험 빈도(27.7%)와 본 조사의 통일 이후 사교육 욕구 빈도(51%)의 차이는 거의 2배에 달한다. 이것은 응답자의 자녀교육에 대한 고등교육 및 사교육에 관한 높은 욕구 수준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18〉 자녀교육-고등교육과 사교육

(단위: %)

	귀하는 자녀에게 고등교육(대학교 이상)을 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자녀에게 사교육(학교 수업 외 개인강습)을 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하다	92	51
하면 좋다	5	41
꼭 필요하지는 않다	2	7
무응답	1	1
총계	100	100

일반적으로 자녀교육은 부모의 교육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교육의 기대와 열의는 더욱 높다는 양의 관계를 보여준다. 본 조사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교육과 부모의 교육 수준 간의 관계를 교차분석해 보았다.

〈표 3-19〉에서 보듯 첫 번째 조사문항에서는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

수록 자녀의 고등교육(대학교 이상)이 꼭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 조사문항에서는 부모의 교육 수준이 낮은 구간에서 꼭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사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한다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자녀교육이 계층 혹은 계급 간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

〈표 3-19〉 자녀교육-고등교육·사교육-교육 수준 간 교차분석

(단위: 건)

		교육 수준						총계
		대학원	대학	전문학교	중학교 (초,고)	무학	기타	
자녀 교육 - 고등 교육	무응답	0	0	0	1	0	0	1
	꼭 필요하다	2	11	20	56	2	1	92
	하면 좋다	0	0	1	4	0	0	5
	꼭 필요하지는 않다	0	0	0	2	0	0	2
총계		2	11	21	63	2	1	100
자녀 교육 - 사교육	무응답	0	0	0	1	0	0	1
	꼭 필요하다	1	4	8	35	2	1	51
	하면 좋다	0	7	11	23	0	0	41
	꼭 필요하지는 않다	1	0	2	4	0	0	7
총계		2	11	21	63	2	1	100

자녀교육이 계층 간 이동 사다리로 작용하고 있다면 어느 직업군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은지 파악하기 위해 자녀교육과 부모의 직업군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보았다.

〈표 3-20〉에서 보듯 첫 번째 조사문항에서는 모든 직업군에서 자녀의 고등교육(대학교 이상)이 ‘꼭 필요하다’(100%)고 답했다. 다만, 농장원

(협동/국영농장)의 ‘꼭 필요하다’는 응답이 80.0%로 낮게 나타났다. 북한에서는 농업인구의 도시유출을 막기 위해 협동농장의 농장원 신분을 도시 노동자로 변경할 수 없다. 고등교육(대학교 이상)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이 같은 북한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두 번째 조사문항인 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직업군별 상관관계는 편차를 보였다. 사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응답은 봉사원(100%), 군인(75%), 부양주부(61.9%) 순으로 나타났다. ‘하면 좋다’라는 응답은 해외 파견일꾼(100%), 학생(100%), 의사·간호사·약사(75%) 순이었다. 노동자, 사무원, 교원, 농장원 등 일반적인 직업군보다는 특수목적형 직업군에서 사교육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이 더욱 개방적인 교육기회를 원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표 3-20〉 자녀교육-고등교육·사교육-직업 간 교차분석

		직업													총계
		응답 오류, 중복응답	군인	노동자	사무원	교원	농장원 (협동/ 국영농장)	해외 파견 일꾼	봉사원	의사 간호사 약사	학생	부양	기타		
자녀 교육 - 고등 교육	무응답	0	0	1	0	0	0	0	0	0	0	0	0	0	1
	꼭 필요하다	1	4	26	10	2	8	1	1	4	1	19	15	92	
	하면 좋다	0	0	1	1	0	2	0	0	0	0	1	0	5	
	꼭 필요하지 않다	0	0	1	0	0	0	0	0	0	0	1	0	2	
총계		1	4	29	11	2	10	1	1	4	1	21	15	100	
자녀 교육 - 사교육	무응답	0	0	1	0	0	0	0	0	0	0	0	0	1	
	꼭 필요하다	0	3	16	3	1	5	0	1	1	0	13	8	51	
	하면 좋다	1	1	10	6	1	5	1	0	3	1	6	6	41	
	꼭 필요하지 않다	0	0	2	2	0	0	0	0	0	0	2	1	7	
총계		1	4	29	11	2	10	1	1	4	1	21	15	100	

(단위: 건)

(단위: 건)

5. 사회관계-친구와 결혼

인간의 생존과 발전에 관한 기본적인 욕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나 장소 또는 한 사회의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지향하는 이념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사회관계에 대한 욕구는 인간 본연의 욕구이며 사회적 자본의 하나인 인간의 사회관계는 이와 같은 기본 욕구의 질을 높이는 네트워크의 역할을 수행한다(Maslow, 1970).

북한은 주민들의 가족관계와 사회적 경험에 국가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강력한 국가적 통합을 유도하고 사회의 세포로서 국가권력 의지에 복종하도록 조직화해 왔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사회관계는 이웃간에 오랫동안 정주된 생활을 하면서 전통적 상호관계가 유지되는 편이며 관계 중심적이고 관계 의존적인 성향이 농후한 특징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활동 토대가 변화하자 가족은 국가주의 가족에서 개인주의 가족으로 분화되고 있다(박현선, 2003).

극심한 사회변동 속에서 기본욕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애정의 욕구, 집단 속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승인의 욕구, 소속의 욕구 등 사회관계에 관한 욕구(Maslow, 1970)는 결핍의 상태를 맞고 있다. 향후 사회관계에서 요구되는 욕구 충족의 여하는 이들의 사회생활 및 사회적 관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기본적인 사회관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응답자의 가장 작은 사회적 관계인 결혼과 친구의 영역에서 사회관계욕구를 조사하였으며, 이들의 사회적 가치관을 함께 고찰하고자 하였다.

가. 사회관계: 친구 필요성

첫 번째 조사 항목인 “귀하는 어려울 때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웃이나 친구가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의 결과 ‘꼭 필요하다’(51%), ‘하면 좋다’(45%), ‘꼭 필요하지는 않다’(4%)의 순으로 나타났다.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4명을 제외하고 96명만을 대상으로 “귀하는 어려울 때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웃이나 친구가 몇 명이나 필요하십니까?”라는 개방형 질문을 한 결과 1명(32%)이 가장 많았고, 3명(23%), 2명(22%), 5명(9%) 순으로 뒤를 이었다. 평균 2~3명의 친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3-21〉 사회관계-친구 필요성

(단위: 건, %)

친구 수	빈도	누적 비율		빈도	누적 비율
응답 오류	4	4.1	꼭 필요하다	51	51.0
1	32	36.7	하면 좋다	45	96.0
2	22	59.2	꼭 필요하지는 않다	4	100
3	23	82.7	-	-	-
4	2	84.7	총계	100	100
5	9	93.9			
10	5	99.0			
20	1	100			
총계	100	100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관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유사한 조사로 『2016년 사회통합조사』(장인숙 등, 2017a)에는 북한이탈주민이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에 필요로 하는 주변 사람(친지, 친

구 등)이 3.3명으로 조사된 바 있다. 본 조사는 통일 이후를 가정했음에도 사회관계에 대한 기대와 욕구는 현재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회관계는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연령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느 연령대에서 친구나 이웃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령별 교차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3-22〉에서 보듯 친구가 필요하다는 연령별 응답률은 30대(29%), 20대(28%), 40대(25%) 순으로 나타났다. 1명만 있으면 된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대(44%)이며, 2명만 있으면 된다는 응답은 40대(28%)가 가장 높았다. 3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대(28.6%)이다. 4명보다는 5명을 선택한 응답자가 더 많았고,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의향을 보인 연령대는 20대와 30대이다.

〈표 3-22〉 사회관계-친구 필요성-연령별 교차분석

(단위: 건)

		연령대					총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사회관계 _친구 필요성	꼭 필요하다	12	16	13	9	1	51
	하면 좋다	14	13	12	6	0	45
	꼭 필요하지는 않다	3	1	0	0	0	4
총계		29	30	25	15	1	100

나. 사회관계: 결혼

사회관계의 두 번째 조사 항목인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물음에는 ‘하는 편이 좋다’(41%), ‘반드시 해야 한다’(36%),

‘꼭 할 필요는 없다’(23%)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3>에서 보듯 연령별로는 50대(46.7%)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20대(41.4%)는 ‘꼭 할 필요는 없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표 3-23> 사회관계-결혼-연령별 교차분석

(단위: 건)

		연령대					총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사회관계 _결혼	반드시 해야 한다	6	12	10	7	1	36
	하는 편이 좋다	11	15	9	6	0	41
	꼭 할 필요는 없다	12	3	6	2	0	23
총계		29	30	25	15	1	100

유사한 조사 항목으로 『2016년 사회통합조사』(장인숙 등, 2017a) 중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묻는 답변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부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것이 좋다(50.6%)’,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다(42.1%)’, ‘결혼을 하지 않고 이성과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31.2%)’,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29.8%)’ 등의 답변은 현재 북한 주민들이 결혼에 대한 기대가 낮고 결혼 제도에 대한 신뢰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북한이탈주민이 1990년대 경제난 이후 결혼관계가 파탄나고, 탈북과 한국 입국과정에서 이들이 체험한 현실을 통해 변화된 결과로 보인다.

6. 사회이동: 거주지 선택

사회이동은 통일 이후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환경과 조건을 바탕으로 이동과 거주에 관한 사회적 욕구이며,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구,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책임져 보고 싶은 욕구 등에 관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특유의 욕구에 관한 질문이다. 특히 통일이 되었다는 가정과 전제는 북한이라는 삶의 터전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이고, 통일 한반도 어느 곳에서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개척과 창조의 기회이다.

본 조사는 사회이동의 욕구를 통일 후 남과 북 어느 쪽으로의 이동욕구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동욕구의 이유는 무엇인지를 조사하기 위해 전제조건을 달아 두 측면으로 질문하였다.

〈표 3-24〉에서 보듯 첫 번째 조사 항목은 “귀하가 만일 통일 후 북녘에 계속 거주한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였다. 조사 결과 ‘고향에 대한 애착’(40%)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가족 또는 친척’이 25%로 뒤를 이었다. 고향과 가족이라는 공동체적 생활에의 욕구가 북한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싶어 하는 원인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조사 항목은 “귀하가 만일 통일 후 남녘으로 이주한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였으며, 조사 결과 ‘생활환경’(42%)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헤어진 가족’(22%), ‘취업’(11%)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4〉 사회이동-거주지 선택

(단위: 건)

순위	귀하가 만일 통일 후 북녘에 계속 거주한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하가 만일 통일 후 남녘으로 이주한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택항목	빈도	선택항목	빈도
1	고향에 대한 애착	40	생활환경	42
2	가족 또는 친척	25	헤어진 가족	22
3	직업(경제활동)	14	취업	11
4	생활환경	9	장사/사업	9
5	건강	5	교육	9
6	교육	2	건강	4
7	주택(살림집)	2	기타	2
8	사회보장	1	결혼	1

일반적으로 통일 이후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에 의해 북에서 남으로의 인구 이동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이며, 이는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견되었었다. 그러나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은 고향, 가족, 친척이라는 가족공동체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북녘 거주를 선택하였고, 남한으로의 이동 또한 헤어진 가족 등 가족공동체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발표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17 북한사회변동』(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에 따르면 “귀하는 통일이 되면 어느 지역에서 거주할 생각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은 ‘남한에서 살 것’(44.7%), ‘북한에서 살 것’(31.8%), ‘상황에 따라 어디든’(22.7%), ‘외국에 나가서 살 것’(6%) 순으로 나타났다.

‘탈북자’라는 샘플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0%가 넘는 응답자가 통일 후 북한에서 살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들이 통일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 번영이 아닌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환경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조사 자료이다.

응답자의 사회이동 및 가치관에 관한 조사를 통해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배우자에 대한 신뢰는 낮으나 부모와 형제 및 자녀 등 혈연관계에 대한 신뢰와 의존감은 여전히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2절 근로욕구

통일 대비 복지욕구 조사의 두 번째 조사 항목인 근로욕구에 관한 조사는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일자리와 노임, 직업교육 및 자녀보육 등의 경제활동 여건과 사회보장비 항목으로 진행하였다.

본 조사가 차용하고 있는 매슬로(Maslow)의 욕구이론에 의하면, 의식, 주 등 삶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욕구는 기본욕구이자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이다. 인간은 기본 욕구/생리적 욕구를 바탕으로 안정(Safety), 소속과 애정(Belonging and Love), 존중(Esteem),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 욕구로 발달한다. 근로[노동]의 욕구는 매우 복합적 성격의 욕구라 할 수 있다. 근로[노동]욕구는 기본 욕구,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서 어딘가에 소속되어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고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자 결과이기도 하다.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근로욕구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근로욕구는 질적으로 다를 수 있다.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주민은 체제 전환에 따른 근로욕구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현재 북한 사회에서 경제환경이 빠르게 변화하여 시장경제적 요소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통일 후에 북한 주민

이 경험하게 될 근로육구의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통일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북한 주민의 근로육구를 파악하기 위해 이 연구는 노동시간, 근로의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노동정책,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정책, 사회보장비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노동시간에 대한 육구

가. 하루 평균 노동시간

한국사회는 세계적으로 노동시간이 길기로 악명이 높다. 경제협력기구(OECD)의 ‘2017 고용동향(2016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OECD 국가들 중에서 멕시코에 이어 2번째로 긴 것으로 집계되었다. 어쩌면 한국 국민들에게 긴 노동시간은 자연스러운 노동환경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의 경우 통일 후에 하루 평균 얼마의 노동을 희망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귀하는 하루 평균 몇 시간 일하기를 원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표 3-25>에서 나타나듯, 8시간이라고 답한 비율이 7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10시간 이상은 12%, 7시간 이하가 9%로 나타났다.

현재 북한 사회에서는 공식 노동체제가 상당히 와해된 상태이고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공식 소득원과 비공식 소득원을 동시에 갖는 이중적인 직업체제에 익숙하다. 비록 사회주의노동법 제16조에 “근로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이다”(북한정보포털, 1978)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1990년대 이후 공식 노동체제가 와해된 이후에 하루 8시간 노동제도는 유명무실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설문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북한 주민들에게 하루 8시간은 이상적인 노동시간으로 인식이 고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5〉 희망하는 하루 평균 근로시간

(단위: 건, %)

구분	빈도	비율
6시간	7	7.0
7시간	2	2.0
8시간	77	77.0
10시간	11	11.0
12시간	1	1.0
기타	1	1.0
무응답	1	1.0
합계	100	100.0

나. 1일 8시간 노동제

좀 더 직접적으로 “귀하는 ‘하루 8시간 노동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질문한 결과 〈표 3-26〉에서 보이듯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94%(‘매우 동의’ 84%+‘약간 동의’ 7%)에 달했다. 공식 직업과 비공식 직업을 동시에 갖는 이중적인 직업체제로 인해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하루 공식 노동시간(8시간)보다 더 긴 노동시간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해 상당한 피로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일 후에 8시간 노동제도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26〉 1일 8시간 근로에 대한 견해

(단위: 건, %)

	빈도	비율
매우 동의한다	84	84.0
약간 동의한다	7	7.0
보통이다	7	7.0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2	2.0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0	0.0
합계	100	100.0

다. 초과 근무

북한 주민은 하루 평균 8시간 노동제에 대해 강한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더 많은 노임 또는 생활비를 받기 위해 야근 또는 연장근무와 같은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갖는 이중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귀하는 ‘더 많은 노임(생활비)을 받기 위해 야근 또는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질문한 결과 〈표 3-27〉에 나타나듯 ‘동의한다’는 응답률이 90%(‘매우 동의’ 64%+‘약간 동의’ 2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4%로 매우 낮았다. 이와 같은 응답 결과는 대체로 북한 주민이 낮은 경제수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노동의 질보다는 추가 소득의 필요성으로 인해 초과근무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수용의식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27〉 초과근무에 대한 견해

(단위: 건, %)

	빈도	비율
매우 동의한다	64	64.0
약간 동의한다	26	26.0
보통이다	6	6.0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	3.0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	1.0
합계	100	100.0

성별, 연령대, 학력 수준, 직업, 소득 수준 등 다양한 변수들과 초과 근무에 대한 견해의 문항을 교차분석한 결과, 흥미롭게도 직업(비공식) 변수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비공식 직업이 무엇이냐에 따라 초과근무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3-28〉에 나타나듯, 북한에서 장마당, 운수, 공업생산, 샷별이, 돈장사에 종사했던 응답자의 경우 대체로 초과근무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80% 이상으로 나타난 반면에, 음식장사, 편의봉사에 종사했던 응답자의 경우는 초과근무에 동의하는 비율이 50% 이하였다. 전자의 경우 노동시간이 길수록 소득의 크기가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노동시간이 길더라도 소득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초과근무에 대해 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직업은 운수(85.7%)와 샷별이(85.7%)인데 이 직업들은 특히 노동시간이 길수록 소득의 크기가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성격이 강하다.

〈표 3-28〉 비공식 직업별 초과근무에 대한 견해

(단위: %)

	동의함	보통	동의하지 않음
장마당	81.9	9.1	9.1
음식장사	50.0	0.0	50.0
편의봉사	40.0	0.0	60.0
운수	85.7	0.0	14.3
공업생산	80.0	0.0	20.0
샅별이	85.7	0.0	14.3
거간꾼	71.5	14.3	14.3
돈장사	80.0	0.0	20.0

주: 비공식 직업 중 되거리 장사, 텃밭·뽕기밭 경작, 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표에 포함시키지 않음.

2. 근로 의지

가. 국가의 일자리 제공

북한에서 노동 참가는 의무로 되어 있다. 사회주의로동법 제4조에 “사회주의하에서 국민은 로동에 참가할 의무를 지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 능력이 있는 모든 국민은 자기 능력에 따라 사회적 로동에 참가한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북한정보포털, 1978)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군복무와 진학의 사유가 아니라면 중학교 졸업 이후 모든 북한 남녀는 어떤 곳에서라도 일을 해야 하며, 무직 상태로 있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사회주의헌법 제70조에 의하면 “국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 능력이 있는 모든 국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한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북한정보포털, 2016)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 북한 주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는 매우 제약

되어 있다. 고등교육을 받은 노동력의 대부분은 국가에서 직장을 배치한다. 부모가 만일 농림수산업과 광업 등에 종사했다면 그의 자녀 역시 부모와 같은 일을 되풀이해야 한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살아온 북한 주민은 통일 후 노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통일 후 귀하는 ‘국가는 원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견해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표 3-29>에 나타나듯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91%('매우 동의' 85%+'약간 동의' 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편으로는 노동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국가가 정해 주는 노동방식에 익숙해 있다고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북한 주민의 근로욕구와 남한 주민의 근로욕구가 일정 정도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2014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남한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보고서 『2014년 복지욕구 실태조사』에 의하면, 남한 주민의 경우 국가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이 79.8%('매우 동의' 42.8%+'약간 동의' 39.0%)로 북한 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와 같은 응답 차이는 국가가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북한 주민과, 일자리는 개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남한 주민의 인식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표 3-29> 국가 일자리 제공 의무에 대한 견해

(단위: %)

	북한 주민	남한 주민
매우 동의한다	85.0	42.8
약간 동의한다	6.0	39.0
보통이다	6.0	13.6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0	4.22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0.0	0.33

주: 남한 주민의 자료는 이태진 등(2014), 2014년 복지욕구실태조사, p. 144에서 인용.

나. 직업교육/재교육의 필요성

통일 후 남북한의 노동시장이 통합될 경우 북한의 노동력이 남한의 노동력의 질적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어렵지 않다. 남북하나재단의 『2016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장인숙 등, 2017b)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은 55.0%로 일반 국민의 고용률 61.0% (실업률 3.6%)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취업을 돕기 위해 남한 정부는 재교육과 직업훈련의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재교육과 직업훈련 참여 수준은 높은 편이 아니다. 『2016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장인숙 등, 2017b)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 중 남한에서 학교에 다닌 경험이 있는 경우는 28.8%, 학교에 다닌 경험이 없는 경우는 68.8%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2016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장인숙 등, 2017a) 보고서에 의하면 직업훈련을 수료하면 제공받는 직업훈련장려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은 46.1%로 수령한 적이 없다는 비율 52.8%보다 적게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재교육과 직업훈련에 적극적이라고 볼 수 없다.

통일 후의 사회에서 북한 주민은 취업을 위해 직업교육이나 재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해 보았다. 그 결과 <표 3-30>에 나타나듯 취업을 위해 직업교육이나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한다’는 응답률이 95%('매우 동의' 73%+'약간 동의' 22%)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 3-30〉 직업교육 및 재교육 필요성

(단위: 건, %)

	빈도	비율
매우 동의한다	73	73.0
약간 동의한다	22	22.0
보통이다	4	4.0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1	1.0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0	0.0
합계	100	100.0

취업을 위해 직업교육이나 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고 해서 반드시 자신이 직접 직업교육이나 재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귀하는 직장을 얻기 위해 직업교육이나 재교육을 받을 용의가 있으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90%로 직업교육 및 재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2016년 발표된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조사 결과처럼 실제로 재교육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한 비율에 비하면 통일 후에 취업을 위한 재교육이나 직업훈련의 필요성과 참여에 대한 의지는 매우 높다.

〈표 3-31〉 직업교육 및 재교육 참여

(단위: 건, %)

	빈도	비율
매우 동의한다	61	61.0
약간 동의한다	29	29.0
보통이다	5	5.0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	3.0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2.0
합계	100	100.0

3. 사회적 약자 우선 채용에 대한 배려

우리 사회는 장애인, 유공자 자녀,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 마련과 함께 그들을 배려하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거나 채용 선발과정에서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일찍부터 정착되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해 보았다. 장애인, 영예군인(남한의 상이군인), 유자녀 가족(남한의 유공자 가족), 한부모 가족이 취업 과정에서 우대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사회적 약자의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표 3-32〉에서 보듯 장애인과 영예군인을 취업에서 우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비율이 93%로 나타난 반면, 유자녀 가족과 한부모 가족을 취업에서 우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비율이 83%로 격차가 컸다. 이 결과는 장애인과 영예군인은 공통적으로 장애가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취업에서 우대받는 것에 대한 공감도가 유자녀 가족이나 한부모 가족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비록 사회적 약자의 유형에 따라 취업 우대에 대한 응답 격차가 나타났을지라도 그들의 취업 우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과 영예군인의 취업 우대에 대해서는 1%의 응답자만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유자녀 가족과 한부모 가족의 취업 우대에 대해서는 각각 5%, 2%의 응답자만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견해를 표시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북한 주민의 포용력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다.

〈표 3-32〉 사회적 약자의 취업 우대에 대한 견해

(단위: %)

	동의함	보통	동의 안 함
장애인	93.0	6.0	1.0
영예군인	93.0	6.0	1.0
유자녀 가족	83.0	12.0	5.0
한부모 가족	83.0	15.0	2.0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가운데서 연령이 영예군인 취업 우대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표 3-33〉에 나타나듯 연령층이 높을수록 영예군인의 취업 우대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20대의 경우는 86.2%가 동의한다고 응답한 반면, 30대 93.4%, 40대 96%, 50대 이상은 100%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이 응답 결과는 영예군인에 대한 사회적 포용력이 노·장년층보다는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영예군인을 제외한 다른 사회적 약자들, 즉 장애인, 유자녀 가족,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연령의 차이에 따른 응답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3〉 연령별 사회적 약자(영예군인)의 취업 우대에 대한 견해

(단위: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동의함	86.2	93.4	96.0	100.0	100.0
보통	13.8	6.7	0.0	0.0	0.0
동의 안 함	0.0	0.0	4.0	0.0	0.0

이밖에 교육 수준의 차이에 따라 유자녀 가족의 취업 우대에 대한 응답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4〉에서 보듯 낮은 학력의 응답자보다는 높은 학력의 응답자가 유자녀 가족의 취업 우

대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교와 전문학교 졸업자는 공통적으로 90.9%가 ‘동의한다’고 응답한 반면, 중학교 졸업자와 무학자의 경우 각각 85.7%, 50%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교육 수준이 낮은 집단보다는 높은 집단이 유자녀 가족에 대한 포용력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3-34〉 교육 수준별 사회적 약자(유자녀 가족)의 취업 우대에 대한 견해

(단위: %)

구분	대학원	대학교	전문학교	중학교	무학	기타
동의함	0.0	90.9	90.9	85.7	50.0	100.0
보통	50.0	9.1	14.3	11.1	0.0	0.0
동의 안 함	50.0	0.0	4.8	3.2	50.0	0.0

4. 경제활동과 보육 문제

한국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은 노동생산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출산과 자녀 양육 문제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최근 연도에 여성의 경력지속의 장애요인으로 육아 부담이라는 응답이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이정희, 2014, p. 310). 이처럼 자녀 보육문제는 경제활동의 지속과 단절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북한 여성의 사정은 더 열악하다.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와 장기적 경제 침체로 인해 북한 여성은 가족 부양과 자녀 양육 부담을 전적으로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자녀 돌봄이 국가 또는 사회의 영역이었던 것과 달리 경제침체 이후 개인의 영역으로 옮겨지면서 북한 여성의 경제활동 환경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통일 후 새롭게 재편될 노동시장

에서 북한 주민의 경우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미취학 자녀의 보육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기대하는지 살펴보았다.

〈표 3-35〉에서 보이듯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보내겠다는 응답률이 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부모 또는 친인척의 도움을 받거나 보모를 고용하겠다는 응답률은 각각 4%, 8%로 매우 낮았으며, 일을 그만두고 직접 돌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6%에 불과했다. 이 결과는 통일 후에 북한 주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 표시와 함께 보육문제를 국가나 사회에서 해결해줄 것으로 크게 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일 대비 북한 지역의 보육인프라 확충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3-35〉 경제활동 시 미취학 자녀 보육 형태

(단위: 건, %)

	빈도	비율
보육시설에 보냄	82	82.0
조부모 또는 친인척에 맡김	4	4.0
보모 고용	8	8.0
일 그만두고 직접 돌봄	6	6.0
합계	100	100.0

5. 사회보장비 의무 징수에 대한 인식

북한은 ‘사회보험법’과 ‘사회보험료 납부절차에 관한 규정’이 1946년에 제정되는 등 국가의 사회보장체계가 일찍부터 제도화되었다. 위의 법률에 따라 기관 및 단체는 임금 총액의 5~8%를 사회보험료로 국가에 납부해야 하고, 피보험자, 즉 노동자들은 보수의 1%를 사회보험료로 의무

납부하였다. 사회보험 납부비율표가 있어 임금의 5% 납부는 행정·금융 기관·정당·사회단체에 해당되고, 임금의 6% 납부는 교육·의료·체신기관에, 임금의 7% 납부는 섬유·피복공업에, 임금의 8% 납부는 광업·토건업에, 임금의 10~12% 납부는 개인 기업에 해당되었다(문형표, 이지혜, 2013, p. 38).

그런데 이러한 차등적인 사회보험료 납부비율은 2006년을 기점으로 하나로 통합된 것으로 추정된다. 2006년 5월 26일자 데일리NK(2006) 기사에 의하면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4차 회의에서 2006년부터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을 위해 각 기관, 기업소의 이득금에서 7%를 국가에 납부하게 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반면,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의하면 기업은 월 노임 총액의 15%를 사회보험료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북한 주민과 기업 및 단체는 사회보험료를 매월 국가에 납부해왔다. 물론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계획경제가 상당 부분 와해되고, 경제에서 비공식 부문과 비제도 부문이 크게 증가하면서 사회보험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북한 주민의 상당수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은 통일 후에 자신의 월 노임(생활비)에서 사회보장비를 의무적으로 징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자. 설문조사 결과 <표 3-36>에 보이듯 ‘동의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89%(‘매우 동의’ 72%+‘약간 동의’ 17%)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2%에 불과했다. 9%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이 결과는 통일 후에 북한 지역에 사회보험 의무 제도를 일괄 적용하더라도 북한 주민이 큰 거부감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현재 북한 주민 개인

(피보험자)의 사회보험료가 월 노임(보수)의 1% 수준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통일 후에 부과될 높은 부담률에 대해서는 저항이 클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표 3-36〉 사회보장비 의무 징수에 대한 견해

(단위: 건, %)

	빈도	비율(%)
매우 동의한다	72	72.0
약간 동의한다	17	17.0
보통이다	9	9.0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1	1.0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	1.0
합계	100	100.0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중에서는 직업(비공식)에서 사회보장비 의무 징수에 대해 응답 집단 간의 견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3-37〉에 나타나듯, 편의봉사, 공업생산에 종사하던 응답자의 경우 사회보장비 의무 징수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공통적으로 80%로 높은 편이다. 반면 운수, 거간꾼, 장마당에 종사하던 응답자의 경우는 사회보장비 의무 징수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각각 57.1%, 57.1%, 63.6%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기관 및 단체와 연계된 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노임에서 사회보장비를 의무적으로 징수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 태도를 보인 반면에, 개인 수준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사회보장비 의무 징수에 대해 덜 수용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따라서 통일 후 북한 지역에 의무적인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하는데 직업의 차이에 따라 수용 태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며, 직

장 가입자보다는 지역 가입자의 수용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37〉 비공식 직업별 사회보장비 의무 징수에 대한 견해

(단위: %)

	동의함	보통	동의하지 않음
장마당	63.6	18.2	18.2
음식장사	0.0	0.0	100.0
되거리	78.5	7.1	14.2
편의봉사	80.0	0.0	20.0
운수	57.1	28.6	14.3
공업생산	80.0	0.0	20.0
샅별이	71.5	0.0	28.6
거간꾼	57.1	14.3	28.6

주: 비공식 직업 중에서 텃밭, 돈장사, 밀수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표에서 제외함.

제3절 소득보장욕구

어느 사회에서든 적절한 수준의 소득이 보장될 때 사람은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그 사회는 안정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보장이 이뤄져야 한다. 생계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을 꾸려 나가는 행위이자 원초적인 욕구이며, 나아가 당시 사회에서 통용될 정도의 사회적 공감대와 함께 일정 수준 이상의 질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이태진 등, 2014, pp. 175-181). 때로 생계가 위협받았을 때에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은 사회보장법의 기본 취지이기도 하다.

1990년대 이전까지 모든 북한 주민은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을 국가로부터 균질적으로 보장받았다. 완전고용, 배급제, 주택(살림 집) 제공,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등이 기본 생계를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 정책들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북한 사회는 극심한 경제침체로 인해 국가에 의한 생계 부양 체제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며, 북한 주민 스스로가 알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자력更生체제’가 되었다. 급속한 시장화의 진전으로 북한 주민은 이전보다 더 높은 소득을 얻게 되었지만 높은 물가, 불평등의 심화, 부패의 만연 등으로 삶의 질은 매우 열악한 상태이며, 항시적 생계 불안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은 북한 사회의 현실 속에서 통일 후 사회에서 기대하는 북한 주민의 소득보장욕구가 어떤 수준인지 파악함으로써 현실적 통일 대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소득보장욕구에 대한 설문조사는 크게 소득에 대한 기대 수준, 대체소득 대비의 필요성,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견해로 범주화 하여 실시되었다.

1. 소득에 대한 기대 수준

가. 가구 기본소득

가구 기본소득 보장은 통일 후 북한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통일 후 사회에서 기대하는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 사회적 갈등과 불만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남북하나재단의 『2016 정착실태조사』(장인숙 등, 2017b)에 의하면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 중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150만~200만 원 미만’ 수준이 31.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어 ‘100만~150만 원 미만’ 27.6%, ‘200만~300만 원 미

만' 22.2%, '50만~100만 원 미만' 8.8%, '300만 원 이상' 6.4%, '50만 원 미만' 3.1%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임금 수준에 대해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행복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월평균 가구 소득액은 '300만 원 이상'이 50.1%로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평균 소득액은 316만 6000원(약 2826달러)으로 조사됐다.³⁾ 이처럼 남한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소득에 대한 현실과 이상 간의 큰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통일 후 북한지역에 거주할 주민들은 소득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자. 2015~2016년에 북한에 거주했던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전 소득 수준을 조사해 보면, 공식 월평균 소득의 평균값은 북한 원화로 약 1만 4579원이었으며, 비공식 월평균 소득 평균값은 약 98만 3853원(약 140달러)으로 나타났다.⁴⁾

그런데 통일 후 북한 지역에 사는 것을 가정했을 때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위해서 월평균 얼마의 소득(생활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표 3-38>에서 보이듯 500달러 미만이라는 응답이 51%('1~99달러' 6%+'100~499달러' 4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2000달러(20%)로 조사돼 월평균 가구 기본소득에 대한 양극화 경향이 나타났다. 평균값은 약 1210달러로 조사됐다. 이 응답 결과는 북한에서의 경제적 수준과는 통계적으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조사 결과는 현재 소득 수준에 비해 통일 후 기대하는 소득 수준이 8.5배 높은 것으로, 그만큼 높은 생활 수준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남한 사회에서 거주할 때 행복감을 충족할 수 있는 월평균

3) 달러로 표시한 금액은 현재 남한의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1달러=1120원)을 적용한 것이다.

4) 달러로 표시한 금액은 현재 북한에서 거래되는 달러 암시장의 환율(1달러=7000원)을 적용한 것이다.

가구소득(약 2826달러)에 비해 통일 후 북한지역에서 거주할 때 필요한 월평균 가구당 기본소득(약1210달러)이 2분의 1 미만 수준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3-38〉 통일 후 북한지역 거주 시 필요한 가구(4인 가족)의 월평균 생활비

(단위: 건, %)

	빈도	비율
100\$ 미만(1~99\$)	6	6.0
500\$ 미만(100~499\$)	45	45.0
1,000\$ 미만(500~999\$)	17	17.0
1,500\$ 미만(1,000~1,499\$)	9	9.0
2,000\$ 미만(1,500~1,999\$)	3	3.0
2,000\$ 이상(2,000\$~)	20	20.0
합계	100	100.0

나. 1인당 임금 수준

위에서 통일 후 필요로 하는 가구의 기본소득을 질문했다면, 다음으로 개인 근로자가 통일 후 취업 시 직장에서 월평균 얼마의 급여(임금)을 받기 원하는지 질문했다. 조사 결과 1인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임금)의 평균값은 약 930달러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39〉에서 보듯이, 500달러 미만이라는 응답이 54%(‘1~99달러’ 5%+‘100~499달러’ 49%)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다.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임금 수준은 2000달러 이상(24%)으로 위에서 살펴본 가구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임금에서도 양극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임금 수준에 대한 응답 결과 역시 북한에서의 경제적 수준과는 통계적으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3-39〉 통일 후 북한 지역 거주 시 필요한 월평균 급여(임금)

(단위: 건, %)

	빈도	비율
100\$ 미만(1~99\$)	5	5.0
500\$ 미만(100~499\$)	49	49.0
1,000\$ 미만(500~999\$)	9	9.0
1,500\$ 미만(1,000~1,499\$)	4	4.0
2,000\$ 미만(1,500~1,999\$)	8	8.0
2,000\$ 이상(2,000\$~)	24	24.0
무응답	1	1.0
합계	100	100.0

한편, 북한에서의 공식 소득 수준의 차이에 따라 통일 후 북한 지역에서 거주할 때 필요한 1인당 월평균 급여(임금) 수준에 대한 응답은 다르게 나타났다. 북한에서의 공식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통일 후 필요한 급여(임금) 수준도 낮았으며, 공식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통일 후 필요한 급여(임금) 수준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낮은 급여(임금)에서보다는 높은 급여(임금)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표 3-40〉에서 보듯, 공식 소득이 0원인 경우 16.7%, 1000원 이하는 20%, 5000원 이하인 경우 33.3%, 10만 원 이하는 66.7%가 월평균 급여(임금)로 2000달러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비공식 소득 수준의 차이에 따른 통일 후 1인당 월평균 급여(임금)에 대한 응답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0〉 공식 소득별 통일 후 북한 지역 거주 시 필요한 월평균 급여(임금)

(단위: %)

	0원	1천 원 이하	5천 원 이하	10만 원 이하	5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100\$ 미만 (1~99\$)	5.0	0.0	7.4	0.0	0.0	0.0
500\$ 미만 (100~499\$)	55.0	40.0	44.4	33.3	50.0	0.0
1,000\$ 미만 (500~999\$)	10.0	20.0	3.7	0.0	0.0	50.0
1,500\$ 미만 (1,000~1,499\$)	5.0	0.0	3.7	0.0	0.0	0.0
2,000\$ 미만 (1,500~1,999\$)	8.3	20.0	7.4	0.0	0.0	0.0
2,000\$ 이상 (2,000\$~)	16.7	20.0	33.3	66.7	0.0	50.0

2. 대체소득 대비의 필요성

누구나 불의의 사고나 질병, 그리고 노령 등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대체로 소득이 줄거나 끊기면서 생활고를 겪게 된다. 하지만 사회안전망이 잘 갖추어진 사회라면 갑작스런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해 개인이 받는 충격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체소득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 경제활동 중단에 의한 가계 및 삶에 대한 영향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대체소득은 공적 차원에서 보장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사적 차원에서 미리 대비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대체소득에 대한 대비책으로 크게 저축, 공적 연금(노령 연금), 사적 보험(보장성)에 대해 북한 주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았다.

〈표 3-41〉에 나타나듯, 대체로 저축과 공적 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높은 공감대를 보인 반면, 사적 보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축의 경우 ‘꼭 필요하다’는 응답이 87%, ‘하면 좋다’는 응답 13%, ‘필요 없다’는 응답은 0%로 나타나 저축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높은 공감대를 보였다. 노년을 대비한 공적 연금의 경우 ‘꼭 필요하다’는 응답이 74%, ‘하면 좋다’ 24%, ‘필요 없다’는 응답은 1%로 나타나, 저축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낮지만 그래도 높은 수준의 공감대를 보였다.

반면에 사적 보험(종신보험, 생명보험, 보장성 보험 등)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응답이 49%, ‘하면 좋다’ 46%, ‘필요 없다’는 응답이 5%로 나타나 저축, 공적 연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필요성을 덜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뢰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저축과 공적 연금의 경우 나중에 개인이 모두 되돌려받거나 더 많이 보장받을 수 있다는 높은 신뢰감이 있는 반면에, 사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의 경우 나중에 모두 되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낮은 신뢰감 때문에 상대적으로 필요성을 덜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표 3-41〉 저축·공적연금·사적 보험 필요성

(단위: %)

	꼭 필요하다	하면 좋다	필요 없음
저축	87.0	13.0	0.0
공적 연금	74.0	24.0	1.0
사적 보험	49.0	46.0	5.0

한편, 대체소득 대비의 필요성에 대한 남북한 주민의 욕구를 비교해 보면 〈표 3-42〉에서 보이듯 저축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이 상대적으로 필요성을 더 느끼며, 공적 연금과 사적 보험에 대해서는 남한 주민이 상대적으로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복지욕구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남한 주민의 경우 저축, 공적 연금, 사적 보험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69.3%, 76%, 75.6%로 조사됐다. 남한 주민은 낮은 금리로 인해 저축보다는 수익률과 보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적 연금과 사적 보험을 선호하는 것으로, 북한 주민은 연금이나 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에 대한 생소함과 이해의 부족으로 원금보장이 안정적인 저축을 각각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42〉 대체소득 대비 필요성에 대한 남북한 주민 비교

(단위: %)

	저축		공적 연금		사적 보험	
	북한 주민	남한 주민	북한 주민	남한 주민	북한 주민	남한 주민
꼭 필요하다	87.0	69.3	74.0	76.0	49.0	75.6
하면 좋다	13.0	20.7	24.0	24.0	46.0	27.4
꼭 필요하지 않다	-	-	1.0	-	5.0	-

자료: 남한 주민 자료는 이태진 등(2014), 2014년 복지욕구실태조사, p. 156에서 인용.

3.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견해

가. 국가의 실직자 기초생계 보장

통일을 가정했을 때 북한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데 사회보장정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독일 통일과 동유럽 체제 전환의 경험을 비추어 보았을 때 통일 후에 북한 지역의 높은 실업률이 예상된다. 그런 상황에 대비하여 북한 지역에서 실시할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사회보장정책에 대해 어떤 인식과 욕구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는 ‘국가는 실직자의 기초 생계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동의한다’

고 응답한 비율이 91%(‘매우 동의’ 77%+‘약간 동의’ 1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북한 사회는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라는 극심한 경제위기를 경험하였으며, 이때 국가의 거시경제가 붕괴되고 산업의 생산 활동이 중단되면서 수많은 실업자들이 양산되었다.⁵⁾ 그러나 북한당국은 이 실업자들을 구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기초생계를 떠받치고 있던 식량배급조차 중단되었다. 결국 그들은 굶어 죽거나 아니면 시장으로 들어가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만 했다. 그들 중 일부는 조국을 버리고 탈출을 감행하였다. 오랫동안 국가 배급에 의존해 생활했던 북한 주민들은 처음으로 실직에 의한 생계 위협을 경험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국가가 실직자들의 기초생계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의식을 강하게 가질 수 있다. <표 3-43>에 나타나듯, 국가가 실직자의 기초생계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욕구를 남한 주민(68.6%)에 비해 북한 주민(91%)이 훨씬 더 강하게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43> 실직자 기초생계 보장 의무에 대한 견해

(단위: %)

	북한 주민	남한 주민
매우 동의한다	77.0	30.2
약간 동의한다	14.0	38.4
보통이다	6.0	19.0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1.0	9.7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0	2.8

자료: 남한 주민 자료는 이태진 등(2014), 2014년 복지욕구실태조사, p.144에서 인용.

5) 엄밀하게 말하면, 북한 사회에서 실직의 의미는 직장에서 해고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생계가 가능한 실질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명목적 의미에서의 실직이 아니라 직장의 유명무실화이다. 북한 사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제활동 연령의 공민에게 ‘무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명목적으로 기관, 기업소, 단체 등에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수많은 북한 주민들은 어딘가에 소위 ‘적(籍)’을 두고 적과 전혀 상관없는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나.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 부담 증가의 수용성

북한 사회는 오랫동안 저부담-중복지의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해왔다. 비록 1990년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실질적으로는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이 크게 후퇴한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구조적 측면에서는 전통적 사회주의식 사회복지 모델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 사회는 조세 제도의 미발달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세금에 대한 인식은 낮은 수준이다.

위에서 사회보장 필요성에 대한 북한 주민의 높은 욕구를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사회보장 확대를 위한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호응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3-44>에서 보이듯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해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9%('매우 동의' 19%+'약간 동의' 30%)로 높은 반면에, '보통이다' 34%, '동의하지 않는다'는 16%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통일 후에 북한 주민들이 사회보장정책에 대해서는 높은 욕구를 표출하면서도 조세 저항은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동일한 질문에 대한 남한 주민의 응답 결과와 비교했을 때 남한 주민은 '동의한다'는 응답이 25.6%, '동의하지 않는다'는 51.7%로 나타나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수용의식이 북한 주민에 비해 더 낮다는 점에서 해석상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조세정책에 대해 남한 주민에 비해 북한 주민은 수동적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설문 조사에서는 북한 주민이 남한 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해 더 수용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주민의 조세 저항이나 회피가 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 3-44〉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견해

(단위: %)

	북한 주민	남한 주민
매우 동의한다	19.0	5.7
약간 동의한다	30.0	19.9
보통이다	34.0	22.9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10.0	26.2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6.0	25.5

자료: 남한 주민 자료는 이태진 등(2014), 2014년 복지욕구실태조사, p. 145에서 인용.

제4절 의료보장욕구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보건의 원칙은 ① 포괄적이고 양질의 보건의료 ② 수혜대상의 보편성 ③ 국가에 의한 단일의 통일된 서비스 ④ 무료서비스 ⑤ 광범위한 예방의료 ⑥ 보건서비스에 대중의 참여를 들 수 있다(정영철 등, 2011, p. 200). 북한 또한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같이 체제 형성 초기부터 사회주의적 보건의료체제를 지향하며 전반적 무상치료, 예방의학, 의사담당구역제 등을 추진한다.⁶⁾

남북의 보건의료보장 및 서비스 체계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남한의 의료보장은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인 국민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질병이나 부상 발생 시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관리 및 운영된다. 즉,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대비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북한의 경우 ‘무상치료’의 원칙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의 재정적 부담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 다른 특징은 의사담당구역제이다. 즉, 의

6) 사회주의헌법 제56조에 ‘전반적 무상치료제’, 선진적인 ‘의사담당구역제’, 치료에 예방을 선행시키는 ‘예방의학제도’등을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

사들이 일정한 구역을 담당하고 그 구역에서 발생하는 환자를 돌보는 제도이다.⁷⁾ 원칙대로라면 북한 주민은 평생 동안 담당구역의사로부터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받게 된다. 의사담당구역제는 질병 발생을 사전에 관리·차단하는 예방의학 제도를 기초로 한다.

보건의료정책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 중의 하나로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북한 보건·의료의 현실은 제도적 이상이 그대로 현실에 실현된 것은 아니다. 1990년대 경제난 시기에는 북한의 보건의료 체계가 마비되다시피 하였다. 보건의료체계가 마비되기 이전에도 이미 농촌과 같이 보건의료 서비스 환경이 미흡한 곳은 무상치료 혜택이 미치지 못했고, 의사담당구역제의 경우 의사 한 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가 천 명을 넘어 효과적인 진료 활동이 어려웠다(정영철 등, 2011, pp. 200-203).

김정은 집권 이후 대학병원 설립 등으로 제반 시설들을 구축하고, 의학 연구소, 의약품 공장에서의 연구·생산을 통해 낡은 의료기술과 부족한 약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건강 상태 및 진료 수준을 통해 간접적으로 비추어 볼 때 북한 의료보장 현실은 여전히 취약하다고 판단된다.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은 체제전환에 따른 의료보장 서비스의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본 절에서는 통일 대비 복지욕구 항목 중 북한 주민들의 의료보장욕구를 파악하고자 한다. 의료보장의 복지욕구는 국가의료보장에 대한 기대,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 가입 희망 여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위한 세금 추가 납부 의사, 의료비 부담, 정기적 건강검진 필요성, 진료 희망 병원의 형태, 치매환자 간병 등에 대한 욕구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7) 의사구역담당제는 “의사들이 일정한 지역을 맡아 그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돌보는 주민들에 대한 건강관리 책임제”라고 설명하고 있다(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 1988).

1. 국가 의료보험에 대한 욕구

북한 주민은 국가의료보험에 대해 매우 강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의 가입 필요성에 대해 ‘꼭 필요하다’가 62%로 매우 높았다. 이어 ‘하면 좋다’가 36%를 기록했다. ‘꼭 필요하지는 않다’는 2%로 매우 낮았다. 성별에 따른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국가의료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남성은 ‘꼭 필요하다’ 58.1%, ‘하면 좋다’ 39.5%, ‘꼭 필요하지 않다’가 2.3%를 차지했다. 여성은 ‘꼭 필요하다’ 64.9%, ‘하면 좋다’ 33.3%, ‘꼭 필요하지 않다’ 1.8% 순이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국가의 의료보장에 대한 기대가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45〉 국가의료보험-성별 교차분석

(단위: %)

		국가의료보험			전체
		꼭 필요하다	하면 좋다	꼭 필요하지 않다	
성별	남자	58.1	39.5	2.3	100.0
	여자	64.9	33.3	1.8	100.0

한편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국가 의료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50대 이상은 81.3%, 40대 68%, 30대 60%, 20대가 48.3%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국가의료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표 3-46〉 국가의료보험-연령별 교차분석

(단위: %)

		국가의료보험			전체
		꼭 필요하다	하면 좋다	꼭 필요하지 않다	
연령대	20대	48.3	51.7	0.0	100.0
	30대	60.0	36.7	3.3	100.0
	40대	68.0	28.0	4.0	100.0
	50대 이상	81.3	18.6	0.0	100.0

경제 수준별로 살펴보면 상층은 ‘하면 좋다’가 80%로 가장 높았으며, 중층은 ‘꼭 필요하다’가 74.2%로 가장 높았고, 하층은 ‘꼭 필요하다’가 48.4%, ‘하면 좋다’가 51.6%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의료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충분한 상층은 ‘하면 좋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층은 국가의료보장에 대한 기대와 의존도가 높아 ‘꼭 필요하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 수준 차이에 따른 집단별 평균 분석 결과 3점 만점을 기준으로 중층이 2.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하층 2.4점, 상층은 2.2점이었다.

〈표 3-47〉 국가의료보험-경제 수준별 교차분석

(단위: %)

		국가의료보험			전체
		꼭 필요하다	하면 좋다	꼭 필요하지 않다	
경제 수준	상	20.0	80.0	0.0	100
	중	71.9	25.0	3.1	100
	하	48.4	51.6	0.0	100

또한 국가의료보험의 필요성과 결혼 상태별로 교차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의료보험의 필요성에 87.5%가 응답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이혼 및 별거의 경우 83.3%, 배우자가 있는 경우 65.4% 순이었다.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는 꼭 필요하다에 47.1%가 응답해 가장 낮았다.

〈표 3-48〉 국가의료보험-결혼 상태별 교차분석

(단위: %)

		국가의료보험			전체
		꼭 필요하다	하면 좋다	꼭 필요하지 않다	
결혼 상태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다	47.1	52.9	0.0	10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었다(사실혼 포함)	65.4	32.7	1.9	100.0
	결혼하였으나 배우자가 사망하여 없었다	87.5	0.0	12.5	100.0
	이혼 또는 별거 중이었다	83.3	16.7	0.0	100.0

2. 의료보장 세금 추가 납부 의사

국가로부터 더 많은 의료보장을 받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 38.0%, ‘약간 그렇다’ 28%, ‘보통이다’ 26% 순이다. 부정적인 응답은 8%에 불과했다. 북한의 경우 무상치료의 원칙에 따라 제도적으로 무기여에 의한 보장을 추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의외의 결과이다. 이는 무상치료의 질적 수준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 추가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은 욕구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 나은 의료보장을 위한 세금 추가 납부 의사에 대해 성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대체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추가 납부 의사가 높았다.

〈표 3-49〉 의료보장 세금 추가 납부 의사-성별 교차분석

(단위: %)

		의료보장 세금 추가 납부 의사					전체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성별	남자	37.2	30.2	25.6	7.0	0.0	100.0
	여자	38.6	26.3	26.3	7.0	1.8	100.0

연령별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세금 추가 납부에 대해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률은 50대 이상이 50%, 40대 44%, 20대 34.5%, 30대가 30% 순으로 높았다. 경제 수준별 세금 추가 납부 의사에 대한 분석 결과 상층보다는 중하층에서 긍정적 답변이 더 높았다.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은 중층 39.1%, 하층 38.7%, 상층 20% 순이다. 경제 수준 차이에 대한 집단별 평균 분석 결과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의료보장 세금 추가 납부 의사가 높은 것이 더욱 분명해진다.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층이 4.1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층 3.9점, 상층은 3.8점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더 나은 의료보장 서비스를 위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의사는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 수준은 낮을수록 높았다. 이는 국가가 세금을 더 건더라도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책임지고 수행해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표 3-50〉 의료보장 세금 추가 납부 의사-연령별 교차분석

(단위: %)

		의료보장 세금 추가 납부 의사					전체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연령대	20대	34.5	31.0	31.0	3.4	0.0	100.0
	30대	30.0	36.7	26.7	6.7	0.0	100.0
	40대	44.0	12.0	28.0	12.0	4.0	100.0
	50대 이상	50.0	31.3	12.5	6.3	0.0	100.0

〈표 3-51〉 의료보장 세금 추가 납부 의사-경제 수준별 교차분석

(단위: %)

		의료보장 세금 추가 납부 의사					전체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경제 수준	상	20.0	40.0	40.0	0.0	0.0	100.0
	중	39.1	25.0	23.4	10.9	1.6	100.0
	하	38.7	32.3	29.0	0.0	0.0	100.0

마지막으로 의료보장 세금 추가 납부 욕구와 국가의료보험 욕구에 대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결과가 도출되었다. 국가의료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세금 추가 납부 의사 또한 높았다. 국가의료보험이 ‘꼭 필요하다’는 응답자 가운데 54.3%는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한 세금 추가 납부 의사로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국가의료보험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들은 의료보장 세금 추가 납부 의사에서도 모두 부정적으로 답했다.

〈표 3-52〉 의료보장 세금 추가 납부 -국가의료보험 욕구 교차분석

(단위: %)

		의료보장 세금 추가 납부					전체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국가 의료 보험	꼭 필요하다	54.8	19.4	19.4	4.8	1.6	100.0
	하면 좋다	11.1	44.4	38.9	5.6	0.0	100.0
	꼭 필요하지 않다	0.0	0.0	0.0	100	0.0	100.0

3. 의료비 부담

다음으로 “통일 후 귀하는 의료비를 누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거나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가와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되,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라는 응답률이 5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가와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되, 개인이 더 많이 부담한다’가 24%, ‘국가가 모두 부담한다’가 15%로 나타났다.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2%에 불과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국가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와 ‘국가와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되,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한다’에 대한 응답은 남성이 더 높았고, ‘국가와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되 개인이 더 많이 부담한다’는 여성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교차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국가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항목에는 3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가와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되,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한다’는 50대 이상, ‘국가와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되, 개인이 더 많이 부담한다’는 20대, ‘개인이 모두 부담한다’는 30대가 가장 높았다.

경제 수준별 응답 분포는 ‘국가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중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가와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되,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한다’에 대한 응답은 상층이 가장 많았으며, ‘국가와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되, 개인이 더 많이 부담한다’는 하층의 응답이 가장 높았다.

〈표 3-53〉 의료비 부담 주체에 대한 견해-성별 교차분석

(단위: %)

		의료비 부담 주체에 대한 견해				전체
		국가가 모두 부담	국가·개인 공동으로 부담하되 국가가 더 많이 부담	국가·개인 공동으로 부담하되 개인이 더 많이 부담	개인이 모두 부담	
성별	남자	16.3	60.5	20.9	2.3	100.0
	여자	14.0	57.9	26.3	1.8	100.0

〈표 3-54〉 의료비 부담 주체에 대한 견해-연령별 교차분석

(단위: %)

		의료비 부담 주체에 대한 견해				전체
		국가가 모두 부담	국가·개인 공동으로 부담하되 국가가 더 많이 부담	국가·개인 공동으로 부담하되 개인이 더 많이 부담	개인이 모두 부담	
연령대	20대	13.8	58.6	27.6	0.0	100.0
	30대	16.7	56.7	20.0	6.7	100.0
	40대	16.0	60.0	24.0	0.0	100.0
	50대 이상	12.5	62.5	25.0	0.0	100.0

〈표 3-55〉 의료비 부담 주체에 대한 견해-경제 수준별 교차분석

(단위: %)

		의료비 부담 주체에 대한 견해				전체
		국가가 모두 부담	국가·개인 공동으로 부담하되 국가가 더 많이 부담	국가·개인 공동으로 부담하되 개인이 더 많이 부담	개인이 모두 부담	
경제 수준	상	0.0	80.0	20.0	0.0	100.0
	중	17.2	60.9	18.8	3.1	100.0
	하	12.9	51.6	35.5	0.0	100.0

4. 정기검진의 필요성

정기검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았다. ‘꼭 필요하다’ 53%, ‘하면 좋다’가 43%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꼭 필요하지 않다’는 3%로 매우 낮았다. 예방의학을 원칙으로 하여 의사들이 담당 구역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의료지원 체계에 대한 기억과 경험이 정기검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인 것으로 판단된다. 성

별 분포의 특징은 여성이 ‘꼭 필요하다’가 59.6%로 남성의 44.2%에 비해 15.4%포인트 높았으며, ‘꼭 필요하지 않다’는 남성이 4.7%로 여성의 1.8%보다 2.9%포인트 높았다.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정기검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 평균 분석 결과 3점 만점 기준으로 50대 2.7점, 30대 2.6점, 20대와 40대가 2.4점으로 대체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정기검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다. 정기검진이 ‘꼭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 이상, ‘꼭 필요하지 않다’는 30대가 각각 차지했다. 한편 경제 수준별로 상층은 ‘하면 좋다’가 60%로 가장 높았으며, 중층은 ‘꼭 필요하다’가 56.3%로 가장 높았다. 하층은 ‘꼭 필요하다’와 ‘하면 좋다’가 각각 48.4%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3-56〉 정기검진의 필요성-성별 교차분석

(단위: %)

		정기검진의 필요성				전체
		꼭 필요하다	하면 좋다	꼭 필요하지 않다	무응답	
성별	남자	44.2	48.8	4.7	2.3	100.0
	여자	59.6	38.6	1.8	0.0	100.0

〈표 3-57〉 정기검진의 필요성-연령별 교차분석

(단위: %)

		정기검진의 필요성				전체
		꼭 필요하다	하면 좋다	꼭 필요하지 않다	무응답	
연령대	20대	44.8	55.2	0.0	0.0	100.0
	30대	63.3	30.0	6.7	0.0	100.0
	40대	40.0	52.0	4.0	4.0	100.0
	50대 이상	68.8	31.3	0.0	0.0	100.0

〈표 3-58〉 정기검진의 필요성-경제 수준별 교차분석

(단위: %)

		정기검진의 필요성				전체
		꼭 필요하다	하면 좋다	꼭 필요하지 않다	무응답	
경제 수준	상	40.0	60.0	0.0	0.0	100.0
	중	56.3	39.1	3.1	1.6	100.0
	하	48.4	48.4	3.2	0.0	100.0

5. 진료 병원

남한의 의료기관은 병상 수로 급수를 나누고 있으나 북한은 행정구역 별로 분류한다.⁸⁾ 1차 의료기관인 진료소를 비롯해 2차 의료기관인 시(군) 인민병원과 3차 의료기관인 도 인민병원으로 구분한다.⁹⁾ 그러나 1990년대 중반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며 기존 보건의료 전달체계는 제 기능을 상실했다. 3차 의료기관조차 의료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현실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미비한 부분을 장마당과 같은 시장경제의 사적 영역이 대신해 오고 있다.

병이 났을 때 어느 수준의 병원에서 진료받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평양 중앙병원’이 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차 의료기관인 시(군) 인민병원 27%, 1차 의료기관인 리·동 진료소 21%, 3차 의료기관인 도 인민병원 14%, 개인병원이 8%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8) 행정구역별 분류는 지방 도시(도·시·군·동/리)와 광역 도시(직할/특별시·구역·군·동/리)로 구분한다.

9) 북한보건성과 WHO 합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북한 보건의료기관은 총 8988개이며, 리 진료소 및 종합 진료소 6263개, 군 및 리 병원 1608개, 중앙 및 도급 병원 133개 등이 있다(WHO, 2016).

평양 중앙병원에 높은 기대치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3차 의료기관인 도 인민병원에 대한 진료 욕구는 평양 중앙병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다. 오히려 1차 의료기관인 리·동 진료소와 시(군) 2차 의료기관인 시(군) 인민병원에 대한 응답이 높은 것이 볼 수 있다.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은 평양중앙병원 32.6%, 시(군) 인민병원 30.2%, 리(동) 진료소 14%, 개인병원 11.6%, 도 인민병원 9.3%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평양 중앙병원과 리(동) 진료소가 26.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시(군) 인민병원 24.6%, 도 인민병원 17.5%, 개인병원 5.3% 순으로 나타났다. 평양 중앙병원에 대한 진료 욕구는 성별과 상관 없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평양 중앙병원을 제외하면 남성은 시(군) 인민병원을, 여성은 리(동) 진료소를 가장 선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리(동) 진료소는 지역사회와 밀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높은 장점이 있으며, 이러한 점이 높은 선호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도 인민병원의 선호도가 리(동) 진료소나 시(군) 인민병원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은 3차 의료기관에 속하는 도 인민병원부터는 1, 2차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 이송되는 입원환자의 치료만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체계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대별 응답 특징은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평양 중앙병원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진료기관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20대는 시(군) 인민병원, 30대는 평양 중앙병원, 40대는 도 인민병원, 50대 이상은 리(동) 진료소와 평양 중앙병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수준별로는 상층은 시(군) 인민병원, 중·하층은 평양 중앙병원을 가장 선호했다.

〈표 3-59〉 진료병원-성별 교차분석

(단위: %)

		진료병원						전체
		리(동) 진료소	시(군) 인민병원	도 인민병원	평양 중앙병원	개인 병원	기타	
성별	남자	14.0	30.2	9.3	32.6	11.6	2.3	100.0
	여자	26.3	24.6	17.5	26.3	5.3	0.0	100.0

〈표 3-60〉 진료병원-연령별 교차분석

(단위: %)

		진료병원						전체
		리(동) 진료소	시(군) 인민병원	도 인민병원	평양 중앙병원	개인 병원	기타	
연령대	20대	20.7	37.9	10.3	17.2	10.3	3.4	100.0
	30대	13.3	23.3	16.7	40.0	6.7	0.0	100.0
	40대	24.0	20.0	20.0	28.0	8.0	0.0	100.0
	50대 이상	33.3	20.0	6.7	33.3	6.7	0.0	100.0

〈표 3-61〉 진료병원-경제 수준별 교차분석

(단위: %)

		진료병원						전체
		리(동) 진료소	시(군) 인민병원	도 인민 병원	평양 중앙병원	개인 병원	기타	
경제 수준	상	20.0	40.0	0.0	20.0	20.0	0.0	100.0
	중	23.4	25.0	14.1	28.1	9.4	0.0	100.0
	하	16.1	29.0	16.1	32.3	3.2	3.2	100.0

6. 치매환자의 돌봄 방식에 대한 견해

보건복지부의 ‘최근 5년간 연도별· 시도별 65세 이상 치매질환자 현황’ 보고에 따르면 치매질환자의 수는 2012년에 54만 755명에서 2016년에 88만 5739명으로 약 27% 증가했다. 매년 증가세가 가파르다. 치매질환자는 전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며, 간병과 치료 등 의료비 부담 증가로 가족의 삶의 질을 급격히 하락시킨다. 최근 우리 사회의 고령화 심화와 더불어 치매환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문제가 개인 또는 가족 차원이 아닌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해법을 모색 중이다. 지역별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치매안심병원 설립, 치매의료비 건강보험 적용 등 지원제도 마련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은 치매환자를 어떻게 돌보고 치료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가족과 사회의 안정에 꼭 필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귀하는 가족 구성원 중에 치매환자가 있다면 어떻게 돌보겠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요양전문시설에서 돌보고 싶다고 답했다. ‘요양전문시설에 입원시켜 돌봄’이 53%, ‘가족이 직접 집에서 돌봄’ 32%,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돌봄’ 13% 순으로 높았다.

〈표 3-62〉 치매환자의 돌봄 주체

(단위: 건, %)

	빈도	퍼센트
가족이 직접 집에서 돌봄	32	32.0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돌봄	13	13.0
요양전문시설에 입원시켜 돌봄	53	53.0
기타	2	2.0
총계	100	100.0

성별 응답 분포는 ‘가족이 직접 돌봄’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5.1%포인트 높았으며,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돌봄’은 여성이 6.5%포인트 높았고, ‘요양전문시설에 입원시켜 돌봄’은 남성이 4.9%포인트 높았다.

연령대별 특징으로는 ‘가족이 직접 집에서 돌봄’은 50대 이상이 37.5%로 가장 높았고,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돌봄’은 20대가 17.2로 가장 높았다. ‘요양전문시설에 입원시켜 돌봄’은 40대가 64.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연령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 수준별 특징은 ‘가족이 직접 집에서 돌봄’에 대한 선호도는 상층 40%, 중층 32.8%, 하층 29%로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였다. 반면에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돌봄’은 상층 0%, 중층 12.5%, 하층 16.1%로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높았다.

〈표 3-63〉 치매환자 돌봄 주체-성별 교차분석

(단위: %)

		치매환자				전체
		가족이 직접 집에서 돌봄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돌봄	요양전문 시설에 입원 시켜 돌봄	기타	
성별	남자	34.9	9.3	55.8	0.0	100.0
	여자	29.8	15.8	50.9	3.5	100.0

〈표 3-64〉 치매환자 돌봄 주체-연령대 교차분석

(단위: %)

		치매환자				전체
		가족이 직접 집에서 돌봄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돌봄	요양전문 시설에 입원 시켜 돌봄	기타	
연령대	20대	34.5	17.2	48.3	0.0	100.0
	30대	36.7	16.7	46.7	0.0	100.0
	40대	20.0	8.0	64.0	8.0	100.0
	50대 이상	37.5	6.3	56.3	0	100.0

〈표 3-65〉 치매환자 돌봄 주체-경제 수준별 교차분석

(단위: 건, %)

		치매환자				전체
		가족이 직접 집에서 돌봄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돌봄	요양전문 시설에 입원 시켜 돌봄	기타	
경제 수준	상	40.0	0.0	60.0	0.0	100.0
	중	32.8	12.5	51.6	3.1	100.0
	하	29.0	16.1	54.8	0.0	100.0

제5절 소결

이 조사는 2015~2016년에 탈북하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하지만 모집단의 특성으로 인해 표집된 표본에서 함경북도와 양강도 두 지역의 편중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실제 북한 지역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정도 지역적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이 조사가 북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욕구를 파악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도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조사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교류협력과 통일 후 사회복지정책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응답자의 탈북 동기 중 ‘경제적 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통일 후 남한 지역의 노동시장 편입을 위해 북한 주민의 이주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만일 통일 후 일정 기간 남북한이 과도기 이중체제를 유지할 경우 취업을 위해 남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북

한 주민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의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중적 소득구조가 매우 뚜렷하다. 응답자의 60%가 공식소득이 전혀 없으며, 월평균 공식 소득은 1만 4579원으로 나타났다. 이 소득 수준은 북한 시장에서 쌀 약 3kg을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소득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공식 소득만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하기 때문에 응답자의 82%가 비공식 소득을 갖고 있다. 월평균 비공식 소득의 규모는 98만 3853원으로 공식 소득의 67배에 이른다. 비공식 소득의 출처는 대체로 밀수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텃밭, 되거리 장사 순서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중적 소득구조는 통일 이후에 사회복지 재정의 조달 및 규모를 정할 때 매우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 소득이 실질 소득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동시에 비공식 소득의 양성화 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본생활육구가 다원화되고 있다. 식생활 부분에서 4인 가족 기준 가구의 일주일 식량으로 평균 14.2kg을 원하며, 고기 및 과일 등 부식물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거주 유형에서는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을 선호하고 3칸 이상의 방이 있는 주택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이는 집단생활과 감시체제에서 살아온 북한 주민들에게 사적 공간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가 및 교육에 대한 욕구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일 후 이 분야의 북한 주민들의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근로환경 개선의 욕구와 함께 근로의지가 높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제도적 근로환경이 제공되지 않는 비공식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8시간 노동제'와 같은 법적 노동시간 보장에 대한 욕구가 강한 동시에 남북한이 통합된 노동시장에서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 초과근로는 물론 재교육 및 직업교육에 대한 참여의지가 높았다. 여성 근로자

의 경우 일-가정을 양립하기 위해 보육문제의 사회적 해결 필요성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에 통일을 대비하여 보육 인프라 확충과 재정 마련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통일 후에도 북한 지역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기대하는 월평균 가구 소득은 약 1200달러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소득 수준은 비록 현재 북한 주민의 공식·비공식 소득을 합한 것보다 약 8.5배 높은 것이지만, 현재 남한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희망하는 월평균 가구 소득의 절반(약 2800달러)에도 미치지 않는다. 북한 주민이 북한 지역에 거주하는 조건에서 기대하는 월평균 가구 소득은 향후 통일 대비 사회복지 재정 규모를 계상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실직자에 대한 국가의 기초생계 보장에 대한 높은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일 후 기초생계 보장을 위한 공적 부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국가의료보험체계에 대한 높은 욕구가 나타났다. 현재 북한은 제도적으로 무상의료를 표방하고 있지만 공공의료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사적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국가의 의료보장에 대한 높은 욕구로 표출되고 있다. 더욱이 열악한 의료 인프라 때문에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평양 중앙병원 이용에 대한 욕구가 강했다. 따라서 통일 후 지역의 의료시설의 개선이 시급하며, 평양 의료시설로의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 2 부

해외 조사

제4장 조사 개요

제5장 조사 결과 분석

제 4 장

조사 개요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응답자 분포의 특성

제1절 조사 개요

2017년 6월을 기점으로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3만 805명이며, 성별 입국 분포를 보면 여성이 3만 1914명으로 7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수를 한국 정부가 매년 분기별로 공개하는 것과는 달리, 현재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와 북한 주민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와 북한 주민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중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와 북한 주민 중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더더욱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중국에 체류 중인 북한 주민을 직접 면접조사한 내용을 기초로 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 말하는 북한 주민은 “남한이나 중국 등 제3국으로의 이주를 목적으로 탈북한 사람들이 아니라 식량 구입 및 장사를 위해 국경을 반복해 넘나드는 사람들과 중국 친지 방문을 위해 공식적으로 비자를 받고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강동완, 박정란, 2015, p. 9). 이들에 대한 직접 면접조사 방식의 연구는 북한의 변화상과 특히 북한 주민의 경제사회적 욕구를 살펴보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연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연이은 군사적 도발로 인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심화되면서,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한 북한당국의 감시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 특히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북

한 주민 혹은 탈북자에 대한 면접으로 인해 이들의 인적 사항이 밝혀질 경우 신변상 매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본 연구는 중국에 체류한 적이 있거나 체류하고 있는 북한 주민, 탈북자들과 많은 접촉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중국 내 북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육구를 간접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조사 결과 북한 주민들의 기본·소득·의료보장 육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조사는 2017년 6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실시되었다. 조사 대상은 중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혹은 체류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많이 접해 본 경험이 있는 중국 내 북한전문가들이 해당된다. 유효 표본 수는 30명이며, 남성과 여성의 응답자를 각각 15명씩 선발했다.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실시했으며, 조사 참여자들에게는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조사 결과를 통계 목적 외의 사용 금지와 비밀보장 원칙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으며, 모든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했다.

한편 본 연구는 중국 내 일부 북한전문가들을 통한 간접조사 방식이라는 점에서 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혹은 체류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통한 간접조사 방식 역시 현재 북한 주민들의 기본·소득·의료보장 육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본 조사 결과가 갖는 신뢰성의 문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본 조사에서 선정한 중국내 북한전문가들의 경우 실제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많이 있었으며, 훈장을 받았거나 현재 공직에 몸담은 이들도 있었다. 더욱이 이들의 교육 수준은 대체적으로 높았으며, 이들 중 일부는 현재 중국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과 함께 본 연구가 갖고 있는 조사 결과의 신뢰성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본 조사의 결과는 실제 국내 조사의 결과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일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조사 결과의 대표성이 제기될 수 있는 여지가 본 조사에서는 그 정도가 작다고 볼 수 있다. 즉 간접조사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을 많이 접해 본 경험에 있는 중국 내 북한전문가 30인을 통한 조사 결과는 훨씬 많은 수의 북한 주민들의 기본·소득·의료보장 욕구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조사 결과가 갖고 있는 신뢰성의 문제를 대표성의 문제로 보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더해 본 조사는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할 만한 성격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과거 북한에 거주할 당시의 북한에 대한 인식으로 현재의 북한을 평가 혹은 예견하는 데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의 문제에서 본 연구는 보다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현재 북한 주민들의 기본·소득·의료보장 욕구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 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실증적인 데이터라는 점에서 학문적·정책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응답자 분포의 특성

1. 성별 및 연령별 특징

본 조사에서는 성별을 변수로 하여 차이를 살펴보고자 남성과 여성의 응답 비율을 50%:50%로 정해 조사를 완료했다. 전체 연령대별 구성은 40대가 46.7%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3.3%, 50대 20% 순으로 30~50대가 주 연령층을 형성하고 있다.

〈표 4-1〉 성별 분포

(단위: 건, %)

	빈도	비율
남자	15	50
여자	15	50
전체	30	100

〈표 4-2〉 연령별 분포

(단위: 건, %)

	연령대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빈도	1	7	14	6	1	30
비율	3.3	28.3	46.7	20.0	3.3	100

2. 교육 수준 및 경제 수준

본 조사에 응답한 중국 내 북한전문가들의 교육 수준은 대학원 졸업자가 50%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대학 33.3%, 전문학교 16.7% 순이었다. 이렇듯 본 조사에 응답한 중국 내 북한전문가들의 교육 수준은

대체적으로 높았으며, 이들 중 일부는 현재 중국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본 조사에 응답한 중국 내 북한전문가들의 교육 수준이 높다는 것은 이들을 통한 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현재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특히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북한 주민들의 기본·소득·의료보장 욕구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본 조사에 응답한 중국 내 북한전문가들이 만나본 탈북자들의 경제 수준은 ‘하’가 56.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중’ 33.3%, ‘상’ 6.7%, ‘무응답’ 3.3%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여전히 중국에 체류한 적이 있었던 혹은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의 탈북 동기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3〉 교육 수준

(단위: 건, %)

	빈도	비율
대학원	15	50
대학	10	33
전문학교	5	16.7
전체	30	100

〈표 4-4〉 경제 수준

(단위: 건, %)

	빈도	비율
무응답	1	3.3
상	2	6.7
중	10	33.3
하	17	56.7
전체	30	100

3. 탈북 동기

국내 조사와 달리 중국 내 북한전문가들에 대한 간접조사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들이 만났던 탈북자들의 탈북 동기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내 북한전문가들이 만나본 탈북자들의 경제 수준은 매우 열악했다. 탈북자들의 경제 수준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통해 이들이 탈북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문제’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북한 경제가 수십 년에 걸친 국제적 고립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의 전반적 경제상황이나 일반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는 북한 당국의 노력보다는 시장화의 진전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더욱이 시장화의 진전과 함께 일반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되고 있지만, 그러한 정도는 계층과 지역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여전히 일반 주민들의 경제상황은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제적 문제’가 중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혹은 체류 중인 탈북자들의 탈북 동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은 탈북 시 누구를 동반했는가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0인 중 18인은 본인이 만나본 탈북자 중 60%가 탈북 시 동반 탈북자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점은 중국 내 북한전문가들이 만나본 탈북자 중에서 배우자(13.3%), 부모(13.3%), 자녀(20%)와 동반 탈북한 사람이 생각보다 비율이 낮다는 것이다. 그나마도 중국 내 북한전문가들은 그들이 만나 본 탈북자 중에는 형제자매(33.3%), 친구(16.7%)와 동반해 탈북한 사람들이 배우자, 부모, 자녀와 함께 탈북한 사람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이렇듯 최근 국내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의 탈북 동기는 자녀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을 주기 위한 ‘이민형’ 혹은 ‘유학형’ 탈북이 점차 증가 추세인 것과 달리, 중국 내 북한전문가들이 만나 본 중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혹은 체류 중인 탈북자의 경우에는 자녀 혹은 배우자와 함께 탈북을 하는 경향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은 중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혹은 체류 중인 탈북자들이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에게 돈을 벌어서 보내 주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들이 탈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표 4-5〉 동반 탈북자 유무

(단위: 건, %)

	빈도	비율
무응답	1	3.3
동반	18	60
동반하지 않음	11	36.7
전체	30	100

〈표 4-6〉 동반 탈북자 - 배우자

(단위: 건, %)

	빈도	비율
무응답	1	3.3
동반	4	13.3
동반하지 않음	25	83.3
전체	30	100

〈표 4-7〉 동반 탈북자 - 부모

(단위: 건, %)

	빈도	비율(%)
무응답	1	3.3
동반	4	13.3
동반하지 않음	25	83.3
전체	30	100

〈표 4-8〉 동반 탈북자 - 자녀

(단위: 건, %)

	빈도	비율
무응답	1	3.3
동반	6	20
동반하지 않음	23	76.7
전체	30	100

〈표 4-9〉 동반 탈북자 - 형제자매

(단위: 건, %)

	빈도	비율
무응답	1	3.3
동반	10	33.3
동반하지 않음	19	63.3
전체	30	100

〈표 4-10〉 동반 탈북자 - 친구

(단위: 건, %)

	빈도	비율
무응답	1	3.3
동반	5	16.7
동반하지 않음	24	80
전체	30	100

제 5 장

조사 결과 분석

제1절 기본육구

제2절 소득육구

제3절 의료보장육구

제4절 생활보장육구

제5절 소결

제1절 기본욕구

본 조사에서는 식생활과 관련된 기본욕구에 대해 2가지 조사문항을 통해 탈북자의 식생활에 관한 기본 욕구 수준을 파악하고자 했다. 국내 조사와 달리 2가지 조사문항만으로 현재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과 관련된 욕구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중국 내 북한전문가들을 통한 간접적인 조사 방식으로 식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욕구를 조사하는 것이 거꾸로 왜곡된 조사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부득이하게 본 조사에서는 기본적인 요구를 조사하는 것이 조사 취지에 부합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1. 식생활: 일주일 식량

북한 주민의 기본적 식생활 욕구를 조사하기 위해 4인 기준 한 가족이 충분히 먹는 데 일주일에 평균 얼마의 식량(kg)이 필요하냐고 질의한 결과, 30인의 평균값으로 8.37kg이 나왔다. 일주일에 평균 얼마의 식량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5kg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9명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7kg과 10kg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5명이었다. 3kg과 4kg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1명과 2명, 13kg, 15kg, 16kg, 20kg, 28kg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모두 1명씩이었다.

kg별 응답의 빈도수를 구간별로 구분하면 6~10kg 구간의 응답률이

43.3%로 가장 높았으며, 0~5kg 구간의 응답률은 40%로 나타났다. 반면 11~20kg 구간의 응답률은 13.3%, 21~40kg의 응답률은 3.3%에 불과했다. 이를 통해 간접적이거나 현재 북한 주민의 기본적 식생활 육구가 높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 결과가 사실 북한 주민들의 일주일 식량과 반드시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다. 현재 북한 주민의 기본적 식생활 육구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점은 이들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혜택받기를 기대하는 식량의 양이 많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다만 북한 주민의 기본적 식생활 육구가 높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는 추후 조사를 통해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표 5-1〉 식생활-일주일 식량

(단위: Kg, 건)

Kg	응답 수	Kg	응답 수	Kg	응답 수
3	1	7	5	16	1
4	2	10	5	20	1
5	9	13	1	28	1
6	3	15	1		

〈표 5-2〉 식생활-일주일 식량

(단위: 건, %)

구간 범위	빈도	비율
0-5kg	12	40.0
6-10kg	13	43.3
11-20kg	4	13.3
21-40kg	1	3.3
총계	30	100

제2절 소득욕구

본 조사에서는 9가지 범주의 14개의 조사문항을 통해 북한 주민의 소득과 관련된 욕구를 조사하였다. 본 조사에서 소득욕구와 관련해 조사한 9가지의 범주는 근로시간, 일자리 제공, 초과근무, 직업교육, 근로 시 자녀 보육문제, 사회보장비 징수, 월평균 생활비, 월평균 월급, 연금 가입 및 국가의 기초생활보장이다. 또한 근로시간, 직업교육, 월평균 생활비, 월평균 월급, 연금 가입 및 국가의 기초생활보장 부분은 해당 범주를 두 가지로 세분화해 조사를 진행했다.

1. 근로시간

북한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욕구를 조사하기 위해 북한 근로자가 하루 평균 몇 시간 일하기를 원하는가를 질의한 결과, 30인의 평균값으로 7.9시간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8시간 일하기를 원한다는 응답이 90%로 절대 다수가 선택했으며, 6시간과 10시간은 각각 6.7%, 3.3%에 불과했다. 이는 통일 이후 남북한 근로기준법의 통합 과정이 수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행 남한의 근로기준법에 의해 “1일 휴게 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49조)는 법정근로시간 기준을 북한 근로자도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남한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노동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북한 근로자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질의한 결과, 응답자 30인 중 17인이 매우 동의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1인에 불과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다음의 의미를 담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통일 이후 남북한 근로기준법 통합이 큰 어려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현행 남한의 근로기준법에서 ‘8시간 초과근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남한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보호조치이다. 그러나 ‘8시간 초과근무’의 제한 기준에 북한 근로자가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 근로자들의 노동 강도가 남한과 비교할 때 높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답변일 수 있다.

〈표 5-3〉 희망 근로시간

(단위: 건, %)

근로시간	빈도	비율
6시간	2	6.7
8시간	27	90
10시간	1	3.3
전체	30	100

〈표 5-4〉 8시간 노동시간 준수 여부

(단위: 건, %)

	빈도	비율
매우 동의할 것이다	17	56.7
약간 동의할 것이다	2	6.7
보통이다	10	33.3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1	3.3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0	0
전체	30	100

2. 일자리 제공

국가가 원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북한 근로자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30명 중 21명이 ‘매우 동의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5명은 ‘약간 동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북한 주민들 상당수가 국가로부터 배급을 거의 받지 못하고, 특히 직장으로부터 받는 급여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 주민은 한편으로 그들이 필요한 대부분의 물자를 장마당을 통해 얻고 있지만, 본 조사를 통해 다른 한편으로 직장으로부터 받는 급여로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싶은 바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 이나마 유추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북한 주민들이 시장을 통해 얻게 된 소득 중 상당 부분은 뇌물과 부수입의 형태로 권력을 가진 소수에게 이전되는 양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상당수 북한 주민들은 직접적인 불만을 표하지는 않지만, 내심 불만과 부당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무분별한 시장의 확대에 대해 당국의 통제가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들이 시장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언제든지 급감할 수 있다.

따라서 일자리 제공과 관련된 조사 결과는 북한의 시장화와 내부적 비리 및 부정부패 문제를 바라보는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5〉 일자리 제공(국가가 원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

(단위: 건, %)

	빈도	비율(%)
매우 동의할 것이다	21	70
약간 동의할 것이다	5	16.7
보통이다	3	10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1	3.3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0	0
전체	30	100

3. 초과근무

더 많은 노임(생활비)을 받기 위해 야근 또는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북한 근로자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다’가 응답자 30명 중 11명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어 ‘매우 동의할 것이다’가 10명, ‘약간 동의할 것이다’는 8명으로 뒤를 이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가는 다소 예견이 가능하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북한 근로자들 중 상당수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급여만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에 출근하는 것에 더해 장마당 등의 또 다른 경제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존을 위해 직장에 출근하는 것과는 별개로 장마당 등의 또 다른 사경제 활동에 치중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에게 있어서는 더 많은 노임(생활비)을 얻기 위해서는 연장근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 사안인 것이다.

초과근무에 대한 북한 근로자들의 동의 응답률이 높다는 사실은 북한 근로자들의 노동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동안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들이 사회주의 노동 강도에 익숙한 결

과 자본주의 노동 강도에 적응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북한 근로자들이 더 많은 노임(생활비)을 벌기 위해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호의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통일 이후 남북한 노동 분야의 통합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표 5-6〉 초과근무

(단위: 건, %)

	빈도	비율
매우 동의할 것이다	10	33.3
약간 동의할 것이다	8	26.7
보통이다	11	36.7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1	3.3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0	0
전체	30	100

4. 직업교육

북한 근로자가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 직업교육이나 재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가와 더불어 그들의 교육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질의를 했다. 먼저 북한 근로자가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 직업교육이나 재교육을 필요로 하는가를 확인한 결과, 응답자 30인 중 매우 필요하다는 견해가 15명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고, 약간 필요하다는 10명, 보통이다가 5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를 통해 현재 거의 대다수 북한 근로자가 더 나은 조건의 직장을 얻기 위해 직업교육 혹은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다수 북한 근로자가 더 나은 조건의 직장을 얻기 위해 직업교육 및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이유는 현재 자신들의 직장에서

받는 노임(생활비)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현재 북한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직장에 나가는 것과 별개로 장마당에서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음으로 실제 북한 근로자가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 직업교육이나 재교육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30인 중 약간 그렇다가 9명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매우 그렇다 7명, 보통이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가 각각 6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견해도 2명이 있었다. 이를 통해 북한 근로자가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 직업교육이나 재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직업교육이나 재교육에는 참여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 직업교육 혹은 재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 참여 의사가 그렇게 높지 않은 이유는 너무나 오랜 기간 북한 근로자들이 생계를 위해 거의 대부분의 생활비를 장마당을 통해 얻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현재 북한 근로자들은 직장 혹은 국가로부터 얻게 되는 생활비(노임)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표 5-7〉 직업교육의 필요성

(단위: 건, %)

	빈도	비율
매우 필요하다	15	50
약간 필요하다	10	33.3
보통이다	5	16.7
별로 필요하지 않다	0	3.3
전혀 필요하지 않다	0	0
전체	30	100

〈표 5-8〉 직업교육 참여 의사

(단위: 건, %)

	빈도	비율
매우 그렇다	7	23.3
약간 그렇다	9	30
보통이다	6	20
별로 그렇지 않다	6	20
전혀 그렇지 않다	2	6.7
전체	30	100

5. 근로 시 (미취학) 자녀 보육문제

북한 근로자가 미취학 자녀가 있을 경우 경제활동을 위해 자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30명 중 보육시설(탁아소,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보낸다는 응답이 23명으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조부모 또는 친인척에게 맡긴다 5명, 일을 그만두고 직접 돌본다와 무응답이 각각 1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기를 거치면서 북한의 보육서비스에서 사적 전달체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더해 보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 주민들이 보육서비스의 공적 전달체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이거나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조사 결과는 북한의 보육서비스에서 사적 전달체계가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이러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계층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북한의 시장화가 확대됨에 따라 계층별, 지역별 차이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교육 및 양육분야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표 5-9〉 근로 시 자녀의 보육문제

(단위: 건, %)

	빈도	비율
무응답	1	3.3
보육시설(탁아소,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보낸다	23	76.7
조부모 또는 친인척에게 맡긴다	5	16.7
일을 그만두고 직접 돌본다	1	3.3
전체	30	100

6. 사회보장비 징수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월 노임(생활비)에서 사회보장비를 의무적으로 징수하는 것에 대해 북한 근로자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30명 중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10명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매우 동의할 것이다와 약간 동의할 것이다가 각각 7명, 무응답이 1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3분의 1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사회보장비 징수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이유는 북한당국에 대한 북한 근로자의 신뢰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한편으로 북한 근로자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월 노임(생활비)에서 사회보장비를 의무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회보장비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5-10〉 사회보장비 징수

(단위: 건, %)

	빈도	비율
무응답	1	3.3
매우 동의할 것이다	7	23.3
약간 동의할 것이다	7	23.3
보통이다	5	16.7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10	33.3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0	0
전체	30	100

7. 월평균 생활비

북한 근로자가 월평균 얼마의 소득(생활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4인 기준 한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려면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하냐’고 질의한 결과, 30인의 평균값으로 565달러가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월평균 생활비로 300달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6명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200달러와 400달러라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5명, 500달러라고 응답한 사람은 4명, 100달러와 550달러라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2명으로 뒤를 이었다.

달러별 응답의 빈도수를 구간별로 구분하면 100~500달러 미만의 구간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00~1000달러 미만은 23.3%인 반면, 1000~2000달러 미만과 2000달러 이상은 각각 6.7%와 3.3%에 불과했다. 그러나 북한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월평균 생활비는 실제 이들이 직장에서 받는 노임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일례로 2015년 기준으로 개성공단의 평균 임금이 141.4달러이며, 이 가운데 40% 내외를 떼고 60%를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 근로자

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월평균 생활비는 결코 적은 수치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월평균 생활비가 생각보다 높은 이유는 이들이 장마당으로부터 벌어들이는 부수입이 직장에서 받는 노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현재 상당수 북한 근로자들은 형식적으로 직장에 출근하고, 실제로는 장마당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이다.

〈표 5-11〉 월평균 생활비

(단위: 건, %)

	빈도	비율
\$100	2	6.7
\$200	5	16.7
\$250	1	3.3
\$300	6	20
\$400	5	16.7
\$450	1	3.3
\$500	4	13.3
\$550	2	6.7
\$800	1	3.3
\$1500	1	3.3
\$1600	1	3.3
\$2000	1	3.3
전체	30	100

〈표 5-12〉 월평균 생활비 - 범위

(단위: 건, %)

구간 범위	빈도	비율
\$500 미만	20	66.7
\$500-1000 미만	7	23.3
\$1000-2000 미만	2	6.7
\$2000 이상	1	3.3
총계	30	100

8. 월평균 월급

북한 근로자가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서 산다면 직장에서의 월평균 얼마의 노임(생활비)을 받는 것이 적정한가를 조사한 결과, 30인의 평균값으로 508달러가 나왔다. 보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300달러를 노임으로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10명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고, 500달러 5명, 600달러 3명, 200달러와 400달러가 각각 2명으로 뒤를 이었다.

달러별 응답의 빈도수를 구간별로 구분하면 100~500달러 미만이 5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00~1000달러 미만 26.7%, 100달러 미만이 6.7%였으며, 1000~1500달러 미만과 1500~2000달러 미만, 그리고 2000달러 이상은 각각 3.3%에 불과했다.

북한 근로자가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서 산다고 할 때 월평균 월급으로 508달러를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는 답변은 이 질문 바로 전에 북한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생활비와 관련된 조사 결과가 의미하는 바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받고 있는 노임보다 통일 이후 훨씬 높은 수준의 월급을 원하는 이유는 이들이 현재 장마당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북한 근로자가 통일 이후 북한에 거주한다고 할 때 월평균 월급으로 508달러를 받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는 답변에는 현재 이들이 직장에서 받고 있는 노임과 장마당으로부터 벌어들이는 부수입, 여기에 통일 이후 북한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13〉 월평균 월급

(단위: 건, %)

	빈도	비율
\$50	2	6.7
\$150	1	3.3
\$200	2	6.7
\$250	1	3.3
\$300	10	33.3
\$330	1	3.3
\$400	2	6.7
\$500	5	16.7
\$600	3	10
\$1200	1	3.3
\$1700	1	3.3
\$3000	1	3.3
전체	30	100

〈표 5-14〉 월평균 월급 - 범위

(단위: 건, %)

구간 범위	빈도	비율
\$100 미만	2	6.7
\$100-\$500 미만	17	56.7
\$500-\$1000 미만	8	26.7
\$1000-\$1500 미만	1	3.3
\$1500-\$2000 미만	1	3.3
\$2000 이상	1	3.3
총계	30	100

9. 연금 가입 및 국가 기초생계보장

노년기를 대비해 연금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북한 근로자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30명 중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10명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매우 동의할 것이다’ 9명, ‘약간 동의할 것이다’와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가 각각 4명으로 뒤를 이었다.

연금 가입과 관련해 주목할 부분은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과 ‘매우 동의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특히 3분의 1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노년기를 대비해 연금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유는 현재 북한 주민이 북한당국을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에 응답자 30명 중 9명이 연금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매우 동의한 이유는 이들이 만나 본 탈북자들이 북한당국으로부터 연금 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한편 국가가 실직자의 기초 생계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북한 근로자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30명 중 ‘매우 동의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24명으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약간 동의할 것이다’ 4명, ‘보통이다’와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가 각각 1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현재 북한 근로자들이 실직당할 경우에 당국과 직장으로부터 기초생계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상에 대한 불만 혹은 아쉬움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15〉 연금 가입

(단위: 건, %)

	빈도	비율
매우 동의할 것이다	9	30
약간 동의할 것이다	4	13.3
보통이다	3	10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10	33.3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4	13.3
전체	30	100

〈표 5-16〉 국가 기초생계보장

(단위: 건, %)

	빈도	비율
매우 동의할 것이다	24	80
약간 동의할 것이다	4	13.3
보통이다	1	3.3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0	3.3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1	0
전체	30	100

제3절 의료보장욕구

본 조사에서는 3개의 조사문항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의료보장욕구를 조사하였다. 본 조사에서 의료보장욕구와 관련 조사한 3개의 조사문항은 의료비용 부담, 치매환자 요양, 국가의료보험 가입과 관련된 문제이다.

1. 의료비용 부담

현재 북한 주민은 국가의료보험에 대해 매우 강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의 내용은 본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는데, 특히 본 조사에서는 국가의료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북한 근로자가 병원을 이용할 경우 의료비용을 어떻게 하는 것을 선호하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물음에 응답자 30명 중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16명으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국가와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되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14명으로 뒤를 이었다. 개인이 의료비용의 전액을 부담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없었다.

〈표 5-17〉 의료비용 부담

(단위: 건, %)

	빈도	비율
국가가 모두 부담	16	53.3
국가와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 (다만 국가가 더 많이 부담)	14	46.7
개인이 모두 부담	0	0
전체	30	100

2. 치매환자 요양

북한 근로자의 가족 구성원 중에 치매환자가 있을 경우에 치매환자를 어떻게 요양하는 것을 선호하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응답자 30명 중 요양전문시설에 입원시켜 돌본다는 응답이 12명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가족이 직접 집에서 돌본다 11명,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집에

서 돌본다가 6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를 통해 북한에서도 치매환자의 요양과 관련해 요양전문시설과 간병인의 역할이 남한만큼은 아닐지라도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18〉 치매환자 요양

(단위: 건, %)

	빈도	비율
가족이 집에서 돌본다	11	36.7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돌본다	6	20
요양전문시설에 입원시켜 돌본다	12	40
기타	1	3.3
전체	30	100

3. 국가의료보험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북한 근로자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30명 중 매우 동의할 것이라는 응답이 11명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10명으로 그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약간 동의할 것이다 4명, 보통이다 3명,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2명으로 뒤를 이었다.

국가의료보험 가입과 관련해 주목할 부분은 전체 응답자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12명이 국가의료보험 가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이다. 이는 현재 북한 주민이 북한당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5-19〉 국가의료보험

(단위: 건, %)

	빈도	비율
매우 동의할 것이다	11	36.7
약간 동의할 것이다	4	13.3
보통이다	3	10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10	33.3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2	6.7
전체	30	100

제4절 생활보장욕구

본 조사에서는 2개의 조사문항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보장욕구를 살펴해보았다. 다만 생활보장욕구와 관련해 조사한 2개의 조사문항은 구조화된 문항이 아닌 응답자 개인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1. 생활보장 필요 요소

통일 이후 안정적 생활보장을 위해 북한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는 질문은 구조화된 문항이 아닌 응답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방식이었다. 그 결과 매우 다양한 견해가 제기됐다. 가장 대표적인 생활보장 필요 요소로 제기된 견해로는 경제 원조 및 지원, 일자리, 최저생활비 지급, 기초생필품의 안정적 공급, 무차별, 보육시설 확충, 사회보장 및 사회안전, 높은 수준의 월급, 식량의 안정적 공급, 실업보험 및 건강보험, 안정된 직장, 안정된 소득, 의식주 해결, 문화교육 등이 있었다.

본 조사를 통해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안정적 생활보장을 위해 확인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가 대부분 경제적 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조사에 응한 응답자는 통일 이후 북한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의식주, 경제, 일자리, 안정적 직장과 소득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다만 소수의 견해임에도 불구하고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 간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2. 북한 지역 거주를 위한 인센티브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이 남한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북한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데 어떠한 인센티브가 가장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 역시 구조화된 문항이 아닌 응답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한 결과, 매우 다양한 견해가 제기됐다. 북한 주민의 북한 지역 잔류를 유도하는데 거론된 대표적 인센티브로는 경제적 지원, 거주환경 개선, 남한과 비슷한 급여 지급, 상권 보장, 대외 개방, 교통수단 개선, 남한과 비슷한 급여 및 평등한 경제 기준, 남한 기업의 북한 투자, 무상급식, 무상의료, 민주화, 식량, 의식주, 인권, 일국양제 등이 제기됐다.

본 조사를 통해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북한 지역 잔류를 유도하는데 가장 필요하다고 제기된 인센티브에서 거의 대부분이 경제적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조사에 응한 응답자는 생활보장 필요 요소와 마찬가지로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북한 지역 잔류를 유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인센티브가 일자리, 경제적 지원이라는 데 대다수가 견해를 같이했다. 또한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개선이 북한 주민의 북한 지역 잔류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제5절 소결

본 조사는 통일된 상황을 가정하여 현재 북한 주민들의 기본·소득·의료보장욕구를 중국에 체류한 적이 있거나 체류 중인 탈북자 혹은 북한 주민들과 많은 접촉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중국 내 북한전문가들에 대한 간접조사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식생활욕구는 생각보다 높지 않다. 북한 주민 4인 가족이 충분히 먹는 데 일주일에 8.37kg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수치는 국내 조사에서 현재 북한이탈주민 4인 기준 한 가족이 충분히 먹는 데 일주일에 14.2kg을 원하는 것에 비해 매우 적은 수치이다.

1990년대 심각한 경제난 이후 북한 주민에게 있어서 먹는 문제는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적은 수치가 나온 것은 북한 주민이 북한당국으로부터 공식적인 배급을 거의 사실상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북한 주민의 소득욕구는 대체적으로 높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북한 근로자는 평균 8시간 정도의 근무를 하길 원했다. 흥미로운 점은 더 많은 노임(생활비)을 벌기 위해 초과근무도 마다하지 않으며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 직업교육이나 재교육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여 사회보장비 징수와 연금 가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비 징수와 연금 가입에 동의하는 비율은 높지 않았다. 이 점은 북한당국에 대한 북한 근로자의 신뢰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의료보장욕구에 있어서 국가 역할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비용 부담에 있어서 국가가 개인보다 더 많

이 부담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있지만, 국가 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응답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았는데, 이 점은 북한당국에 대한 북한 근로자의 신뢰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치매환자 요양에 있어서는 남한만큼은 아닐지라도 요양전문시설과 간병인의 역할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생활보장육구에 있어서는 경제적 부분의 중요성이 매우 높았다. 통일 이후 안정적 생활보장을 위해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것과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을 북한 지역에 잔류시키는 데 필요한 인센티브로 중요한 것이 공통적으로 경제적 부분이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의 조사 결과가 갖고 있는 학문적·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북한의 실상과 북한 주민들의 욕구를 조사한 연구 결과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그동안 탈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혹은 심층면접을 통해 살펴본 북한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다. 즉 변화된 북한의 실상을 과거에 북한을 탈북해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기억을 통해 조사한 연구 결과가 갖고 있는 신뢰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조사는 최근까지 중국에 체류한 적이 있거나 체류 중인 탈북자 혹은 북한 주민들과 많은 접촉을 해본 경험이 있는 중국 내 북한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확인해보고 북한 주민들의 욕구를 조사했다는 점에서 북한 연구가 갖고 있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의 문제를 일정 부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그동안 탈북자 설문 혹은 심층면접에 기초한 조사가 북한의 변화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의 정착 실태에 치우친 결과, 실제 북한 주민의 기본·소득·의료보장 욕구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일부 북한전문가와 사회복지사들을 통해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의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북한의 실상에 대한 실증적 조사 없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본 조사 결과는 최근 북한의 변화와 그러한 변화가 북한 주민들의 기본·소득·의료보장 욕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실증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셋째, 남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對)북한 (인도적) 지원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향후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남한의 대북한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현재 북한 주민들의 기본·소득·의료보장 욕구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현재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등 제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기본적 욕구와 사회복지적 요구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조사는 바로 이러한 남한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한 (인도적) 지원과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공여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는 국내 최초로 현재 북한 주민들의 기본·소득·의료보장 욕구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학문적·정책적 의의를 갖고 있다. 특히 본 조사는 ‘국가 신뢰도’라는 구조적 변인에 주목한다. 본 조사를 국가 신뢰도라는 구조적 변인에 기초하여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은 유의미한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첫째,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 역할과 국가의료보험 가입에 상반된 견해는 국가 신뢰도라는 구조적 변인이 복지욕구와 관련하여 상당한 영향력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은 사회주의체제의 일반적 특징과 관련되며, 국가의료보장 가입은 국가 신뢰도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다.

둘째, 국가 신뢰도라는 구조적 변인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부정적 태도는 결국 북한 주민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집단성보다는 개별성을 강조하는 경향성을 가짐을 보여준다.

셋째, 북한 주민의 소득육구에 대한 강한 의지나 생활보장에 대한 경제적 부분의 중요성은 위에서 언급된 북한 주민의 이러한 경향성을 잘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남북한 통합에 대한 이분적 사고방식(집단성과 개별성)에 기초하여 남북한 통합문제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기술하는 기존 입장들에 반하여, ‘국가 신뢰도’의 하락에 따른 북한 주민의 개별성 경향화는 통일 이후 남북한 통합에 있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섯째, 현재 북한의 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가 주도식 해석이 지배적이다. 물론 이 부분도 시장 활성화에 대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북한 주민의 개별성 경향화도 이 현상의 주요 변인으로 자리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처럼 본 조사의 연구 결과는 통일 이후 남북한의 사회복지 통합 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실증적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조사 결과는 남한 정부의 대북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제 6 장

결론

제1절 연구 요약
제2절 정책적 함의

제1절 연구 요약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복지 수준의 파악과 통일 이후 복지 수요의 예측을 위해 실시한 본 조사는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연구물이다. 유사한 연구 조사로 남북하나재단이 매년 실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실태조사와 사회통합조사가 있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실시하는 북한 사회 변동 조사가 있지만, 두 조사 모두 실태파악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복지욕구를 조사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확률적 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지 못하여 표본의 대표성의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보다 정교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한 대규모 연구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조사는 더 나은 삶과 생활을 지향하는 인간의 욕구(needs)에 기반하여 북한 주민들의 사회복지 전반의 욕구 충족 수준과 이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사회적 여건 형성을 위해 진행되었다. 따라서 처음으로 시도된 통일 대비 복지욕구 실태조사는 적지 않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실태조사와는 질적으로 다른 결과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각 분야별 분석을 통해 나타난 특징과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조사에 임한 국내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본 조사에 참여한 성별 구성은 여성 57%, 남성이 43%를 차지하며, 전체 연령대별 구성은 30대가 30%로 가장 많고 20대 29%, 40대 25% 순으로 20~40대가 주 연령층을 형성한다. 본 조사는 최근 북한 주민의 복지욕구

에 초점을 맞춰 2015년 이후 탈북과 입국한 직행 탈북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기에 대체로 탈북과 입국에 소요된 기간이 짧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근의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후 입국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시기별로 점차 짧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탈북의 경우 입국까지 평균 3.82개월 걸렸고, 2016년 탈북의 경우엔 2.63개월 소요되어 1개월 이상 줄어든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중국-라오스-태국을 경유하여 입국하였다. 탈북 동기는 여전히 경제적 문제가 가장 우세했으나, 가족을 찾거나 자녀 문제 등 가족 관련 이유로 탈북한 경우가 점차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강하게 나타났으며 남성은 경제적 문제가, 여성은 가족 문제가 탈북 동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탈북 전 최종 출신 지역으로는 탈북 여건이 수월한 국경지역이 87%를 차지한다. 교육 수준은 전문대학교 및 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가 34%를 차지하여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북한 거주 당시 직업으로는 '노동자'가 29%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부양' 21%, '사무원' 11%, '농장원' 10%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는 공식 소득원과 비공식 소득원을 동시에 갖는 이중적 직업체계가 일반적이며, 공식 소득보다는 비공식 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이 확인된다. 응답자의 40%만이 공식 소득원을 갖고 있었으며, 그 두 배가 넘는 82%가 비공식 소득원이 있었다. 또한 공식 평균 소득은 1만 4579원에 불과했으나, 비공식 평균소득은 98만 3853원으로 그 차이가 컸다. 비공식 직업으로는 '밀수'가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텃밭' 23.1%, '되거리' 15.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북한 거주 당시 응답자의 혼인 상태는 52%가 결혼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었으며, 34%는 결혼한 적이 없었고, 14%는 사망·이혼·별거

로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거주 당시 함께 살았던 가족 수는 평균 2.3명으로 가족 수 3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상과 같은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배경으로 욕구별 분석의 유의미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생활욕구의 분석 결과는 첫째, 응답자는 4인 기준 한 가족의 일주일 식량으로 평균값 14.2kg을 원하고 있으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식량에 대한 높은 욕구 수준을 보였다. 식량 이외에 고기 및 과일, 다과 등의 부식물에 대해서도 높은 욕구 수준을 보였다. 북한의 경제난 이후 먹는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이며 주식 이외의 부식물에 대한 욕구가 높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둘째, 응답자의 다수는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을 선호하고, 방 3칸 이상의 규모 있는 주택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택을 선택할 때 주택의 크기가 가장 큰 고려요인이며, 차순위로 난방, 위생, 근접성과 편의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10대 생활용품 중에서는 휴대폰을 가장 필요로 하는 항목으로 선택하였고, 냉장고, TV, 컴퓨터, 세탁기 순으로 필요성을 나타내어 생활 필수적 가전제품에 대한 선호를 보였다.

셋째, 응답자는 다른 기본욕구에 비해 현저하게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가를 즐길 만한 삶의 여유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하며 일상적인 여가생활(극장, 경기장, 유흥장, 낚시 등)보다는 간헐적이어도 자유로운 여행(1년에 1번 이상, 2~3일간)을 더 필요로 하였다.

넷째, 응답자의 대다수는 자녀교육에 대해 높은 욕구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고등교육(대학교 이상)을 모두 지향하고 있었으며, 사교육에 대해서도 욕구 수준이 높았다. 자녀교육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계층 간 자유

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믿음은 모든 연령대와 직업군, 소득 수준에서 동일하게 교육육구로 나타났다.

다섯째, 응답자의 사회관계에 관한 육구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격동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친구의 필요성 혹은 필요한 친구 수에 대해 중도적인 육구 수준을 보였으나, 연령별로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과거의 공동체적 관계를 지향하고 나이가 어릴수록 집단보다는 개인적 관계를 선호하는 현상이 공존하고 있었다. 여섯째, 응답자의 사회관계 중 결혼에 대한 육구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에 대한 기대와 육구 수준은 연령이 낮을수록 더욱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일곱째, 통일 후 거주지 선택의 중심 요인은 고향과 가족이라는 공동체적 육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일 이후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에 의해 북에서 남으로 인구의 이동현상이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은 고향, 가족, 친척이라는 가족공동체와 부모, 형제 및 자매, 자녀 등 혈연관계 중심의 삶을 중심에 놓고 생활하고자 하는 기본육구가 강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근로육구에 관한 유의미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환경의 개선에 대한 육구가 표출되었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현재 공식 직업 외에 비공식적 직업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제도적 노동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장시간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통일 후에 적정 노동시간으로 '8시간'을 선택하였으며, '1일 8시간 노동'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근로에 대한 높은 의지를 지니고 있다. 법적 노동시간 보장에 대한 육구와는 별도로 낮은 경제 수준에 처해 있는 현실적 요구로 인해 추가 소득의 필요성 때문에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매우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셋째, 통일 후 재교육과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참여

의지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통일 후 남북한의 노동시장이 통합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북한 주민은 취업을 위해 재교육과 직업교육이 당연한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응답자의 재교육과 직업교육에 대한 참여 의지가 높게 나타난 것은 매우 긍정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사회적 약자가 노동시장에서 우대되는 것에 대해 높은 포용력을 보였다. 다만, 사회적 약자의 유형에 따라 응답 격차를 보였는데 유자녀 가족과 한부모 가족의 취업 우대보다는 장애인과 영예군인의 취업 우대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북한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문제 해결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다.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육아에서 여성의 부담은 매우 크다. 통일 후 북한 여성이 경제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보육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며,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위해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통일을 대비하여 보육 인프라 확충과 재정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사회보장비 의무 징수에 대한 수용력은 높은 편이나 직업의 차이에 따라 수용태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공적 부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응답자의 경우 사회보장비 의무 징수에 대해 높은 수용 태도를 보인 반면, 사적 부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용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통일 후 사회보험의 직장 가입자보다는 지역 가입자의 수용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소득보장욕구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북한 주민은 현재보다는 통일된 사회에서 더 높은 소득이 보장되기를 기대하나, 남한 사회보다 더 높은 소득 수준을 바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는 통일 후 기대하는 소득 수준은 약 1200달러로 현재 평균 소득(약

140달러)보다 8.5배 더 높았다. 하지만 통일 후 북한 지역에서 거주할 때 필요한 월평균 가구소득(약 1200달러)은 현재 남한 사회에서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행복감을 충족할 수 있는 월평균 가구소득(약 2800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통일 후에도 북한에서 거주할 때 직장에서 받고자 하는 1인당 급여(임금) 수준은 평균 약 930달러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는 통일 후 북한 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규모와 최저임금 수준을 예측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둘째, 대체소득 대비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높은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유형에 따라 응답 태도의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필요성을 공감하는 수준은 저축>공적 연금>사적 보험 순서로 나타났으며, 남한 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축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사적 보험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낮은 신뢰감 때문에 필요성도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생계 불안을 항시적으로 느끼는 북한 주민들은 사회보장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높은 욕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가 실직자들의 기초생계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낮은 지지도를 보였다. 이 조사 결과는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이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정책을 요구하면서도 사회보장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저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의료보장욕구를 국가의료보장에 대한 기대,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 가입 희망 여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위한 세금 추가 납부 의사, 의료비 부담, 정기적 건강검진 필요성, 진료 희망 병원의 형태, 치매환자 간병 등에 대한 욕구로 범주화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주민은 국가의료보험에 대해 매우 강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국가의 의료보장에 대한 기대가 다소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국가의료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한편 경제 수준별로는 중층이 가장 높았으며, 하층, 상층 순으로 필요성을 느꼈다. 국가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집단은 여성, 50대, 중층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가로부터 더 많은 의료보장을 받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왔다. 성별의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대체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추가 납부 의사가 높았다. 추가 납부 의사에 대해 상층보다는 중·하층이 더 높게 나타났다. 경제 수준 차이에 대한 집단별 평균 분석 결과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의료보장을 위한 세금 추가 납부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세금 추가 납부 의사가 가장 높은 집단은 여성, 50대 이상, 중층이다.

셋째, 의료비는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거나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가 부담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은 집단은 남성, 30대, 중층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기검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았다. 북한의 의료체계가 예방의학을 원칙으로 하며, 의사들이 담당 구역을 방문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의료지원 체계를 경험한 것이 정기검진을 통한 질병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정기검진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집단은 여성, 50대, 하층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병이 났을 때 진료받고 싶은 병원으로는 연령별, 성별과 상관없이 평양 중앙병원이 가장 높게 나타나, 북한 주민들의 평양 중앙병원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3차 의료기관인 도 인민병원에 대한 진료욕구는 평양 중앙병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다. 오히려 1

차 의료기관인 리·동 진료소와 시(군) 2차 의료기관인 시(군) 인민병원에 대한 응답이 더 높았다. 평양 중앙병원을 제외하면, 남성은 시(군) 인민병원을, 여성은 리(동) 진료소를 가장 선호하였다. 리(동) 진료소는 지역사회와 밀접한 곳에 위치해 접근성이 높은 장점이 있으며, 이러한 점이 높은 선호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진료기관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20대는 시(군) 인민병원, 30대는 평양 중앙병원, 40대는 도 인민병원, 50대 이상은 리(동) 진료소와 평양 중앙병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제 수준별로는 상층은 시(군) 인민병원, 중하층은 평양 중앙병원을 가장 선호했다.

여섯째, 치매환자는 전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며, 간병과 치료 등 의료비 부담 증가로 가족의 삶의 질을 급격히 하락시킨다. 최근 우리 사회의 고령화 심화와 더불어 치매환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문제가 개인 또는 가족 차원 아닌 사회와 국가가 차원에서 해법을 모색 중이다. 지역별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치매안심병원 설립, 치매의료비 건강보험 적용 등 지원제도 마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요양전문시설에서 돌보고 싶다고 답했다.

환자의 돌봄 방식의 경우 ‘집에서 가족이 직접 돌봄’이 여성보다 남성이 5.1%포인트 높았으며,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돌봄’은 여성이 6.5%포인트 높았고, ‘요양전문시설에 입원시켜 돌봄’은 남성이 4.9%포인트 높았다. 연령대별 특징으로는 ‘가족이 직접 집에서 돌봄’은 50대 이상이 가장 높았고,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돌봄’은 20대가 가장 높았으며, ‘요양전문시설에 입원시켜 돌봄’은 4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 연령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가족이 직접 집에서 돌보는 것은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했고,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돌봄은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하락했다.

제2절 정책적 함의

통일이라는 가상의 상황을 전제하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복지욕구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분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몇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남녀평등권법’, ‘노동법’, ‘사회주의교육체제’, ‘배급제 및 공급제 실시’, ‘여가와 문화생활’, ‘무상치료제’ 등 법적·제도적으로 남한 사회와 비교하여 우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와 현재의 실태는 매우 큰 간극이 존재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명시적으로 강조하는 제도와 주민생활의 실재를 구분하여 북한 주민의 복지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제도의 폐기, 제도의 수정, 제도의 활용 및 지속이라는 관점에서 북한 주민의 욕구 수준에 부합하고 통일 이후 남북한의 통합적 사회보장제도를 법적·제도적으로 고찰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북한에서 강조하는 제도의 취약성 문제 이외에도 제도 밖의 주민 복지실태를 연속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관한 복지욕구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집계하는 것이 요구된다. 의식주 기본생활에 관한 복지욕구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실태조사를 통해 정보를 채득하고 변화 추이를 쫓아가고 있지만, 그 밖의 노동, 교육, 의료 부문의 복지욕구는 파악조차 더딘 실정이다.

예를 들어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새로운 사실은 북한 주민들이 소득 증가를 위해 높은 근로의욕을 보이는 만큼 개인 소득에 대한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저축, 사회보장비 의무징수, 사회보장정책의 필요성 등에 긍정적 답변을 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인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북한의 시장화 이후 주민 개개인의 소득 발생과 부의 축적이

이루어져 주민들이 국가 시혜적 사회보장제도를 ‘개인의 안전망’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정한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변화이다. 북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변화를 복지욕구 데이터로 집계하는 것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셋째, 잠재적 복지욕구의 수준이 높으며, 욕구와 욕망이 혼재된 상태에서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의 복지욕구 분출에도 대비해야 한다. 분야별로 보면 현재 북한 주민의 기본생활은 생계보장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저수준의 욕구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기본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층 사다리로서 자녀교육과 사교육에 매우 높은 욕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하지만 기본 생활에 대한 욕구 중에는 ‘사적 욕망’이 잉태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식량을 비롯한 식생활에 관한 욕구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주택 유형은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을 선호하고, 생활용품 중에서는 휴대폰을 가장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연령이 젊을수록 결혼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통일에 대한 기대가 ‘개인적인 것의 자유로운 보장’, ‘높은 소비 수준의 향상과 보장’을 암시한다. 잘못된 통일에 관한 사인(Sign)은 통일 이후 혼란스러운 사회현상을 가증시킨다는 점에서 욕구 수준에 대한 밀도 있는 분석과 사회적 교육을 연계해야 한다.

넷째, 북한 주민의 복지욕구 중 국가 의존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 영역에 대해서는 통일 이후 사회통합의 측면에서도 사전적 준비작업이 요구된다. 본 조사에서는 일자리 제공,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한 보육문제 해결, 실직자의 기초생계 보장, 국가의료보험 및 의료비 부담과 관련된 항목에서 국가가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응답이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에게 북한 사회주의의 관성이

남아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통일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한 국가 의존성이 지속된다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통일 대비 복지욕구 조사에 근거한 남북한 사회복지 분야의 종합적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오늘날 북한 사회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가와 시장의 관계 속에서 시장의 영역은 나날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북한 주민의 사회와 제도, 국가에 대한 인식이 점차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결과 본 조사에서 나타난 분야별 복지욕구의 수준은 응답자 개개인의 경제적 소득 수준에 따라 응답지형이 변화하고 있으며, 욕구 수준이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까지 응답 분포의 범위가 넓게 나타나고 있다. 특정하여 욕구 수준이 높다거나 낮다고 정의할 수 없으며, 평균값을 도출하여도 평균값 이외의 분포가 넓게 퍼져 있어 개개인의 욕구 수준을 통계로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북한 주민의 복지욕구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기초한 남북한 간의 협력 및 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총체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종합적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이의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여섯째, 북한 주민의 사회복지 실태 파악은 물론 사회복지욕구 수준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시계열적 자료의 축적을 위해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북한 사회는 시장화와 정보화로 인해 급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의 수요와 욕구가 다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사회복지욕구 조사가 일회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년간 꾸준히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관련 자료가 축적되었을 때 정책적 활용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 강은주. (2017). 북한의 주거정책과 주택매매 양상. 월간북한, 546, 72-78.
- 강동완, 박정란. (2016). 사람과 사람: 김정은 시대 '북조선 인민'을 만나다, 부산: 너나드리.
-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 (1988). 소아과전서 3-1.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건강보험제도 개요. <http://nhis.or.kr>에서 2017. 8. 9. 인출.
- 국토교통부. (2014). 2014년 주거실태조사.
- 남세진, 조흥식. (1995). 한국사회복지론. 나남.
- 남진욱. (2017). 2016년 북한경제 동향 관련 통계자료. 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1월호, 한국개발연구원, 61-81.
- 데일리NK. (2016. 5. 26.). 北, '이익금 7%' 사회보험료 납부.
- 데일리NK. (2017. 10. 30.). 北 장마당 동향. <http://dailynk.com/korean/market.php>에서 2017. 10. 30. 인출.
- 머니투데이. (2017. 7. 14.). 10년 제재에도 끄떡없다? 북한경제 미스터리.
- 문형표, 이지혜. (2013). 남북한 통일 시 연금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KDI 북한경제리뷰, 8월호, 29-67.
- 박영자. (2012). 체제변동기 북한의 계층·세대·지역 균열. 한국정치학회보, 46(5), 한국정치학회, 169-205.
- 박현선. (2003). 현대 북한사회와 가족. 파주: 한울 아카데미.
-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20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법. http://www.nktech.net/nk_tech/tech-law/tech_law_v.jsp에서 2017. 7. 16. 인출.
- 북한정보포털. (197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노동법. www.unilaw.go.kr/Index.do에서 2017. 7. 16. 인출.
- 북한정보포털. (20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www.unilaw.go.kr/Index.do에서 2017. 7. 16. 인출.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2017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김정은 정권 5년, 북한사회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2017 북한주민의식 사회변동 조사결과 발표 및 토론회 자료집(2017. 8. 30.).
- 이석기, 임강택, 임을출, 권태진, 양문수, 이석 등. (2017). 2016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7년 전망. 산업연구원.
- 이정희. (2014). 일·가족 양립 문제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고찰. 여성연구, 86(1), 281-324.
- 임현진, 정영철. (2007). 북한의 체제전환과 사회정책의 과제: 비교시각, 통일과 정에서의 사회정책과제-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통일학 기초연구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 이태진, 임완섭, 강신욱, 김태완, 여유진, 최현수 등. (2014). 2014년 복지육구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용석, 정은미, 박명규, 김경민. (2016). 북한사회변동 2015: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장용석, 정은미, 정근식, 김경민. (2017). 북한사회변동 2016: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장인숙, 신효숙, 권은성, 백민지, 윤설아, 왕영민 등. (2017a). 2016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남북하나재단.
- 장인숙, 신효숙, 권은성, 백민지, 윤설아, 왕영민 등. (2017b). 2016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
- 정영철, 장인숙, 조은희. (2011). 북한 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대석, 장인숙. (편). (2015). 북한의 시장화와 정치사회 균열. 선인.
- 통일교육원. (편). (2013). 북한지식사전. 통일교육원.
- 통일부. (2017). 주요사업 통계 (2017년 6월 말 기준). www.unikorea.go.kr/unikiorea/business/statistics에서 2017. 10. 9. 인출.
- Bourdieu, P. (2005). 구별짓기 (하) (최종철 역). 새물결(원서출판 1979).
- Central Bureau of Statistic and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 (2015).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4*.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2017).
Food Outlook 2017. <http://www.fao.org/giews/reports/food-outlook/en/>에서 2017. 10. 30. 인출.
- Maslow, A. H.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4), 370-396.
- Maslow, A. H. (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 World Food Programme (WFP). (2017). *WFP DPR Korea Country Brief*.
 August. 2017. <http://documents.wfp.org/stellent/groups/public/documents/ep/wfp276263.pdf>에서 2017. 9. 20. 인출.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16). *Country Cooperation Strategy: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4-2019*.

부록1. 국내 조사 설문지

통일 대비 복지욕구조사

조사표 ID		

안녕하십니까?

대진대학교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로부터 연구용역을 위탁받아 '통일 대비 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통일 이후 예상되는 북한 주민의 복지 수요 및 욕구를 파악하여 연구 자료를 생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의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해 통계 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응답은 귀중한 연구 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6월

연구책임자: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소성규 교수

<문의 및 연락처>

조사수행 010-***-****/0000 010-***-****

동의함 ☐

(이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하시면 ☐ 안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응답자 기본 정보〉

[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Q2] 귀하의 출생 연도는 언제입니까?

()년

[Q3] 귀하는 언제 북한을 마지막으로 떠나셨습니까?

(년 월)

[Q4] 귀하는 언제 한국에 들어오셨습니까?

(년 월)

[Q5] 귀하의 하나원 기수는 몇 기입니까?

()기

[Q6] 귀하가 탈북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경제적 문제 ② 정치적 이유
③ (이미 탈북한) 가족 ④ 자녀 문제
⑤ 기타()

[Q7] 탈북 후 귀하가 거친 국가는 어디입니까? 해당 국가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중국 ② 라오스 ③ 미얀마 ④ 태국 ⑤ 베트남 ⑥ 몽골
⑦ 러시아 ⑧ 일본 ⑨ 기타 ()

[Q8] 귀하가 북한을 나오기 직전에 살았던 거주지는 어디였습니까?

- | | | |
|--------|--------|--------|
| ① 평양 | ② 남포 | ③ 라선 |
| ④ 개성 | ⑤ 청진 | ⑥ 함흥 |
| ⑦ 혜산 | ⑧ 강계 | ⑨ 신의주 |
| ⑩ 사리원 | ⑪ 해주 | ⑫ 원산 |
| ⑬ 평안북도 | ⑭ 평안남도 | ⑮ 함경북도 |
| ⑯ 함경남도 | ⑰ 양강도 | ⑱ 자강도 |
| ⑲ 황해북도 | ⑳ 황해남도 | ㉑ 강원도 |

[Q9] 탈북 직전에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졸업/재학/중퇴 포함)

- | | |
|-----------------|---------------|
| ① 대학원 | ② 대학 |
| ③ 전문학교 | ④ 중학교(고급, 초급) |
| ⑤ 소학교 | ⑥ 무학 |
| ⑦ 기타 () | |

[Q10] 귀하는 북한에 계실 당시 당원(후보당원 포함)이었습니까?

- | | |
|-----|-------|
| ① 예 | ② 아니오 |
|-----|-------|

[Q11] 귀하는 탈북하기 1년 전 기준으로 북한에서 가지고 있었던 공식적인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적만 걸어두고 활동을 하지 않았던 직업도 포함됩니다.

- | | | |
|------------------|-------|------------------|
| ① 유급 당일군 또는 행정일군 | ② 군인 | ③ 노동자 |
| ④ 사무원 | ⑤ 교원 | ⑥ 농장원(협동농장/국영농장) |
| ⑦ 해외 파견 일군 | ⑧ 봉사원 | ⑨ 의사 · 간호원 · 약사 |

- ⑩ 사법검찰 · 보안원(안전원) ⑪ 문화예술체육인 ⑫ 학생
⑬ 연로보장(은퇴자) ⑭ 부양 ⑮ 기타()

[Q12] 탈북하기 1년 전 기준으로 공식직업 이외에 소득이 있는 경제활동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는지 모두 표시해주세요.

- ① 장마당 소매 장사 ② 음식장사
③ 되거리 장사 ④ 편의봉사(수선, 수리, 이미용, 목욕탕, 여관 등)
⑤ 운수(씨비차, 버스운행 등) ⑥ 공업생산(수공업 포함)
⑦ 텃밭·패기밭 등 ⑧ 샅별이
⑨ 거간꾼(데꼬) ⑩ 밀수(밀무역)
⑪ 돈장사(외화 환전 포함) ⑫ 기타()

[Q13] 귀하는 북한에서 '8.3노동자'('8.3조')로 일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Q13-1]로 이동) ② 없다

[Q13-1]

(1) 귀하는 '8.3노동자'('8.3'조)로 얼마나 오랫동안 일하셨습니다?

()개월

(2) 귀하는 '8.3노동자'('8.3'조)로 일할 때 월평균 얼마를 벌었습니까?

북한돈()원

[Q14] 탈북하기 1년 전을 기준으로 귀하가 공식 직장에서 받은 월 노임(생활비)은 얼마였습니까? 없었던 경우에는 0원으로 표기해 주세요.

북한 돈 ()원

[Q15] 탈북하기 1년 전 기준으로 귀하가 공식 직장 외에 소득이 있는 경제활동이 있으셨다면 월평균 얼마를 버셨습니까? 현물이었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산했을 때 대략 얼마 정도였는지를 써주세요. 달러나 위안으로 버셨다면 북한돈으로 환산하여 적어주세요.

북한 돈()원

[Q16] 북한에 살고 있을 당시 귀하 가정의 경제 수준은 북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 ② 중 ③ 하

[Q17] 귀하는 탈북하기 직전의 혼인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였습니까?

- ① 한 번도 결혼한 적 없었다.
- ②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었다.
- ③ 결혼하였으나 배우자가 사망하여 없었다.
- ④ 리혼 또는 별거 중이었다.
- ⑤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었다.

[Q18] 귀하는 탈북하기 직전에 함께 살았던 가족은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본인 포함)

()명

[Q18] 귀하는 탈북하기 직전에 미취학(0세~6세) 자녀가 있었습니까?

- ① 예 ()명 ② 아니오

※ 모든 질문은 귀하가 북한에 거주하고 있을 때 남북한이 통일이 되었다는 가정하에서 응답해주세요.

□ 기본생활욕구

〈식생활〉

1. 귀하의 가족(4인 기준)이 충분히 먹는 데 일주일에 평균 얼마의 식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입쌀 ()kg
2. 귀하는 고기나 생선을 얼마나 자주 먹기를 원하십니까?
① 매일 ② 주 3회 ③ 주 1회 ④ 월 1회 이상 ⑤ 원하지 않는다
3. 귀하는 신선한 과일을 얼마나 자주 먹기를 원하십니까?
① 매일 ② 주 3회 ③ 주 1회 ④ 월 1회 이상 ⑤ 원하지 않는다
4. 귀하는 차, 커피, 아이스크림, 과자 등을 얼마나 자주 먹기를 원하십니까?
① 매일 ② 주 3회 ③ 주 1회 ④ 월 1회 이상 ⑤ 원하지 않는다
5. 귀하는 가족들과 함께 음식점(식당)에서 얼마나 자주 식사하길 원하십니까?
① 주 1회 이상 ② 월 1회 이상 ③ 연 1회 이상 ④ 원하지 않는다

〈주거생활〉

6. 귀하는 어떤 주택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① 단독주택 ② 연립주택 ③ 아파트 ④ 기타()

6-1. 귀하가 원하는 주택의 방의 수는 몇 개입니까? () 개

7. 아래에 제시된 사항들 중 귀하가 주택을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 순위(1~5위)를 적어주세요.

〈순위〉

⑦주택의 크기나 방의 수

㉒ 난방과 온수 시설

④수세식 화장실과 목욕 시설

④학교, 공공기관, 시장 등과의 근접성

④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이용 편리성

8. 귀하가 난방을 위하여 사용하기 원하는 원료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석유 ② 가스 ③ 전기 ④ 연탄 ⑤ 기타 ()

9. 귀하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해 주
 으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임대주택 제공

② 주택 매매자금 융자(빌려줌)

③ 주택 개보수

④ 월임대료 지원

⑤ 거주주택 주변 환경개선

⑥ 기타()

10. 다음 중 아래에 제시된 생활용품 구입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밝혀주세요.

가. 세탁기

①꼭 필요하다

②있으면 좋다

③꼭 필요하진 않다

나. 전자레인지(오븐 포함)

①꼭 필요하다

②있으면 좋다

③꼭 필요하진 않다

다. 냉장고

①꼭 필요하다

②있으면 좋다

③꼭 필요하진 않다

라. 김치냉장고

①꼭 필요하다

②있으면 좋다

③꼭 필요하진 않다

마. 정수기

①꼭 필요하다

②있으면 좋다

③꼭 필요하진 않다

바. 휴대폰

①꼭 필요하다

②있으면 좋다

③꼭 필요하진 않다

사. TV

①꼭 필요하다

②있으면 좋다

③꼭 필요하진 않다

- | | | | |
|----------------|---------|---------|------------|
| 아. 진공청소기 | ①꼭 필요하다 | ②있으면 좋다 | ③꼭 필요하진 않다 |
| 자. 컴퓨터(노트북 포함) | ①꼭 필요하다 | ②있으면 좋다 | ③꼭 필요하진 않다 |
| 차. 자동차 | ①꼭 필요하다 | ②있으면 좋다 | ③꼭 필요하진 않다 |

〈여가 생활〉

11. 귀하는 종종 가족들과 함께 여가생활(극장, 경기장, 유흥장, 낚시 등)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꼭 필요하다 ② 하면 좋다 ③ 꼭 필요하지는 않다
12. 귀하는 가족들과 함께 1년에 1번 이상 2~3일 정도의 여행을 다녀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꼭 필요하다 ② 하면 좋다 ③ 꼭 필요하지는 않다

〈자녀 교육〉

13. 귀하는 자녀에게 고등교육(대학교 이상)을 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꼭 필요하다 ② 하면 좋다 ③ 꼭 필요하지는 않다
14. 귀하는 자녀에게 사교육(학교수업 외 개인강습)을 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꼭 필요하다 ② 하면 좋다 ③ 꼭 필요하지는 않다

〈사회관계〉

15. 귀하는 ‘어려울 때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웃이나 친구가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꼭 필요하다 ② 있으면 좋다 ③ 꼭 필요하지는 않다

15-1. (15. 질문의 ①과 ② 응답자만) 귀하는 어려울 때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웃이나 친구가 몇 명이나 필요하십니까?
()명

16.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반드시 해야 한다 ② 하는 편이 좋다 ③ 꼭 할 필요는 없다

〈사회 이동〉

17. 귀하가 만일 통일 후 북녘에 계속 거주한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직업(경제활동 포함) ② 교육 ③ 가족 또는 친척
④ 생활환경 ⑤ 건강 ⑥ 고향에 대한 애착
⑦ 사회보장 ⑧ 주택(살림집) ⑨ 기타()

18. 귀하가 만일 통일 후 남녘으로 이주한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취업 ② 교육 ③ 결혼 ④ 생활환경
⑤ 장사/사업 ⑥ 건강 ⑦ 헤어진 가족 ⑧ 기타()

□ 근로욕구

19. 귀하는 하루 평균 몇 시간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시간

20. 귀하는 '하루 8시간 노동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동의한다 ② 약간 동의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1. 귀하는 '국가는 원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동의한다 ② 약간 동의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2. 귀하는 '더 많은 노임(생활비)을 받기 위해 야근 또는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동의한다 ② 약간 동의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3. 귀하는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 직업교육이나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약간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24. 귀하는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 직업교육이나 재교육을 받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 ① 매우 있다 ② 약간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없다 ⑤ 전혀 없다

25. 귀하는 아래에 제시된 사람들이 직장 채용에서 우대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	장애인	①매우 동의 ②약간 동의 ③보통 ④별로 동의하지 않음 ⑤전혀 동의하지 않음
나.	영예 군인	①매우 동의 ②약간 동의 ③보통 ④별로 동의하지 않음 ⑤전혀 동의하지 않음
다.	유자녀 가족	①매우 동의 ②약간 동의 ③보통 ④별로 동의하지 않음 ⑤전혀 동의하지 않음
라.	한부모 가정	①매우 동의 ②약간 동의 ③보통 ④별로 동의하지 않음 ⑤전혀 동의하지 않음

26. 귀하는 미취학 자녀가 있을 경우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자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보육시설(탁아소,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보낼 것이다.
- ② 조부모 또는 친인척에게 맡기겠다.
- ③ 아이를 돌볼 보모를 고용하겠다.
- ④ 이웃집에 맡기겠다.
- ⑤ 일을 그만두고 직접 돌보겠다.

27. 귀하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월 노임(생활비)에서 사회보장비를 의무적으로 징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동의한다 ② 약간 동의한다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소득보장욕구

28. 귀하는 통일 후 북한지역에서 산다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월평균 얼마의 소득(생활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달러
29. 귀하는 통일 후 북한 지역에서 산다면 직장에서 월평균 얼마의 노임(생활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달러
30. 귀하는 저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꼭 필요하다 ② 하면 좋다 ③ 꼭 필요하지는 않다
31. 귀하는 노년기를 대비해 연금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꼭 필요하다 ② 하면 좋다 ③ 꼭 필요하지는 않다
32. 귀하는 개인이 가입하는 보험(종신보험, 생명보험, 보장성 보험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꼭 필요하다 ② 하면 좋다 ③ 꼭 필요하지는 않다
33. 귀하는 ‘국가는 실직자의 기초 생계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견해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동의한다 ② 약간 동의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4. 귀하는 '사회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견해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동의한다 ② 약간 동의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의료보장욕구

35. 귀하는 아프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꼭 필요하다 ② 하면 좋다 ③ 꼭 필요하지는 않다
36. 귀하가 만일 아프시다면 어디에서 먼저 진료받기를 원하십니까?
- ① 리(동) 진료소 ② 시(군) 인민병원
 ③ 도 인민병원 ④ 평양 중앙병원
 ⑤ 개인 병원 ⑥ 기타 ()
37. 귀하는 의료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가가 모두 부담
 ② 국가와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되 국가가 더 많이 부담
 ③ 국가와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되 개인이 더 많이 부담
 ④ 개인이 모두 부담
38. 귀하는 가족 구성원 중에 치매환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가족이 직접 집에서 돌본다
 ②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돌본다

- ④ 기타 ()

39. 귀하는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꼭 필요하다 ② 그러면 좋다 ③ 꼭 필요하지는 않다

40. 귀하는 국가로부터 더 많은 의료보장을 받기 위해서 세금을 더 낼 의사가 있으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부록2. 해외 조사 설문지

통일 대비 복지욕구조사

조사표 ID		

안녕하십니까?

대진대학교는 ‘통일 대비 복지욕구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중국 내 북한전문가를 대상으로 북한 주민의 복지 수요 및 욕구를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의 응답 내용은 대한민국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해 통계 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응답은 귀중한 연구 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6월

연구책임자: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소성규 교수

동의함 ☐

(이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하시면 ☐ 안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응답자 기본 정보〉

[Q1]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Q2] 선생님의 출생 연도는 언제입니까?

()년

[Q3] 선생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 ① 대학원 ② 대학 ③ 전문학교 ④ 중학교(고급, 초급)
⑤ 소학교 ⑥ 무학 ⑦ 기타 ()

[Q4] 선생님이 만났던 탈북자들의 경제 수준이 대체로 북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 ② 중 ③ 하

[Q5] 선생님이 만났던 탈북자들은 동반한 사람이 있었습니까?(복수 응답 가능)

- ① 배우자 ② 부모 ③ 자녀 ④ 형제자매 ⑤ 친구 ⑥ 없다 ⑦ 기타()

※ 모든 질문은 선생님이 남북한이 통일이 되었다는 가정하에서 응답해주세요.

1. 선생님은 북한 주민의 가족(4인 기준)이 충분히 먹는 데 일주일에 평균 얼마의 식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입쌀 ()kg

2. 선생님은 북한 근로자가 하루 평균 몇 시간 일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
3. 선생님은 ‘하루 8시간 노동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북한 근로자가 어떻게 생각할 것으로 보십니까?
① 매우 동의할 것이다 ② 약간 동의할 것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⑤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4. 선생님은 ‘국가가 원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북한 근로자가 어떻게 생각할 것으로 보십니까?
① 매우 동의할 것이다 ② 약간 동의할 것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⑤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5. 선생님은 ‘더 많은 노임(생활비)을 받기 위해 야근 또는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북한 근로자가 어떻게 생각할 것으로 보십니까?
① 매우 동의할 것이다 ② 약간 동의할 것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⑤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6. 선생님은 북한 근로자가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 직업교육이나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약간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7. 선생님은 북한 근로자가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 직업교육이나 재교육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약간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8. 선생님은 북한 근로자가 미취학 자녀가 있을 경우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자녀를 어떻게 할 것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 ① 보육시설(탁아소, 유치원 등)에 보낸다.
② 조부모 또는 친인척에게 맡긴다.
③ 아이를 돌볼 보모를 고용한다.
④ 이웃집에 맡긴다,
⑤ 일을 그만두고 직접 돌본다.
9. 선생님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월 노임(생활비)에서 사회보장비를 의무적으로 징수하는 것에 대해 북한 근로자가 어떻게 생각할 것으로 보십니까?
- ① 매우 동의할 것이다 ② 약간 동의할 것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⑤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10. 선생님은 북한 근로자가 통일 후 북한 지역에서 산다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월평균 얼마의 소득(생활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달러

11. 선생님은 북한 근로자가 통일 후 북한 지역에서 산다면 직장에서 월 평균 얼마의 노임(생활비)을 받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달러
12. 선생님은 노년기를 대비해 연금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북한 근로자가 어떻게 생각할 것으로 보십니까?
① 매우 동의할 것이다 ② 약간 동의할 것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⑤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13. 선생님은 ‘국가가 실직자의 기초 생계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북한 근로자가 어떻게 생각할 것으로 보십니까?
① 매우 동의할 것이다 ② 약간 동의할 것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⑤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14. 선생님은 북한 근로자가 병원을 이용할 경우 의료비용을 어떻게 하는 것을 선호할 것으로 보십니까?
① 국가가 모두 부담
② 국가와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되 국가가 더 많이 부담
③ 국가와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되 개인이 더 많이 부담
④ 개인이 모두 부담
15. 선생님은 북한 근로자가 가족구성원 중에 치매환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을 선호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가족이 직접 집에서 돌본다.
②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돌본다.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